www.mogef.go.kr

제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

2011~2015. 7.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차 례

Ⅰ. 서 문 7

Ⅱ. 협약의 이행 11

제 1 부

제1조(차별의 정의) 13

제2조(당사국의 의무) 14

A. 제정된 법률 14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4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 15

B. 개정된 법률 15

양성평등기본법 15

형 법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

근로기준법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22

C. 정책 ····· 22
법조인 대상 심포지엄 및 교육 ····· 22
제3조(2조의 실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 ····· 23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확산 ····· 23
성인지 예산의 확대 및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 23
국가 성평등지수 개발 및 공표 ····· 24
성평등한 개발원조사업을 위한 국제협력 ····· 25
제4조(적극적 조치) ····· 26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한 법적 조치 ····· 26
여성의원 공천할당제 ····· 27
공공부문 여성인재 역량강화 지원 ····· 27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 28
제5조(사회문화적 행동양식의 변화) ····· 28
성범죄 친고죄 폐지 ····· 28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 29
성폭력범죄자 재발 방지 강화 ····· 30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성과 ····· 30
이주여성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31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 31
아동성범죄 수사체계 개선을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31
다양한 방법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노력 : 교육 · 시상 · 홍보 ····· 32
공공기관 및 사업장의 성희롱 방지조치 내실화 ····· 33
제6조(여성인신매매와 성매매 금지) ····· 35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 35
외국인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 37

제 2 부

제7조(국가의 정치 및 공적 영역에서의 평등) ····· 38
여성공무원 비율 ····· 38
여성 판·검사 현황 ····· 38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 38
공공기관 여성비율 ····· 39
교원의 여성 비율 확대 ····· 39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 40

제8조(대표성) ····· 40
외교 분야 여성 진출 ····· 40
국제기구 진출 ····· 41

제9조(국적) ····· 41

제 3 부

제10조(교육) ····· 42
여학생 고등교육 참여율 향상과 전공의 다양화 ····· 42
여대생 커리어개발 지원 사업 ····· 42
초·중등교육 양성평등성 강화 ····· 43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 43

제11조(고용) ····· 4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 44
생애주기에 따른 일하는 여성 지원정책 ····· 45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강화 ····· 47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 참여 확대 ····· 48
결혼이주여성·여성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 49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확산을 위한 노력 ····· 50
유연근무 확산 : 근로시간과 장소 선택권 강화 ····· 52
차별적 고용관행 지도·점검 강화 및 시정조치 ····· 53

제12조(건강) ····· 54
초기 임산부 건강관리 강화 ····· 5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 55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 55
분만 취약지역 공공형 산부인과 확대 ····· 56
여성건강 현황 조사 ····· 56
여성의 생식건강 강화 ····· 57
HIV/AIDS 확산 방지 ····· 57
여성의 우울증·자살 등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지원 ····· 57
노령여성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 확대 ····· 58

제13조(경제사회적보장) ····· 59
한부모가족 복지 확대 ····· 59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 서비스 ····· 59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 60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 요건 완화 ····· 60
저임금 노령여성의 건강·사회서비스 제공 ····· 61
여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 61

제14조(농어촌 여성) ····· 61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 변화 ····· 61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62
농어촌 새일센터 운영 ····· 62
농어업종사 여성의 역량 강화 ····· 62

제 4 부

제15조(법) ····· 64

제16조(혼인과 가족생활) ····· 64

형법상 간통죄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의한 간통죄 폐지 ····· 64

부 록 65

부록 Ⅰ.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 97

부록 Ⅱ. 표 1 ~ 표 49

|표 1| 성별영향 분석평가 추진 기관 및 과제 현황 ····· 76
|표 2| 지방 성인지예산 추진 실적 현황 ····· 76
|표 3| 국가 성평등지수 수준 추이 ····· 76
|표 4| 대한민국 UN Women 기여금 공여현황 ····· 77
|표 5|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 77
|표 6| 여성 지방정치(단체장, 의회의원) 참여 비율 ····· 77
|표 7| 여성 국회의원 비율 ····· 78
|표 8|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현황 ····· 78
|표 9| 성폭력 범죄 수사단서별 증감률 ····· 78
|표 10|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전체피해자) ····· 79
|표 11|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현황 ····· 79
|표 12|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 79
|표 13|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 80
|표 14| 상담소 및 보호시설 국비 지원현황 ····· 80
|표 15|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및 다누리콜센터 상담실적 ····· 80
|표 16| 이주여성쉼터 입소 현황 ····· 81
|표 17|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연도별 설치현황 ····· 81
|표 18| 성매매피해청소년 교육 및 관리 실적 ····· 81
|표 19| 성매매상담소 지원 실적 ····· 82

| 표 20 | 구조지원 사업 운영실적 ····· 82
| 표 21 | 국가직 여성공무원 현황 ····· 82
| 표 22 | 지방직 여성공무원 현황 ····· 82
| 표 23 | 여성 판·검사 현황 ····· 82
| 표 24 |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 83
| 표 25 | 전문·관리직 여성비율 ····· 83
| 표 26 | 공립학교 여성교장·교감 현황 ····· 83
| 표 27 | 대학 여교수 비율 ····· 83
| 표 28 | 학교급별 진학률 ····· 84
| 표 29 | 외교부 여성 직원 비율 추이 ····· 84
| 표 30 | 전공분야별 대학교 학생 분포 ····· 85
| 표 31 | K-Girls' Day 여학생 기술체험 프로그램 실적 ····· 85
| 표 32 | K-Girls' Day 여학생 기술체험 프로그램 참여 학생 인식 조사결과 ····· 86
| 표 33 | 여성과 경제활동 ····· 86
| 표 34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추이 ····· 87
| 표 35 |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임금 지원 실적 ····· 87
| 표 36 | 경력단절여성고용촉진지원 운영실적 ····· 87
| 표 37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실적 ····· 88
| 표 38 | 연도별 육아휴직 급여지원 실적 ····· 88
| 표 39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신규등록현황 ····· 88
| 표 40 | 차별적 고용관행 및 지도·점검 실적 ····· 88
| 표 41 | 임신 주수별 유산·사산 보호휴가 일수 ····· 89
| 표 42 | 신규 HIV/ AIDS 신고 현황 ····· 89
| 표 43 | HIV/AIDS 검진 및 상담 실적 ····· 89
| 표 44 | 성별 우울증 환자 현황 ····· 89
| 표 45 | 성별 장기요양 실인원 현황 ····· 90
| 표 46 | 연도별 아동양육비 등 지원 현황 ····· 90
| 표 47 | 연도별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실적 ····· 90
| 표 48 | 국민연금 가입자 연도별 현황 ····· 91
| 표 49 |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연령별/성별 수급 현황 ····· 91

Ⅰ. 서 문

Ⅰ 서 문

1. 제8차 이행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5년 7월 기간 중 대한민국이 중점 추진한 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해소 및 양성평등 노력, 특히 여성의 경제참여 활성화에 대한 성과를 포괄하고 있다. 그동안은 다양한 법제도를 만들어 여성정책의 토대를 닦고 남녀의 지위 차별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 성평등이 현실 생활의 원리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장애를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생애주기별 정책, 경력단절 예방 및 해소, 장애인과 이주여성을 위한 고용정책, 유연근무제도 확산 정책 등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정책이 여성에 한정되지 않고 남성과 사회 전체에 스며들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 가족친화기업, 가족사랑의 날 등의 제도를 시행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3. 이에 2014년에는 1995년 제정되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개정하여 법의 목적을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실현' 및 '양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로 전환시키고 모든 국민이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 법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남녀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또한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의 인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여성의 신고가 필요한 친고죄 조항 폐지하였고 성범죄 재범 방지, 아동과 장애인 2차 피해 방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5. 이 보고서는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집필하였다. 국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여성정책을 정리하였고 보고서 초안 작성 후 여성 · 인권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정 · 보완하였다.

Ⅱ. 협약의 이행

Ⅱ 협약의 이행

제 1 부

➲ 제1조(차별의 정의)

6. 대한민국 헌법은 차별과 관련하여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31조 제1항(교육의 기회균등), 제32조 제4항(여성근로자의 보호 및 부당한 차별의 금지),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약 90여개의 개별 법률에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 구제조치 등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시되어 있다.

7.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차별행위를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재화 · 용역 · 교통수단 · 상업시설 · 토지 ·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 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그리고

성희롱(2011.5.19. 개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8.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에서의 차별을 정의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의 직접적인 차별과 "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의 간접적인 차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2007년 12월 개정).

➲ 제2조(당사국의 의무)

A. 제정된 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9.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년 9월 15일 제정)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하여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등을 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분석평가 기준에 성별통계, 성별수혜분석 평가결과, 정책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공무원의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3월 24일 제정)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 가정 등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성립 등을 지원하고,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추심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

11. 「아이돌봄 지원법」(2012년 2월 1일 제정)은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 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B. 개정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12.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2014년 5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이는 여성정책을 둘러싼 환경 및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고 양성평등한 사회 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 취지를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한 것이다. 양성평등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명시하였으며,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뿐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모·부성권을 보장 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였다.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 성평등지수 작성·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13.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공식적 추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의 활성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성평등사업 관련 사항들을 심의·조정하는 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양성평등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정부정책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두었던 '여성정책책임관'의 명칭을 '양성평등 정책책임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17개 시 · 도에도 지정하도록 하였다.

형 법

14. 형법(2012년 12월 18일 개정)은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추행 · 간음 목적의 약취 · 유인 · 수수 · 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성범죄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였으며, 실효성이 미약하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였다.

15. 동법은 2013년 4월 5일 개정으로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서 포괄적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여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계주의 규정을 두어 다른 나라에서 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포된 경우 우리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1년 9월 15일 개정으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 자신의 보호 ·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였다.

17. 동법은 2012년 2월 1일 개정으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추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였다.

18. 동법은 2012년 12월 18일 개정으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등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확대하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년 4월 15일 제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폭력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성폭력피해자통합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20. 동법은 2011년 3월 30일 개정으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도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긴급 구조 필요시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 동법은 2012년 12월 18일 개정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시설체계를 마련하였다.

22. 동법은 2014년 1월 21일 개정으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과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성평등적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며, 점검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피해자 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년 4월 15일 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한 법이다.

24. 동법은 2011년 4월 개정되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은 같은 해 11월 17일 다시 개정되어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13세 미만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게 하고, 13세 미만의 여자 및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25. 동법은 2012년 1월 17일 개정되어,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공개대상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교장을 추가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대책을 강화하였다.

26. 동법은 2012년 12월 18일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대상 범죄를 확대하였으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인피해자 또한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증인 지원관을 두도록 하였으며,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신설하고,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27. 동법은 2013년 4월 5일 개정으로 공소시효의 특례 등 동법에 따른 특례절차가 「군사법원법」과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28. 동법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를 추가하여 등록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직장을 변경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2년 2월 1일 개정으로 경찰관의 적극적 개입을 위한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였다.

30. 동법은 2013년 7월 30일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와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 경찰관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와 신고자 등을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였다.

31. 동법은 2014년 1월 21일 개정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매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비밀엄수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였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7월 25일 개정)은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적으로 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33. 동법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으로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하였으며,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 등의 소송절차에 참석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2년 2월 1일 개정으로 유흥주점 영업자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해당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35. 동법은 2014년 3월 27일 개정으로 성매매 예방교육 사후점검 강화, 성매매 추방주간 지정, 성매매 방지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등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취학지원 등을 통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자립·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2년 2월 1일 개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18세 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행위,

집단맞선 및 집단기숙 행위 등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상정보를 각각 해당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신상정보의 범위에 정신질환 여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을 추가하였으며, 결혼중개업자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확대하고, 중개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결혼 상대자의 권익 보호 및 혼인 진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보완 하였다. 또한, 2013년 개정으로 국제결혼 중개행위와 관련해 외국 현지 형사·행정 법령 위반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고, 2014년에는 3년마다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결혼 피해예방 홍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5년 개정은 결혼 중개업 표준 계약서 권장,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37. 「근로기준법」(2012년 2월 1일 개정)은 여성 근로자가 유산,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산전·후 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8. 동법은 2014년 1월 21일 개정으로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그 중 유급휴가 부분을 60일에서 75일로 확대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0년 2월 4일 개정)은 육아휴직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는 한편, 입양자녀도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규정하였다.

40. 동법은 2012년 2월 1일 개정으로 배우자가 출산을 한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며,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이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

파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허용 및 가족돌봄 휴직 허용을 의무화하였다.

41. 동법은 2014년 1월 14일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사업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고용상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3회 연속 여성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미이행한 사업주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일·가정 양립을 원활하게 하고 여성 근로자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4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2012년 12월 18일 개정)은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2013년 5월 28일 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C. 정책

법조인 대상 심포지엄 및 교육

43. 대법원 내 판사들의 자발적 연구회인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매월 국제인권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법무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함께 '국제 인권의 국내이행 및 차별금지'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대법원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는 2014년 12월, UN의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조인을 위한 편람'을 국문으로 번역, 발간하였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2011년부터 매년 12월 「국제 인권권고」의 국내이행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1년과 2012년에 여성차별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9월 19일 '입법 및 사법 분야 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과제 및 이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49차 CEDAW 심의 및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이 입법과 사법 분야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법조계 및 사법부 참석자들과 그 현황을 점검하고 이행과제와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 특별위원회는 2012년 12월 10일 여성 변호사 및 변호사연수생을 대상으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해 및 향후 여성변호사들의 UN 등 국제기구 진출 전망'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강연회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 의무연수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었다.

➲ 제3조(2조의 실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확산

44.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참여기관과 평가 과제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2012년부터 법에 근거하여 대상정책이 사업에서 법령, 계획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의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가 중앙 및 지방 단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사업과 법령 및 계획에서의 분석평가를 지원하고, 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가 적극 협조·참여하여 양적으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즉, 2005년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평균 1.6개 추진하던 것에서 2009년에는 6.4개, 그리고 2010년에는 8.2개로 증가했고 법 시행 첫 해였던 2012년에는 평균 49개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평균 87개로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많은 과제를 추진 하였다(〈표 1〉 참조).

성인지 예산의 확대 및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45.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시 성인지 예산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0년 동법의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을 기금까지 확대하고, 성별수혜분석 및 성과목표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대상 사업 수는 2010년 195개에서 2015년 343개로, 그리고 예산규모도 같은 기간 7조 3,144억원에서 26조 626억원으로 18조 7,482억원(정부안 기준) 증가하였고, 이는 2015년 전체 정부 총지출의 6.9%에 해당된다. 이러한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작성 기관의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이에 기반한 성과목표 설정,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변경하여 성별영향 분석평가제도와의 연계 강화, 그리고 작성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 및 작성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작성내용을 내실화하였으며, 그간 성인지 예산을 총괄하는 추진체계가 부족하여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성인지 예·결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였다.

46.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2012년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사업을 시행하고, 그해 최초의 지방 성인지 예산인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11,803개 사업, 12조 5,990억)가 지방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 제출된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사업수는 2013년 대비 12.67%(1,496개), 예산액은 16.95%(2조 1,352억) 증가하였다(〈표 2〉 참조).

국가 성평등지수 개발 및 공표

47. 2009년 여성가족부는 국가성평등 수준의 파악과 개선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성평등 전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취약한 영역의 성평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성평등지수를 개발하였다. 2014년 5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의 측정 및 공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을 고려하여 지표 체계를 개선하였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등 8개 분야 2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성평등지수는 2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발표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 64.8에서 2011년 66.5, 그리고 2013년 68.5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성평등한 개발원조사업을 위한 국제협력

48. 대한민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본정신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10년 수립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년)」에 양성평등 등 범분야 보편적 가치 지향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 성평등을 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 개발협력사업(양자)으로 2013년 112백만불을 지원하였으며,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와 더불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유엔여성기구(UN Women)에 연간 470만불 이상의 기여금 지원을 통해 성인지 평화구축, 아프리카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성인지 통계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양해각서를 체결 (2011년 12월)하여 인력을 파견·지원하고 있다(〈표 4〉 참조).

49. 2011년 11월에 개최된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및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공동으로 양성평등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양성평등과 개발을 위한 부산공동행동계획(Busan Joint Action Plan for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을 채택하였다. 부산공동 행동계획은 개도국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교육 기회 확대 등에 관한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긴요한 성별 분리자료 수집 및 활용 역량을 지원하는 양성평등을 위한 통계역량 강화(Evidence and Data for Gender Equality; EDGE)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다. EDGE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교육, 고용, 기업가 정신 등 개발 효과성에 긴요한 주요 분야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한 강화 촉진을 위한 성별 분리자료의 수집 및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가별 및 지역별 양성평등 통계의 비교 가능한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50. 정부는「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이행을 위한 국가행동 계획을 2014년 5월에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는 분쟁지역 및 분쟁취약 지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및 개발원조를 통한 분쟁지역 여성피해자 보호 및 자활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2회 실시하고 있다.

➲ 제4조(적극적 조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한 법적 조치

51. 중앙부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정부 내 설치된 각종 위원회 중 법률과 대통령령에 설치근거를 둔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위원회에 여성참여는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기획과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참여 확대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2013.8.13.공포, 2014.2.14.시행)하여 정부위원회 구성시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2017년까지 여성비율 40% 달성을 의무화하며 매년 정부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공표하고 있다. 2014년 기준 44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457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31.7%로, 전년 대비 4%p, 상반기 대비 2.1%p 증가하여 30%대에 진입, 역대 최고치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표 5〉 참조).

52. 해당 분야 여성인재 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여성정책실무회의(의장 : 여성가족부 차관, 관련부처 실장급 구성)에서 의결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중앙부처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2017년까지 달성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참여율 40% 달성이 불가능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2014년 여성정책 실무회의를 통해 미달성 사유를 심의·의결토록 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정부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인재가 적재적소에 추천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사회 각 분야의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있다.

여성의원 공천할당제

53. 여성의원 공천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당이 공천을 할 때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5년 8월「공직선거법」제47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을 통해,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이상을 여성이 되도록 추천하도록 하였다. 또한,「정치자금법」제26조 등 개정을 통해 선출직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 여성을 추천하도록 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성추천보조금제도를 규정하였다.

54. 2010년 3월「공직선거법」제47조 제5항 및 제52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광역의회 후보 또는 기초의회 후보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군지역 제외)하고, 위반시 후보자 등록을 모두 무효화 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결과,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1,825명 중 854명(21.6%)이 당선되었다. 이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의 747명(20.0%)보다 107명이 증가(1.6%p)한 것이다(〈표 6〉 참조). 또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15.7%로 18대 13.7%에 비해 2%p 상승하였다(〈표 7〉 참조).

공공부문 여성인재 역량강화 지원

55. 2013년 여성가족부는 미래 여성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여성인재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여성 중간관리자, 전문직 여성, 지역 여성인재 등을 대상으로 미래 핵심 고위관리자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7년까지 총 30,000명 교육을 목표로 2013년 시범기간에는 2,127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4.50점(5점 기준)의 높은 교육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기업체, 중앙부처, 여성직능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육 사이트 개설, 찾아가는 교육, 주말교육 등 교육방식을 다양화하여 교육의 참여도를 높였다. 2014년에는 7,014명(집합교육 5,601명, 온라인교육 1,413명)을 교육시켰으며, 4.51점의 교육 만족도를

보였다. 2015년에도 7,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에 있는 여성 인재의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14년도에 6개 지역의 거점교육기관을 마련 하였으며 15년도에는 8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56.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2006년에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장의 기준을 업종 평균 여성근로자비율 대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하였으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제 도입 및 근거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우수기업에 대한 조달청 신인도 감점을 0.5점에서 1.0으로 확대하여 200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한 이후 해당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비율이 2010년 30.1%에서 2013년 33.6%, 2014년 35.7%로,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0년 9.9%에서 2013년 11.6%, 2014년 13.9%로 매년 상승하였다(〈표 8〉 참조).

➲ 제5조(사회문화적 행동양식의 변화)

성범죄 친고죄 폐지

57. 범죄 친고죄 전면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2년 12월 18일 개정, 2013년 6월 19일 시행)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모든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관련 법률들에서 전면 삭제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친고죄 폐지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합의종용으로 인한

괴롭힘과 고소취하에 의한 수사중단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소되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 신고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공소가 가능해짐에 따라 친고죄 폐지가 시행된 2013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고소건수는 300여건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피해자 신고건수는 1,900여건 늘어났다(〈표 9〉 참조).

58. 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사건 발생건수는 2010년 19,939건에서 2011년 22,034건, 2013년 26,919건으로 증가했다. 증가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원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성폭력사건의 기소율은 2010년 42.9%에서 2013년 52%로 증가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여전히 언론 등에 의해 피해자의 신원이 원치 않게 노출되거나 피해 원인이 마치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오도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을 제작하여 언론사에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59.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로 처분된 사람 수는 2010년 6,939명에서 2013년 19,56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기소된 사람은 같은 기간 1,038명에서 2,959명,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는 1,095명에서 4,706명으로 증가하여, 기소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비율이 2010년 30.7%에서 2012년 39.2%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 10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도입이후 2011년 14건에서 2013년 1,00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변화와 관련 교육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관련법을 제·개정하여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강구하였다(2조 32, 33 참조).

60. 2013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검토 결과 피해자 지원서비스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 고양을 위한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성가족부는 2014년 8월부터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지정하여 가정폭력 방지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 재발 방지 강화

61.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0년 7월 23일)하여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 치료' 제도를 도입하여 최장 15년까지 치료와 교정 · 교화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간 100여명의 성폭력범죄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치료재활센터를 2008년 개소하였고, 2011년에는 수용규모를 200명으로 확대하였다. 전국 4개 교도소의 집중치유센터를 통해 올바른 성인지 관념 등 출소 전 교화프로그램을 집중 교육하고 기존 경찰서에서 열람 가능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2010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년 1월부터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 · 면 · 동 지역주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다. 2014년 7월에는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성과

62. 정부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민간 운영 성폭력 · 가정폭력 상담소의 국비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성폭력피해자 통합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여성폭력 피해자는 28,487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 하였고, 서비스 지원은 260,005건으로 28.5% 증가하였다(〈표 10〉 참조). 2010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27개소에서 34개소로 증가하였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국 18개소 핫라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상담건수는 2010년 183,240건에서 2014년 265,792건으로 45.1% 증가하였다(〈표 11〉 참조). 민간이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지원건수는 2014년 291,244건(〈표 12〉 참조), 성폭력상담소의 경우는 2014년 146,750건 이다(〈표 13〉 참조). 국비 지원을 받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는 2014년 기준 189개소이고 피해자 보호시설은 97개소로 2010년 대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9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5개소 증가하였다(〈표 14〉 참조). 2003년부터 실시된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지원한 건수는 2010년 4,303건에서 2014년 6,687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주여성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63.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가 2006년 설치된 이후 매년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어 2014년부터 13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지역센터 설립을 통해 현장지원 및 가족상담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4년 4월부터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폭력 피해에 대한 긴급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표 15〉 참조).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에서는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담·의료·법률·출국 등을 지원하고 있고 평균 보호인원은 2008년 17명에서 2014년 291명으로 늘어났다(〈표 16〉 참조).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64. 2010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및 친고죄를 폐지하고, 2011년 전국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진술조사 분석 전문가를 배치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진술조력인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기준 장애여성을 위한 별도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25개소와 보호시설 10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6개 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가해자를 교직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 인정범위 확대, 장애인을 위한 법률 조력인 제도 도입,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법인/시설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도입하고 성폭력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교육부·경찰청은 2013년부터 전국 190개 상설 모니터 단을 구성하여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매월 1회 이상과 연수지원을 통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동성범죄 수사체계 개선을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65. 2011년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수사, 재판과정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경우 변호인 동반 출석 및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조사 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과정에서 반복적 진술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2011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을 발견·삭제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고지 방법, 신상정보 접근을 확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12월 19일 진술조력인 제도를 시행하여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해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의 중개·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다양한 방법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노력 : 교육·시상·홍보

66. 양성평등의식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근무자들 처럼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체계적인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2003년에 설립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공무원에서 다양한 대상으로 교육을 확장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2010년에는 교원들의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원의 연수를 담당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연수원의 허가를 받았다. 2014년에 8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2,203명의 초·중·고교 교사가 성인지 및 폭력예방 교육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오프라인 교육 외에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오프라인 강좌를 보완하기 위해 양성평등,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례분석 과목 및 성희롱·성매매예방·성폭력예방·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의 사이버교육 강좌를 개설했으며 사이버교육 수강자는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2011년 44,725명, 2012년 46,736명, 2013년에는 48,267명, 2014년 52,28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67. 전국민 대상의 양성평등 의식교육 저변확장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5년 3월 모바일 플랫폼 '양성평등 미디어'를 구축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본

개념과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학습내용을 모바일 특성에 맞는 콘텐츠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68.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홍보하고 대중적 관심 및 실천의식 제고를 위해 영향력이 있는 대중매체의 양성평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1999년에 제정된 '남녀평등상'의 명칭을 2013년 '양성평등상'으로 변경하여 시상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양성평등 보도부문을 신설하여 성평등한 뉴스·시사 등의 기사 등에 시상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여 초·중등학교 교과서 게재 및 양성평등 폭력예방 전문 강사의 강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2008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방송의 성차별 모니터링 및 심의 가이드라인 등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하여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및 일간신문 등의 드라마, 시사/토론, 오락/예능, 교양, TV광고 장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8회)했고,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모니터링 요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사업장의 성희롱 방지조치 내실화

69. 2006년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기관장 및 사업주에 대한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를 규정한 이래 2013년에는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성희롱 추가피해가 있거나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확인시 관련자 징계 요청 및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 추진실적을 집계한 결과 2010년에는 15,818개 공공기관 중 98.5%, 2011년에는 15,650개 기관 중 98.9%, 2012년에는 15,932개 기관 중 99.6%, 2013년에는 16,600개 공공기관 중 99.7%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실시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교육 실시율 증가와 더불어, 고충심의위원회 구성기관 비율(90.7%, 2012년 대비 0.7p% 증가), 고충상담원 지정률(94.7%, 2012년

대비 0.5p% 증가)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추진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진기관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성희롱 예방의식 고취 및 경각심을 확산하고, 성희롱 예방 업무의 중요성 및 추진의지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0. 공공기관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고 기관별 고충전담 창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 및 각 급 학교와 공직유관단체의 고충상담원(2013년 85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은 관내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 조언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실천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이 각 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 · 보급하고 있다. 2013년에는 성희롱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드라마 형태로 제작하여, 피해자 구제방법과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였다. 2014년 6월 17일 개정된「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성희롱 방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7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대학교 성희롱 · 성폭력 실태조사(2012)」「여군 인권 실태조사 (2012)」「진료과정 성희롱 실태조사(2013)」를 실시하여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2013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대학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정책'을 권고하고 2013년에는 군대 내 성희롱 · 성폭력 예방조치 방안을 담은「여군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에 관하여 국방부에 권고하였으며 2014년에 '군대 내 성희롱 예방 동영상'도 제작하여 여군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기여하였다. 2014년 진료 과정 성희롱 예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안내서」를 병원 등 의료 기관에 배포하여 진료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사례들을 모아서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을 발간·배포하고 있고 그간의 성희롱 진정사건 통계와 현황 등을 분석한 「성희롱 진정 사건 백서(2012)」를 제작, 배포하여 각급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와 성희롱 조사 및 가해자 징계 시 판단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72.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풀을 구성하여 성희롱 발생 개연성은 높지만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에 무료로 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336개 사업장 11,164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2012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신고 체계인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릿(100,000부)과 동영상을 제작·배포하였고, 2013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릿 외국어(5개 국어) 번역본 200,000부를 제작하여 외국인 여성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배포하였다.

➲ 제6조(여성인신매매와 성매매 금지)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7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어 성매매피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원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수사기관 직권 또는 본인, 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수사기관 역시 신고자 등의 조사 시 동석할 수 있다. 성매매피해자는 스스로 피해당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 상담소 등의 최초 담당자들의 초기판단이 중요하므로 2013년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Identification of Sex Trafficking Victims)'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2014년 3월 27일「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성매매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74.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을 설립해 현장방문상담,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직업훈련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통해 탈성매매와 성매매 재유입의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표 17〉 참조). 특히 청소년 성매매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중앙센터 1개소, 권역별 지역센터 10개소를 지정해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35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표 18〉 참조). 이 교육은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의료, 법률, 학업, 자립자활 등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사례관리도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 조건만남 등의 이름으로 채팅방을 개설한 청소년에게 사이버 또래상담을 실시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청소년의 성매매 접근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75.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와 재유입 방지를 위한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실적은 2010년 45,817건에서 2013년 57,261건으로 증가한 반면 지원받은 인원은 2010년 7,360명에서 2013년 6,557명으로 감소하였다(〈표 19〉 참조).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지원 사업 실적은 2009년 30,545건에서 2013년 38,976건으로 증가하였다(〈표 20〉 참조).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은 2010년 11,129백만원에서 2013년 11,480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은 2010년 87개소에서 2014년 91개소로 확대되었다. 2014년 3월 27일「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피해자 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였다. 일반 지원시설의 경우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청소년 지원시설은 현행 최대 19세에서 최대 21세까지로, 장애인의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은 성매매 피해자들이 시설 퇴소 등으로 거주 공간이 필요한 경우 머물 수 있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외국인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76. 예술흥행 E-6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며 성매매 피해를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중 성매매피해 외국인 여성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의 경우 G-1 비자를 허가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2013년부터 체류외국인 중 성매매 강요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자로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협의회'에 의해 구제대상자로 결정되면 심사를 통해 G-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로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2014년 E-6 비자 체류자 총 5,162명 중 불법 체류자는 1,658명으로 32.1%에 달한다. 정부는「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동의안을 2014년 7월10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비준동의안이 2015년 5월2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비준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제 2 부

➲ 제7조(국가의 정치 및 공적 영역에서의 평등)

여성공무원 비율

77. 중앙부처 여성공무원(행정부소속 국가직)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2013년에는 48.1%로 2009년 46.1%에 비해 2.0%p가 증가하였다(〈표 21〉 참조). 지방자치단체 지방직 여성공무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직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2009년 32.0%에서 2013년 34.1%까지 2.1%p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방직 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도 7.4%에서 10.3%로 2.9%p 증가하였다(〈표 22〉 참조).

여성 판·검사 현황

78. 여성 판·검사 비율은 2009년 20.9%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에는 26.5%까지 도달하였다. 행정부 소속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 판·검사의 여성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며, 앞으로 판·검사 전체 중 여성 비율이 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표 23〉 참조).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79. 공직 내 정책 기획 및 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직위의 여성 비율은 양성평등한 국가정책 수립 및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제1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계획(2002-2006)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10% 확대를 목표로 하였다.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2007-2011)은 기존의 5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직급을 높이고,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다. 당초 목표는 2016년까지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3%로 확대 하는 것이었으나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의 이행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공공 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이 2013년 12월 수립됨에 따라

2017년까지 4급 이상 여성공무원 확대 목표가 15%로 재수립되었고 매년 상·하반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에서는 2014년부터 정부업무평가에 여성대표성 제고관련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기관별 달성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으로 부여하는 등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3년 말 기준 여성관리자 비율은 9.9%로 2011년도에 비해 1.5%p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표 24〉 참조).

공공기관 여성비율

80. 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으로 설립한 기업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에서 여성고용율과 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꾸준히 시행해왔고, 2013년 5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50개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여성 근로자 비율은 2012년 32.3%에서 2014년 35.6%로, 여성 관리자비율은 2012년 11.9%에서 2014년 13.9%로 매년 상승하였다(〈표 25〉 참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14년「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별 연도별 여성관리자 확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그 이행 실적을 2014년도 경영평가부터 반영토록 하였다. 이 목표제에 의하면, 2014년 기준 257개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은(2013년) 12.7%에서 (2017년) 18.6%로 확대되게 된다. 한편, 2014년부터 알리오 시스템에 게재되는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급별 여성 현원 항목을 반영토록 하여 개별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원의 여성 비율 확대

81. 2013년부터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를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2014년 4월 기준 공립학교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29.4%로 2014년도 임용 목표치인 28.4%를 초과하여 달성하였다. 2015년 4월 교육부에서는 2017년까지 여성 교장·교감 임용 비율을 당초 33.5%에서 36.0%로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시·도교육청에 자체 계획을 상향조정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여성

교장 · 교감 확대를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표 26〉 참조).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82. 2001년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되었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4가지 전략 가운데 하나로 '여성인력활용의 극대화'가 포함되었다. 특히 대학 내에서의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대학 교수직의 심각한 성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교육부문 여성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 · 공립대학교 여교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국 · 공립대 여교수 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 전후 여교수 책임 강의 시간을 감면하거나, 의사결정 기구에 여성 교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양성평등 조치 우수대학의 사례를 공유하고, 미흡한 대학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대학별 여성 교원의 필요성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 · 공립대학교 여교수 비율은 2009년 12.8%에서 2012년 13.7%, 2013년 14.1%, 2014년에는 14.5%로 증가하였다(〈표 27〉 참조).

제8조(대표성)

외교 분야 여성 진출

83.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평화외교 · 경제외교 · 문화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의 등용문인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연도별 여성합격자 비율은 2011년 55.2%, 2012년 53.1%, 2013년 59.5%를 기록하였다. 2014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을 거쳐 최종 임용된 여성은 56.4%(최종 임용자 39명 중 22명)이다. 2010년 이래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50%를 상회하며 다른 국가고등고시(입법 · 사법 · 행정)보다 가장 두드러진 여성합격률을 보인다. 외교 공무원 중 여성직원 비율도 2010년 28.9%에서 2014년 32.7%로 증가하였으며 본부의 경우는 47.9%에 달하고 있다(〈표 28〉 참조). 외교부 소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비율 또한 2015년 4월 기준 29%로 2011년 16%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기구 진출

84. 현재 기준 유엔 사무국 등 국제기구에 진출한 한국인 530명 중 197명이 여성으로 특히, 유엔 사무국 인도지원조정실(OCHA) 사무차장보와 유엔 인권이사회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그리고 UN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위원회에 한국여성이 위원직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실시해 온 국제전문여성인턴은 2002년 4명으로 시작하여 2013년까지 총195명이 국제회의 참관 및 국제기구 인턴십에 참여했다. 한편,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프로그램의 경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선발대상 중 75%가 여성이다.

➲ 제9조(국적)

해당사항 없음

제 3 부

➲ 제10조(교육)

여학생 고등교육 참여율 향상과 전공의 다양화

85. 여성의 교육율 제고와 비전통적 전공 선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여성의 교육 참여는 남성과 거의 비슷하며, 2009년부터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의 진학률을 앞질렀다(〈표 29〉 참조). 이런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아 취업률이 높은 이공계열 등 전문직 전공의 선택을 유도하는 진로교육이 여성의 취업률 및 고용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의약계의 여학생 비율은 2010년 5.8%에서 2013년 7.6%로 상승하였고, 공학계는 같은 기간에 9.5%에서 10.2%로 상승하였다. 이에 반하여 그간 여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인문계 비율은 낮아졌다(〈표 30〉 참조).

여대생 커리어개발 지원 사업

86. 여성가족부는 젠더의식 강화, 커리어코칭 등을 통해 청년여성의 커리어개발을 강화하는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 사업을 200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각 대학을 중심으로 여대생의 전 생애적인 직업설계 능력 배양, 진로개발부터 취업지원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해 왔다. 2012년부터는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여고생 멘토링, 지역 청년여성 커리어개발 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03년 5개 대학에서 시작하여 2014년에는 40개 대학을 지원하며 대학 내 청년여성 직업능력 개발 지원의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2014년도 기준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60,780명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는 84.7점으로 나타나 이용자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7. 이외에 여성가족부는 2002년부터 사이버멘토링 운영을 통해 여성들에게 네트워크 구축 기회와 역할모델을 제공하고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후배여성(멘티)은 선배여성(멘토)으로부터 직무 분야의 전문지식, 직업의식,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아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총 8,933명의 멘토와 멘티가 매칭되었다.

초·중등교육 양성평등성 강화

88. 초·중등 교육에서는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성평등 교육을 내실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교육청 및 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교육 강화, 성평등교육 전문성 제고, 성평등교육의 진단이 실시되었다.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 성평등한 생활, 가족 내에서의 평등, 역사 속에서 평등이야기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성평등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자와 교육담당자 연수가 실시되었다. 양성평등교육은 매뉴얼을 토대로 연1회 각급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2013년부터 양성평등 연구학교(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초등학생 양성평등 학습교재(저·중·고학년용)와 교사용 지도서를 발간하여 2013년부터 양성평등 연구학교와 선도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보급하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89. 이공계 여성 인재 육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2년), 다양한 사업이 법률적 기반을 토대로 추진되었다. 특히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09~2013)」의 연도별 이공계 여성박사 1,000명 육성(2007년 705명→2013년 1,155명), 여성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10% 확보(2007년 9.8%→2012년 13%), R&D 여성 책임연구자 비율 10% 제고(2007년 8.9%→2012년 11.6%)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90. 또한, 여성과학 인력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R&D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으로 '산업현장의 여성 R&D 인력 확충방안'을 마련(2013년 11월)하여

민·관 협의체 구성(2014년 3월), 고용포럼 운영 등 여성과학 기술인을 위한 고용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2010년 전체 연구원(235,596명)의 11.4%(26,955명)였던 여성연구원의 비율이 2014년 전체 연구원(302,486명)의 14.3% (43,300명)로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연구과제 지원 수가 2012년 39개에서 2014년 100개로 확대되었다.

91. 2013년 기준 공학계열 신입 여학생 비율이 21.16%에 그치는 등 계열별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14년부터 'K-Girls' Day 여학생 기술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년에 하루, 여학생들에게 전국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기술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공학계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기술 부문으로 진출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2014년 95개 프로그램에 1,876명, 2015년 상반기 109개 프로그램에 1,852명의 중·고·대학교 여학생이 참여하였다(〈표 31〉 참조). 2015년 참여여학생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이공계열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프로그램 참여 전과 대비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 제11조(고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92. 보고 기간 동안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은 점진적으로 증진되었다(〈표 33〉 참조). 특히, 2013년에는 여성고용 활성화를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4년에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방안'과 '여성고용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성고용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15세 이상의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2010년 10,256명에서 2014년에는 11,149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49.4%에서 51.3%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동안 여성고용율은 47.8%에서 49.5%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30대 여성고용률이 53.7%에서 56.3%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여성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은 2010년 27.1%에서 2014년 27%로 약간 감소하였으며(〈표 34〉 참조), 임금 성별격차 역시 2010년 39.6%에서 2013년에 36.6%으로 감소하였다.

93. 여성의 경제활동증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은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여성정책 중 하나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여성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는 청년 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여성지원 강화,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여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 강화,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강화, 농어촌 경영능력 제고 및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 지원, 여성 창업 및 여성 기업인 지원 확대의 세부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15~2019)」은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지원정책의 현장 착근 및 서비스 내실화에 초점을 두었다. 「제4차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2012년)」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고용평등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5대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5대 핵심 전략은 1) 여성의 역량 제고 및 일자리 확대, 2) 일하는 여성 중심의 육아 지원제도 마련, 3)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 정착, 4) 남녀 차별이 없는 일터 정착, 5) 사회합의에 기반한 여성 고용 인프라 확충으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생애주기에 따른 일하는 여성 지원정책

94. 정부는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만들기'라는 목표 아래 일하는 여성의 생애 주기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임신·출산기 근로자에게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자연 유산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급여)제도, 아내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에게 3~5일(최초 3일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의료이용 선택권을 강화 하는 방식으로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의 발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영·유아기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제도,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아 (소득수준 무관)에게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양육수당 지원, 맞벌이 부부의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95. 일하는 여성이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대체 인력 사용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통해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가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96. 정부는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여성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이 제도는 출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종료 즉시 재고용한 경우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였으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신 중인 근로자로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1년간 지원하며, 계약 종료 시 뿐만 아니라 출산 후 1년 이내에 재계약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2013년 1월부터는 계약체결 시기를 출산 후 15개월 이내로 추가 완화 하였고, 2014년에는 육아휴직(생후15개월 이내 자녀) 중인 근로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2013년에는 167개 사업장에 88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164개 사업장 315명에게 1,24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지원금을 인상하여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첫 6개월은 월40만원, 다음 6개월은 월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97. 정부는 여성근로자들이 보육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설치비용 융자 및 무상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확대지원 등의 시책을 담았다. 2012년부터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설치비의 90%(15억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2개소, 2013년 10개소, 2014년 2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설치 · 지원 중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무상지원은 2010년 61개소에 6,634백만원에서 2014년 93개소에 23,676백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하였다(〈표 35〉 참조).

98. 정부는 2007년부터 만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가정파견 돌봄 서비스(아이돌봄지원)'를 제공하고 있다. 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서비스와 만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서비스가 있으며, 그 외에 기관파견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부모의 일 · 가정 양립에 기여하고 있다. 동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와 취업부모에게 안정감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서비스 수요자의 개별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다원화되어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 수는 2012년 44천 가구, 2013년 51천 가구, 2014년 54천 가구로, 지속적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강화

99. 여성의 경력단절은 성별임금격차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정부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을 시작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새일센터는 2009년 77개소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 이래 2014년 총 140개소로 확대 ·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내 희망구직여성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광역 새일지원 본부를 지정했고 2014년 기준 전국 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에는 여성 취업지원 기관(여성회관) 등에 취업설계사를 파견하여 구인, 구직,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라인(www. dream.go.kr)으로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0. 2014년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전공·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새일센터의 유형을 경력개발형(고학력, 유전공자), 자립지원형(취약계층), 농어촌 형으로 나누어 10개소에서 시범운영하였다. 또한, 직업교육 및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유망직종 전망 등을 토대로 구직자의 경력 및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총 636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참가 후 취업률은 2009년 54%에서 2014년 상반기 61%로 상승하였다. 특히,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인턴채용기업에 1인당 총 300만원 한도에서 3개월간 기업에게 월 60만원, 3개월 이후 고용이 유지될 시 기업과 인턴자를 대상으로 각각 6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새일인턴제의 취업률은 2014년 93%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표 36〉 참조).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 참여 확대

101. 동 보고서의 기간 중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크게 강화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육아휴직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2006년 만3세 미만의 영유아에서, 2010년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2014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되었고,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2007년 기준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2011년부터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되었다.(〈표 37〉 참조) 육아휴직 이용자수는 2007년 21,185명, 2011년 58,134명, 2013년 69,616명, 2014년 76,83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육아휴직 지원금액은 2007년 60,989백만원, 2011년 276,261백만원, 2013년 420,248백만원, 2014년 500,663백만원이 지원되었다.

102. 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310명에 불과하던 남성휴직자 수가 2009년 502명에서 2011년 1,40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3년 2,293명, 2014년에는 3,421명의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남성육아휴직 급여 지원실적을 보면, 휴직제도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2007년 740백만원, 2011년 5,761백만원, 2013년 11,691백만원, 2014년 17,920백만원으로 증액 지원되었다.

103. 2014년 10월부터는 '아빠의 달'을 도입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였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남성이 사용할 경우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2015년부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남성 공무원도 여성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104.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엄마에게 가중된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빠의 육아참여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아빠, 직장 동료, 기업, 사회의 적극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TV 광고와 더불어 제휴 기업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아빠의 육아와 가사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여성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105.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사회적 지지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한국 직장문화에 대한 소양교육 실시, 취업훈련정보 제공, 일자리 발굴 및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2014년 기준 1,460개의 교육 및 연계프로그램이 운영 되었으며, 참가자 수는 13,858명이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여성새로 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 특성과 인력수요를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47개 과정(2015년 기준,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관광통역 안내사 양성 과정 등)을 운영 하는 한편, 일자리로의 직접 연계와 직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여성 인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2014년 644명 인턴 연계) 특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및 새일여성센터 대상자 선정시 결혼이주여성을 우선 선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결혼이주여성 집중거주 지역 고용센터(2015년 31개소)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결혼 이주여성에게 적합한 구인처 발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06. 2011년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3.9%로 남성 장애인 49.19%의 절반 수준이고, 여성 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22.72%로 남성 장애인의 1/2수준이다. 여성 장애인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여성 복지 증진) 및 「UN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첫해에는 여성 장애인의 정서 안정 및 사회성 향상지원, 모성권 보호 등 '여성 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107. 2009년에는 '여성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이외에 상담 지원과 교육 · 사회 ·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장애인 특화교육사업'과 시범사업 형태의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 사회 기관과 연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통해 상담, 역량강화교육 등을 받은 여성 장애인 수는 2010년 42,535명, 2011년 52,169명, 2012년 62,235명, 2013년 65,767명, 2014년 72,036명이다. 앞으로 여성장애인의 사회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 · 가정 양립 제도의 확산을 위한 노력

108. 정부는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가족 친화제도를 제공하는 가족인증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참여기업을 발굴·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전일제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도와 시간제일자리 등을 활성화시키고, 워킹맘의 경력단절예방과 경력유지 지원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09. 여성가족부는 현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로 선정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5년 3월 '일·가정 양립 지원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여성정책, 가족정책 등 일·가정 양립 정책 유관부서가 참여한 추진단은 부서 간 역할분담 및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가 기업과 가정에서 착근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정기 회의를 통해 부처 합동 액션플랜 및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공동홍보 시행,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가족사랑의 날' 할인 프로모션 및 고객 대상 인식개선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10. 또한,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 확대 등을 위해 2014년 6월부터 세계경제포럼(WEF)과 협력하여 한국의 주요 민간기업 및 단체, 정부부처·공공기관 등 120여개로 구성된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실천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 민관 협력 TF는 육아휴직 장려, 가족사랑의 날 실천, 가족친화 경영문화 확산 등 선정된 80개의 실천과제를 토대로 참여 기업·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천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우수한 실천성과와 선도적인 일·가정 양립 기업 문화 등은 성과보고회, 세미나, 우수사례집 발간, 실천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1. 2008년부터 시행된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탄력근무제도, 출산·양육 및 자녀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는 인증을 신청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2008년 9개를 시작으로 2014년 444개로 신규등록이 매년 증가하였다(〈표 39〉 참조). 2014년 12월 기준, 총 누적 인증기업 · 기관수는 956개로 대기업 223개, 중소기업 428개, 공공기관 305개가 인증을 받았다. 2013년부터는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 맞춤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밖에 기업대표 및 가족친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하고 온 · 오프라인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가족 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여성고용 환경 개선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12. 정부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일 · 가정 양립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모성보호, 일 · 가정 양립, 보육 및 돌봄 지원, 재취업 및 근로문화 등 4개 정책 영역으로 구분하여, 16개 광역시 · 도별로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자동육아휴직 전환제 확대', '대체인력 채용 시작 기간 연장', '초 · 중 · 고 교과과정에 모성보호 및 일 · 가정 양립제도 내용 포함'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국민들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 · 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 수혜대상자별 정책정보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유연근무 확산 : 근로시간과 장소 선택권 강화

113.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육아기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0시간 정도로 단축하는 제도이다. 2012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도입되어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자녀 1명 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하다.

114. 정부는 새로운 고용패러다임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보다 짧게 일하면서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로 자녀보육, 퇴직준비, 일·학업 병행 등의 이유로 전일제로 일하기 어려운 구직자·근로자와 피크타임대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길 원하는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시간선택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115. 정부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근무자가 자신의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원격근무용 사무실'이다. 공공부문 스마트워크센터는 2010년 2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 총 16개소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과 더불어 원거리 출퇴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별적 고용관행 지도·점검 강화 및 시정조치

116. 정부는 '남녀 차별이 없는 일터 정착' 핵심전략을 위한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성(性)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시정조치, 그리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반시 벌금(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 또는 형사 처벌에 이르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을 통해 성차별 금지 규정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각종 예방 및 지도·점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 근로자가 다수 종사하고 있는 유통업체, 병원, 제조업체 등을 점검하고 시정지도하였으며,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사업장과 여성의 이직률이 높거나 모성보호제도 활용률이 낮은 사업장을 중심

으로 차별적 고용관행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법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한 경우는 2010년 6,486건, 2011년 4,418건, 2012년 6,521건, 2013년 4,729건, 2014년 2,053건이다(〈표 40〉 참조).

1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사업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장 지도, 점검과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이 조항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임금 차별시 1천만원 이하, 임금 외 금품 차별시 5백만원 이하 등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남녀의 임금 조건을 달리하여 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 제12조(건강)

초기 임산부 건강관리 강화

118. 과거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만 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임신초기 여성의 모성보호는 미흡하였다. 실제 자연유산의 70~80%는 임신 초기인 16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임신 16주 이전의 유·사산 여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2012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 2012년 8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부터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임신 초기 여성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였다. 단, 임신 11주 이하는 유·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임신 12~15주는 10일까지 보호휴가가 차등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과거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 전 보호휴가(44일)를 임신 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41〉 참조).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119. 임신 · 출산과 관련한 산모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 12월 15일부터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2010년 4월부터는 지원 금액을 1인당 30만원, 2011년 4월부터는 40만원, 2012년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부터는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20만원을 추가해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났다. 또한, 2013년 1월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1~3급의 장애가 있는 출산모에게 기존 전자바우처(50만원) 지원 이외 100만원을 추가하여 출산 비용을 지원했으며, 2015년부터는 지원대상을 1~6급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한편, 2012년 1월부터는 산전관리가 취약한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 대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발생된 진료비를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전자바우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5월부터 '고운맘 카드'와 '맘편한 카드'를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카드로 다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3년 3월부터는 카드사용이 가능한 이용기관을 한방의료 기관까지 확대했다.

산모 · 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120.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해 2006년부터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 · 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7월 기준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다.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제공인력의 감염병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건강진단 필수 검사 항목을 지정하였다. 특히,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규자 및 경력자의 필수교육 이수시간을 차등 규정하고, 실기 교육(2011년 10시간→2012년 30시간)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교통 불편지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분만 취약지역 공공형 산부인과 확대

121. 극심한 저출산 현상에 따른 출산 인프라 감소로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거리가 먼 곳, 즉 분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산전·산후 진찰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 대도시 원정 출산이 불가피하여, 시간·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52개 분만 취약지역 중 우선 3곳에 산부인과를 설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7곳, 2013년 11곳, 2014년 25곳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여성건강 현황 조사

122. 국민건강영양조사는「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에 근거한 법정조사로서「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등 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통계 생산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제1기(1998년) 조사에서 여성건강의 건강면접조사 항목 중 급성질환 조사표에는 여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임신합병증, 여성생식기관 질환, 월경 이상 등의 여부를 체크하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제2기(2001년)부터는 영양조사 항목 에서 초경·폐경 연령, 현재 임신 여부 및 임신 주수, 수유 여부 등의 여성건강 항목을 별도로 다루었다. 이후 급격한 고령화와 폐경기를 거치는 여성건강의 특이성으로 인한 골다공증이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부각되면서, 2008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다공증 관련 항목이 포함되었다. 제5기(2010~2012) 조사 에서는 여성건강 조사부문을 일부 변경 하였다. 첫째는 조사내용(월경력, 피임약 및 여성호르몬제 복용, 출산력)의 특성상 면접보다는 자기기입 방법이 타당하여 영양조사에서 면접으로 실시하던 것을 건강설문조사의 자기기입 항목으로 변경하였다. 둘째는 여성건강 및 질환과 관련된 요인과 모자보건 영역 지표 산출을 위해 무월경 이유, 월경 규칙성, 유산경험 및 횟수, 분만 방법 및 횟수, 여성질환 수술력, 모유수유 경험 및 기간 등을 추가하였다.

여성의 생식건강 강화

123.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도입한 이래 다태임신이 체외수정시술의 중요한 합병증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여 2008년 중반 이후부터 이식배아수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실제 다태낭 착상의 비율, 특히 합병증과 관련성이 높은 삼태낭 이상 착상 비율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개선결과와 실제 시술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의 연관성은 「2010년 난임부부(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 · 서울대학교병원, 2011). 2013년 6월, 보건복지부는 체외수정 이식배아수 관련 윤리적 검토 및 진단 기준의 명료화 등이 포함된 「정부의 난임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실시 하였다.

HIV/AIDS 확산 방지

124. 국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신고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재 HIV/AIDS 내국인은 1,013명으로 성별로는 남자 93.3%(946명), 여자 6.6%(67명)이다(〈표 42〉 참조). 자신의 HIV 감염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파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검사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위해 2008년 3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익명검진제도를 신설하여 HIV 검사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검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동성애자 및 외국인 대상 검진 상담소를 각각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검진 · 상담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43〉 참조).

여성의 우울증 · 자살 등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지원

125.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대상 중 15.3%만이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및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복지부는, 2013년 4월부터 국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 질 수 있도록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은

정신 건강의학과 외래 상담 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하였다. 즉 정신과전문의는 약물 처방 없는 외래 상담의 경우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 대신 보건일반 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59만 1,148명 중 여성이 68.8%인 40만 6,965명으로 성별 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는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표 44〉 참조). 이러한 조치는 여성의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심각해지기 전에 치료하여 정신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성의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2년 3월 31일)을 시행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정신보건센터를 확대하여 자살예방 인프라를 강화하였다.

노령여성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 확대

126.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 치매, 중풍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2년 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 점수를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여 실제 요양이 필요함에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3만 9천여 명의 노인에게 신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2013년 7월부터는 51점으로 낮춤으로써 1만 6천여 명 정도가 추가로 수혜를 보게 되었다.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자의 여성비율이 70%에 달하여 이러한 제도 개선은 여성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45〉 참조). 또한, 사회적 관계가 미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 돌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제13조(경제사회적보장)

한부모가족 복지 확대

127.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국가의 복지급여 지급을 임의규정 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지원기준 연령초과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 전체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에서 제외되던 것을, 연령초과(만 18세 이상, 취학 시 만 22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초과 아동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을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한부모가족 자녀가 군복무 후 취학한 경우 보호연령 (종전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연장하고, 복지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및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되는 한부모가족 자녀 학생은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월 5만원에서 2013년 월 7만원, 2015년부터는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다(〈표 46〉 참조).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 서비스

128. 여성가족부는 2007년부터 2015년 3월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며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 서비스'를 법률구조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부 가족 등 모든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이혼·미혼 한부모가 83%에 달하고, 특히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77.4%나 되는 등 여전히 양육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7〉 참조).

129.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14년 3월 24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에 근거하여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3월 25일 개원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과 협의지원, 양육비 채권추심 업무 및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동법에 의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도입되어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한 번의 신청으로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상담 · 협의성립 · 소송 · 채권 추심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채무자 주소 · 근무지 조사 등의 행정조치 및 체납정보의 신용정보회사 제공 등의 제재조치 등 별도의 이행확보수단이 있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130. 정부는 2010년부터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에게 월 1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양육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이들의 학업단절 방지를 위해 연간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원비와 학업, 취업 등의 자립 활동 시 월 10만원의 자립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58개소의 미혼모자복지시설을 통해 주거지원 및 출산 등 의료지원, 일정기간의 자녀양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재가 미혼모자 가족을 위해서는 전국에 17개소의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9,423명, 2013년 10,280명, 2014년 10,721명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양육과 자립을 지원했다.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 요건 완화

131. 2010년부터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의 의무가 없는 자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준소득을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 소득인 99만원으로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임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월 126,000원에서 89,000원으로 인하되어 전업주부, 학생 등이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표 48〉 참조).

저임금 노령여성의 건강·사회서비스 제공

132. 저임금 노령여성들의 건강 및 사회 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해 장기요양 대상이 아닌 노인을 대상(2014년 3.6만명)으로 가사·활동지원 및 주간보호 등의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단기가사서비스를 추가하여 골절, 중증질환 수술 직후 등 단기간 거동이 불편하나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고령여성의 노후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에는 중·고령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노후설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중·고령 여성들의 노후 준비 및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직업훈련 등을 이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1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 수급자 중 여성은 2013년 711,258명으로 전체 일반 수급자의 56.5%이다. 구체적으로 19세 이하에서는 여성 수급자가 135,688명, 20대는 43,587명, 30대 36,521명, 40대 103,607명, 50대 90,864명, 60대 85,163명, 70대 133,932명, 80세 이상 81,896명으로 나타났다(〈표 49〉 참조).

➲ 제14조(농어촌 여성)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 변화

134.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계획(2011~2015)은 여성농어업인 역량을 창조성·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모습으로 설정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으로 대상별 삶의 질 향상 지원을 강화하였다. 기본전략은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전문 농어업 경영역량 강화,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35.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경영주의 세대원)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2012년에 개정하여 공동 경영인으로써 여성의 직업적 지위를 확대하였다. 2013년부터는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경영주의 세대원)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부 모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에는 총 146,279명이 지원받아 2013년 126,862명 대비 15% 증가하였다.

농어촌 새일센터 운영

136. 농어촌지역(시 · 군 · 구)에 거주하는 취업 · 창업 희망여성 대상 맞춤형 취업 · 창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에 '농어촌형 새일센터'를 지정하고 2015년부터 확대 운영하였다. 2014년에는 2개소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하고 2015년 신규로 2개소를 지정하며 기존에 운영하던 충청 지역 새일센터를 농어촌형으로 개편하는 등 총 5개소의 농어촌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어업종사 여성의 역량 강화

137. 농어업경영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후계인력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시 20%까지 여성을 할당하도록 하는 여성농어업인 우선선발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농업후계자 1,849명 중 326명(17.6%)의 여성이, 어업후계자는 1,000명 중 169명(16.9%)의 여성이 선정되었다. 2014년 여성농업조합원은 29.7%, 여성임원비율은 3.6%로 늘었으며, 여성어업인조합원은 31.0%, 여성임원비율은 2.2%로 늘었다.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지역 농 · 수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수협법」을 개정하였으며,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38. 또한 농어업인 대상 경영능력 향상 교육에 여성의 참여율을 40%까지 높이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유도하고 있다. 농정관련 위원회 등 공적 의사결정 참여율은 2013년 중앙정부 33.7%, 지방정부 32.1%로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40% 이상 확대를 권고하고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계획에 따른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20% 미만인 위원회는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4 부

➲ 제15조(법)

해당사항 없음

➲ 제16조(혼인과 가족생활)

형법상 간통죄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의한 간통죄 폐지

139.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부　　록

부록 Ⅰ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조항		제7차 권고사항(2011)	이행사항
제 1 영역	제2조 당사국의 의무	- 협약, 선택의정서, 이에 따른 견해 및 권고를 정부 부처, 국회의원, 사법부 및 사법공무원 등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 결과 국회 보고('11.10.) - 이행 방안 설명회 개최('11.12) - 심의 결과 보고서 제작·유관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배포('12.12.) - 여성·아동·청소년·가족 관련 조약집 발간·배포('13.2.) - 관계부처 점검회의('12.12.) 등 동협약과 여성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에 대해 노력을 했으며 협약 홍보를 위한 관계 부처 합동 이행 점검회의 개최(연1회) 「유엔 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사항」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 모니터링 실시(연2회) - 협약 및 선택의정서 주요 내용에 대한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 차별금지법 신속한 제정을 위한 조치	-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입법사례 등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 과제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포함('12.3.)
		- 젠더, 청소년, 가족 업무의 권한과 책임, 인적·재정적 배분 정확히 규정, 여성가족부 업무수행의 수평적, 수직적 일관성을 보장하는 조정기구 수립할 것	- 2014년 제정,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의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위원회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각 부처에 양성평등 책임관 혹은 여성정책책임부서를 설치하여 정책 협의·조정을 내실화함
		-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조언을 제공, 조정 및 감시할 것과 성별 영향평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할 것	-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2012년부터 법에 근거하여 대상 정책이 기존 사업에서 법령, 계획까지 확대됨 - 성인지 예산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 및 작성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한 작성내용의 내실화하고 있음

조항		제7차 권고사항(2011)	이행사항
제 1 영역	제2조 당사국의 의무	- 여성정책전담부서 재설치 및 여성정책 책임관 복귀 조치를 취할 것	- 교육부, 기재부, 안행부, 복지부 등 여성정책 수행에 중요한 부처에 여성정책 전담인력을 배치함
		- 한국 정부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조약들을 비준할 것-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 등 각종 여건이 대규모의 비전문 인력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 고용허가제 시스템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등은 사회보장, 사법제도, 고용제도, 과세, 선거 및 교육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그 가입 여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제3조 2조의 실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	- 본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 시,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을 충분히 이용할 것이며, 차기 보고서에 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과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5~2017) 수립 시 북경 행동강령을 원칙으로 참고함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젠더 관점을 통합시키고 본 협약의 조항들을 명확히 반영할 것이며, 차기 보고서에 그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	-「새천년 개발목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노력 {외교부 제2차관 주재 범정부 T/F 출범 및 Post-2015 코리아 포럼(2013.8)을 출범하여 국내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파트너십 강화} - 국제기구와 여성의제 관련 실질적 협력 확대 : UN WOMEN에 기여금 지원과 인력 파견지원(연 $470만불 이상 지원)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직면하고 있는 압박과 우려를 공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준수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상기시키고, 그 신뢰성, 공신력을 되찾기 위한 감시 기능을 촉구	- 직급 상향 조정 11명, 부서 신설 1과, 인력 증원 21명('10~'11년)
	제4조 적극적 조치	- 공적인 생활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반 권고 25호(2004) 시행을 강화할 것 - 일반 권고 25호(2004)에 따르면,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실현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정책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정부업무평가 행정관리역량(인사운영 부문)에 여성관리자 임용실적 평가지표 반영('13.3.) - 부처별로 과장급, 고위공무원 직위에 여성 1명 이상 임용 권고('13.3.) - 외무공무원(5급,7급) 공개 채용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실시 - '13년부터 실시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조항		제7차 권고사항(2011)	이행사항
제 1 영역	제4조 적극적 조치	- 본 협약의 제7, 8, 10, 11, 12, 14조의 이행과 관련해 가능한 다양한 조치들(할당제, 기준, 목표제, 인센티브 등)을 이용할 것을 요청	(일반 외교 분야)의 경우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 여성 관리자 후보군 사전 추천 실시('11년~) - 제2차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계획 수립('12년)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과제를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12년) - 공공부문 여성인재 연1만명 발굴('11.~'12년) - 정치, 민간, 학계 등의 여성대표성에 대한 통계 자료 등 수집('12년)
	제5조 사회문화적 행동양식의 변화	- 가정폭력과 성폭력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통합 전화 회선 설치('12.11.) -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신고·상담 전화 포스터 전국 초중고교 학급별 배포('13.4 18만부)
		- 기소를 위해 성폭력 성인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하는 것에 관한 조항 제거를 검토 및 개정을 요청	- 2014년 성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친고죄 조항폐지. 관련 내용으로 하는 형법,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12.12.) 및 시행('13.6.)
		- 여성 경찰관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와 방안을 취할 것	- 여경 비율은 2008년 5.8%에서 2014년 14%로 증가, 여경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어 2017년까지 10%를 목표로 함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그 방지를 위한 의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을 통한 가정폭력 인식 제고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의무화 시행('13.6.~),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설치('13.4.~)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센터확충 및 시설 확대 - 성폭력, 가정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전국적 캠페인 실시('13.11.)
		- 부부강간 범죄화를 위한 모든 입법적 조치 관련	- 현행법상 강간의 대상은 '사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입법 추진계획 없음 - 부부간강죄 인정 대법원판례로 입법적 요구 해소 *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부강간죄' 인정

조항		제7차 권고사항(2011)	이행사항
제 1 영역	제5조 사회문화적 행동양식의 변화	- 여성에 관한 폭력에 대한 조사 방법개선 ; 1.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폭력 확산 현황, 원인, 결과를 조사할 것 2. 여성 폭력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를 수집할 것 3. 이를 차후 해결을 위해 심화된 종합 대책 또는 조치 결과를 포함시킬 것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하여 여성폭력의 현황 및 원인 등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13)하여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 강화함. - 이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지정하여 가정폭력 방지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
		- 교육자, 보건존문가, 사회복지사들이 여성폭력 관련법을 숙지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며 그들이 신고의무를 충실히 높일 수 있도록 교육시킬 것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근거가 있으며,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교육 실시
	제6조 여성 인신매매와 성매매 금지	- 인신매매를 범죄의 하나로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개정하고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할 것	-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국회 비준 동의안 국회통과(2015.5.29.)
		- 외국인 여성들을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입법 및 여타 조치들을 취할 것	-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E-6비자 발급 관련 미비점 보완, 성매매·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방안 논의 - 미등록 중개업체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13.6.) - 국제결혼피해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시행('13.9.)
		- 인신매매 희생자인 여성들과 여아들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보다 심화된 조치들을 취할 것	- 성매매피해 상담소, 지원시설 및 자활 지원센터('15년 91개소)를 통해 상담, 법률·의료, 학업·직업훈련 등 지원
		- 여성의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관여한 여성들이 처벌되지 않도록 관련 형법과 정책 법안들을 재검토할 것	- 성매매 관련 비범죄화에 관해서, 성매매피해 여성의 범위를 확대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예정

조항		제7차 권고사항(2011)	이행사항
제 2 영역	제6조 여성 인신매매와 성매매 금지	- 성매매로 착취당한 여성들과 여아들에게 재활 및 경제적 권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특성에 맞는 자활 컨설팅 등 실시('13・'14)
		- 외국인 여성들이 일하는 업소들에 대한 효과적인 현장 감시 장치를 설립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외국인 여성 고용 유흥업소 단속 및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 성매매 강요 등 전력 공연기획사 등에 대한 외국인 초청제한 기준 마련('11.8.)
	제7조 국가의 정치 및 공적 영역에서의 평등	- 의사결정지위에 관한 현행 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참여 증가율이 다소 느리게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	-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8. 6)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기업 인증 부여제 시행하고 있음.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08년 9개에서 2014년 444개로 늘어남. 2014년에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경영 활성화를 위한 별도 인증 기준 마련 -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수립('13~'17년) - 새일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 일-육아-훈련 병행이 가능한 여성친화적 훈련 방식 개발 및 시행
	제9조 국적	-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들 가운데 포함돼있는 모든 차별적인 조항들을 삭제 및 수정할 것을 권고	- 현행 국적법 상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음('97.12.개정, '98.6.시행)
제 3 영역	제10조 교육	- 모든 수준의 교과서 개정, 교사들에 대한 의무적인 성인지 훈련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 제도화할 것	-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법・규정 및 현행 교육 과정 분석('13.3.~7.) - 양성평등, 인권교육 등이 강화된 2009년 개정 초・중・고 교과서 보급 확대 - 자격연수 표준교육 과정에 의거 자격 연수 시 양성평등교육 실시('12년~), 시・도 교육청에 양성평등교육 관련 직무 연수과정 개설 권고 추진('14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격교육 연수원 인가('10.7.)

조항		제7차 권고사항(2011)	이행사항
	제10조 교육		- 범교과적인 양성평등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강화 - 초 1~2학년 및 중 1학년생 대상 양성평등, 인권 교육 등이 강화된 교과서를 개발 및 보급('13년)
		- 소녀, 여성들이 비전통적인 연구와 직업 분야를 선택하도록 적극적 장려	- 여성 과학인력 양성 촉진을 위한 진로 역량 개발방안에 관한 정책연구('12.12.) - 진로와 직업 교과 내용의 구성과 수업에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북 제작('12년)
		- 성교육 10시간 의무과정에 대한 감시장치 수립, 초중등 교육의 정규과정으로 소년, 소녀들을 대상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적절한 성교육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	- 성교육 10시간 의무과정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 및 시달('11.9.) - 연간 15시간(기존 10시간에서 개정 및 시행 ('13.1.) - 발달관계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해, '학교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보급('11.10.)
제 3 영역	제11조 고용	- 다음 회기 보고서에 노동 시장 지표에 관한 분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 이를 통해 노동 시장 내 여성들의 상황을 감시 및 보호하는 모니터링 장치로 쓸 것	- 시장지표 : 15세 이상 남녀 인구, 남녀 경제활동 인구,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남녀 취업자 수, 남녀 실업자 수, 남녀 실업률, 남녀 고용률, 여성 비정규직 비율 - 구체적 내용 보고서 11조에 제시
		-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상황을 성실히 감시, 기업들로 하여금 여성들의 풀타임 및 정규직 접근을 늘리게 함	- 여성다수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모집, 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을 통해 성차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음
		- 시간제 및 단기 노동자들의 유급출산 휴가 등의 혜택을 늘려 비정규직을 보호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한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 운영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집행	- 남녀고용평등법 점검을 위한 사업장 점검 및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지도 감독 매년 실시 - 동일한 사업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관련법에 규정 - 이 조항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임금 차별시 1천만원 이하, 임금 외 금품 차별시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남녀의 임금조건을 달리하여 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집과 채용시 성차별 여부를 모니터링

조항		제7차 권고사항(2011)	이행사항
제 3 영역	제11조 고용		- 성별임금격차 원인인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맞춤형 운영
		- 현행 법률이 준수되도록 효과적인 감시 장치를 두고 여성 노동권 침해, 성희롱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두도록 보장할 것	- 여성의 근로조건 침해·성희롱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매년 여성다수고용사업장등을 중심으로 사전 지도·점검 실시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항의제기 절차 보장을 위한 신고체제 운영 및 고용평등상담실 지정·운영(전국 15개소) - 여성근로자 고용확대를 위해 차별 모니터링 지속 실시
		- 가사의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주로 맡겨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수가 제한되어 있음	- 육아휴직특례("아빠의 달")제도를 도입하여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남성 공무원도 여성 공무원과 같이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함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에게 휴가를 보장하는 아빠의 달 도입 및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
		일·가정 양립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 내 남성과 여성의 공동 책임을 증진시키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원을 강화	-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8. 6)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기업 인증 부여제 시행하고 있음.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08년 9개에서 2014년 444개로 늘어남. 2014년에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경영 활성화를 위한 별도 인증 기준 마련 -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수립('13~'17년) - 새일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 일-육아-훈련 병행이 가능한 여성친화적 훈련 방식 개발 및 시행
	제12조 건강	여성들의 정신 건강 상황 특히 우울증 다루기 위한 조치 취할 것, 자살 예방 계획 이행하고 결과 정보 제공할 것	- 정신건강의학과 건강보험 청구 제도 변경 시행('13년) - 주요 정신건강문제의 조기 발견을 위해 생애

조항		제7차 권고사항(2011)	이행사항
제 3 영역	제12조 건강		주기별 정신건강 자가 평가 제도 시행('13년) - 자살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및 중앙자살예방센터 설치, 정신보건센터 확대 등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 - 자살 고위험군 관리 및 자살예방 기반 구축 - 노인장기요양 제공
		- 저임금 노령 여성들의 건강 및 사회서비스 접근 보장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 단기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제공('13.3.부터 시행) - 독거노인 대상 노인돌봄 및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제공 - 저임금 노령여성 건강·사회서비스 지속 확대 추진
		- 낙태를 한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특별한 주의 기울일 것 -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들을 삭제할 목적으로 관련 형법 등 낙태관련법 검토 요청 - 불안전한 낙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할 것	- 낙태 예방 교육·홍보 및 임산부에 대한 약물 정보 제공 - 낙태 관련 국민 인식조사('12년)를 통한 정책 수요 파악
	제13조 경제사회적 보장	- 국립 보육시설이 제한되어 있고 보육시설이 민간화되며 높은 보육료로 인해 저소득 여성들의 이용을 불가하게 함	-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13.1.~)를 통한 양질의 어린이집 확충 - 민간어린이집에 맞벌이 가정자녀 우선입소 기준 적용을 의무화('12.7.~)하여 취업여성 보육서비스 이용 지원 -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 여성가구주 자녀 보육시설 지속 확대
	제14조 농촌여성	- 농촌 여성이 토지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재정적 지원 및 보조를 제공하는 정책 이행 노력 - 성인지적 농촌발전 전략 및 프로그램 이행, 젊은 여성들의 농업 종사를 진흥하기 위한 조치와 더불어 지방 발전 전략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권고	-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1~2015)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확대 및 권리 향상을 위한 지원 - 여성농어업인이 전문성, 리더십을 겸비하도록 경영역량 강화 교육 및 창업 지원 확대 - 귀농(귀촌)여성을 위한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 인력 지원 - 여성 농어업인의 양육 부담 완화 및 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건강관리 서비스 및 공동취사 지원 -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

조항		제7차 권고사항(2011)	이행사항
제 4 영역	제16조 혼인과 가족생활	- 한국정부가 본 협약 제 16조 1(g)항의 유보 철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협의 종료시점과 철회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을 신속히 설정할 것	- 유보조항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해석과 타국가의 관행, 조약법 해석에 대한 일반원칙 등을 고려하여 유보철회에 관하여 긍정적 검토 중임
		- 본 협약 제16조와 일반권고 제21호(1994)에 따라서 이혼 시 부부공동 재산의 동일한 분할 규칙을 입법화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이혼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결정에 있어 과실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취할 것을 권고	- 이혼 시 부부공동 재산의 동등 분할 규칙을 입법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법원은 연금·퇴직금을 비롯하여 무형 재산에 대해서도 이미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현행법에서도 과실 여부는 재산분할의 고려 요소가 아님

부록 Ⅱ

| 표 1 | 성별영향 분석평가 추진 기관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기관 수	292	293	302	304	304
과제 수	2,401	2,954	14,792	20,372	26,438
기관당 평균과제 수	8.2	10.1	49.0	67.0	87.0

자료 : 여성가족부(2015),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표 2 | 지방 성인지예산 추진 실적 현황

(단위 : 개, 억원)

연도	2013		2014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총계	11,803	125,990	13,299	147,342
여성정책추진사업	3,244	49,948	8,108	69,70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058	69,000	3,512	69,495
자치단체 특화사업	1,501	7,042	1,679	8,146

자료 : 안전행정부(2013~2014),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재구성

| 표 3 | 국가 성평등지수 수준 추이

(단위 : 완전 성평등=100.0)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 체		64.8	66.0	66.5	67.3	68.5
부문	가족	55.7	58.1	59.7	60.9	62.7
	복지	65.6	67.1	67.6	69.3	69.0
	보건	95.5	96.0	96.5	96.5	96.4
	안전	67.0	64.1	61.5	63.6	58.3
	경제활동	66.5	67.9	69.4	70.1	70.7
	의사결정	14.0	15.0	16.2	17.3	17.8
	교육 · 직업훈련	81.6	85.4	86.8	85.9	96.2
	문화 · 정보	83.3	84.2	84.0	84.4	85.1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4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 표 4 | 대한민국 UN Women 기여금 공여현황

(단위 : 천불)

연도	2011	2012	2013	2014
기여금	4,887	4,756	7,939*	5,088

자료 : http ://www.unwomen.org * (외교부 : 아프카니스탄 양성지원 사업 3,432천불 지원)

| 표 5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단위 :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여성위촉비율	22.3	24.8	25.7	27.7	31.7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4 하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현황 조사결과

| 표 6 | 여성 지방정치(단체장, 의회의원) 참여 비율

(단위 : 명, %)

구분	선거명		계	성별	
				남	여(%)
제4대 (2006)	합계(구성비율)		3,867	3,338	529(13.0)
	시 · 도지사선거		16	16	-
	자치구 · 시 · 군의 장		230	227	3(1.0)
	시 · 도의원	지역구	655	623	32(4.0)
		비례대표	78	21	57(73.0)
	시 · 군 · 구의원	지역구	2,513	2,403	110(4.0)
		비례대표	375	48	327(87.0)
제5대 (2010)	합계(구성비율)		3,893	3,148(80.0)	745(20.0)
	시 · 도지사선거		16	16	-
	자치구 · 시 · 군의 장		228	222	6(2.6)
	시 · 도의원	지역구	680	625	55(8.0)
		비례대표	81	23	58(71.0)
	시 · 군 · 구의원	지역구	2,512	2,238	274(9.2)
		비례대표	376	24	352(93.0)
제6대 (2014)	합계(구성비율)		3,930	3,076	854(21.7)
	시 · 도지사선거		17	17	-
	자치구 · 시 · 군의 장		226	217	9(4.0)
	시 · 도의원	지역구	705	647	58(8.2)
		비례대표	84	29	55(65.5)
	시 · 군 · 구의원	지역구	2,519	2,150	369(14.6)
		비례대표	379	16	363(95.8)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4).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 표 7 | 여성 국회의원 비율

(단위 : 명, %)

구분	선거명	계	성별	
			남	여(%)
제18대 (2008)	합계	299	258	41(13.0)
	비례대표	54	27	27(50.0)
	지역구	245	231	14(5.0)
제19대 (2012)	합계	300	253	47(15.7)
	비례대표	54	26	28(51.9)
	지역구	246	227	19(7.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 제19대 국회의원총람

| 표 8 |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현황

(단위 :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여성근로자 비율	30.1	31.2	32.4	33.6	35.6
여성관리자 비율	9.9	10.5	11.0	11.6	13.9

자료 : 고용노동부(201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작성시점 : 작성대상연도 익년 말 기준

| 표 9 | 성폭력 범죄 수사단서별 증감률

(단위 : 건, %)

연도	전체 발생건수	현행범	신고건수			미신고건수 (인지수사)
			전체 신고건수	피해자 신고	고소	
2011상	10,194	1,288	6,861	4,185	1,760	2,045
2011하	11,765	2,062	7,817	4,946	2,191	1,886
증감율	15.4	60.1	13.9	18.2	24.5	-7.8
2012상	9,514	1,728	6,410	4,105	1,820	1,376
증감율	-19.1	-16.2	-18.0	-17.0	-16.9	-27.0
2012하	13,419	2,196	8,884	5,979	2,261	2,339
증감율	41.0	27.1	36.6	45.7	24.2	70.0
2013상	12,235	2,074	6,875	4,515	1,915	3,287
증감율	-8.8	-5.6	-22.6	-24.5	-15.3	40.5
2013하	16,549	2,986	8,731	6,404	1,601	4,831
증감율	35.3	44.0	27.0	41.8	-16.4	47.0

출처 : 형사정책연구소식(2014) 봄 129호, p.19

| 표 10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전체피해자)

연도	피해유형(명)					지원내용(건)					
	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치료	사회적지원 등
2012	22,333	16,735	3,023	219	2,356	153,425	69,723	31,706	25,454	17,047	9,495
2013	27,450	20,597	4,503	227	2,123	202,322	87,244	43,043	34,799	18,914	18,322
2014	28,487	20,693	5,517	239	2,038	260,005	92,610	62,584	47,488	31,577	22,253

자료 : 여성가족부(2014)

| 표 11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현황

(단위 : 건, %)

연도	계	가정폭력	가족문제	부부갈등	이혼	중독	성폭력	성상담	성매매	법률	기타
2010	183,240	60,489	9,743	9,411	5,688	3,228	8,688	5,695	1,497	4,561	74,240
	100(%)	33.0	5.3	5.1	3.1	1.8	4.7	3.1	0.8	2.5	40.5
2011	191,050	71,070	9,639	8,453	4,249	3,206	9,700	5,382	2,027	3,783	73,541
	100(%)	37.2	5.0	4.4	2.2	1.7	5.1	2.8	1.1	2.0	38.5
2012	223,109	94,985	10,181	8,780	4,453	2,741	12,155	3,883	2,324	4,488	79,118
	100(%)	43	5	4	2	1	5	2	1	2	36
2013	253,616	122,229	10,215	8,604	4,382	2,288	15,636	3,724	2,981	4,642	78,915
	100(%)	48.2	4.0	3.4	1.7	0.9	6.2	1.5	1.2	1.8	31.1
2014	265,792	137,560	8,498	6,773	4,125	2,324	17,007	1,789	3,070	4,470	80,176
	100(%)	51.8	3.2	2.5	1.6	0.9	6.4	0.7	1.2	1.7	30.2

자료 : '09년 ~'13년은 여성가족부(2014), 2013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p. 148
'14년은 여성가족부(2015), 2014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p. 11.

| 표 12 |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단위 : 개소, 건)

연도	가정폭력 상담소수	상담실적		
		계	가정폭력	기타
2010	251	296,686	135,069	161,617
2011	244	288,751	126,240	162,511
2012	228	272,580	118,178	154,402
2013	196	260,452	125,694	134,758
2014	201	291,244	143,190	148,054

자료 : '10년~'13년은 여성가족부(2014), 2013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p. 148
'14년은 여성가족부(2015), 2014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p. 11.

| 표 13 |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단위 : 개소, 건)

연도	성폭력상담소 수	상담실적		
		계	성폭력	기 타
2010	160	138,900	68,530	70,370
2011	165	129,983	65,922	64,061
2012	172	144,692	77,099	67,593
2013	169	145,446	83,981	61,465
2014	154	146,750	89,975	56,775

자료 : 여성가족부(2014).

| 표 14 | 상담소 및 보호시설 국비 지원현황

(단위 : 개소)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원상담소	계	180	180	180	185	189
	가정폭력	83	83	83	83	83
	성 폭 력	87	87	87	92	96
	통 합	10	10	10	10	10
지원 보호시설	계	83	84	86	89	97
	가정폭력	64	65	66	65	69
	성 폭 력	19	19	20	24	28

자료 : '06년~'12년은 여성가족부(2014), 2013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p.153
'13년~'14년은 여성가족부 자료.

| 표 15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및 다누리콜센터 상담실적

(단위 : 건)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1~3월	4~12월
계	54,194	69,743	87,215	89,887	110,51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54,194	58,044	66,890	68,524	18,010	86,358
다누리콜센터	-	11,699	20,325	21,363	6,148	

자료 : 여성가족부

| 표 16 | 이주여성쉼터 입소 현황

(단위 : 명)

연도	평균 보호인원	연중 입소인원			연중 퇴소인원			현원		
		소계	피해자	동반 아동	소계	피해자	동반 아동	소계	피해자	동반 아동
2010	229	1,336	935	401	1,336	932	404	216	153	63
2011	232	1,142	761	381	1,146	773	373	212	141	71
2012	247	1,114	751	363	1,088	733	355	238	159	79
2013	277	1,254	819	435	1,278	844	434	265	169	96
2014	291	1,281	823	458	1,233	800	433	311	189	122

자료 : 여성가족부

| 표 17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연도별 설치현황

(단위 : 개소)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87	90	88	88	91
성매매피해 상담소	27	26	26	26	27
일반 · 청소년 지원시설	40	41	39	39	40
외국인 지원시설	1	1	1	1	1
그룹홈	10	11	11	11	12
자활지원센터	8	9	9	9	9
대안교육 위탁기관	1	2	2	2	2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주 : 기존 외국인지원시설 3개소는 이주여성쉼터로 통합('09년)되고 '10년에 1개소 신설

| 표 18 | 성매매피해청소년 교육 및 관리 실적

(단위 :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실적	372	333	355	278	355

자료 : 여성가족부(2015), 2015년 주요업무참고자료, p.461

| 표 19 | 성매매상담소 지원 실적

(단위 : 건,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담서비스	건수	45,817	49,366	57,172	57,261	61,896
	인원	7,360	6,846	6,809	6,557	6,031

자료 : 여성가족부
주 : 상담서비스는 탈성매매, 빚, 구타감금, 성폭행 위협, 질병, 인신매매, 진로, 법률, 주거문제 등에 대한 것임

| 표 20 | 구조지원 사업 운영실적

(단위 : 건)

연도	계	의료	법률	직업훈련 · 진학교육 지원
2010	32,131	14,246	14,228	3,657
2011	36,755	17,491	15,048	4,216
2012	39,766	20,007	17,889	1,870
2013	38,976	18,833	17,087	3,056
2014	38,849	19,908	15,739	3,202

자료 : 여성가족부(2005~2014), 여성백서(해당년도)

| 표 21 | 국가직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가공무원 전체 여성비율	46.1	47.2	47.0	48.1	48.1

자료 : 안전행정통계연보(2009~2014)에서 재정리

| 표 22 | 지방직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공무원 전체 여성비율	32.0	32.4	32.8	33.5	34.1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7.4	8.0	8.6	9.3	10.3

자료 : 안전행정통계연보(2009~2014)에서 재정리

| 표 23 | 여성 판 · 검사 현황

(단위 :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판검사 전체 여성비율	20.9	22.6	24.3	25.7	26.5

자료 : 안전행정통계연보(2009~2014)에서 재정리

| 표 24 |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단위 :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목표	7.9	10.0	9.1	9.9	10.9
실적	7.4	8.4	9.3	9.9	11.0

자료 : 인사혁신처,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 작성시점 : 작성대상연도 익년 6월

| 표 25 | 전문 · 관리직 여성비율

(단위 : 명,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여성취업자	9,772	9,914	10,091	10,294	10,494
여성 전문 · 관리직 종사자[1)]	2,016	2,083	2,157	2,223	2,348
구성비[2)]	20.6	21	21.4	21.6	22.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 전문 · 관리직 종사자 구성비

주 : 1)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수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업의 분류 중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종사하는 여성취업자

2)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 = (여성 전문관리종사자 수/여성 취업자 수) × 100%

| 표 26 | 공립학교 여성교장 · 교감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교 장			교 감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증감률(%p)
2012	9,475	1,534	16.2	9,575	3,142	32.8	19,050	4,676	24.5	-
2013	9,494	1,671	17.6	9,583	3,517	36.7	19,066	5,188	27.2	2.7 ↑
2014	10,116	2,020	20.0	10,162	3,940	38.8	20,278	5,960	29.4	2.2 ↑

자료 : 교육부, 시도교육청 취합자료, 작성시점 : 작성대상연도 익년 4월

| 표 27 | 대학 여교수 비율

(단위 :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19.0	19.5	20.2	20.8	21.5
국공립	13.2	13.4	13.7	14.1	14.5
사립	21.1	21.8	22.6	23.2	24.0

자료 : 교육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작성시점 : 작성대상연도 익년 4월

| 표 28 | 학교급별 진학률

(단위 : %)

연도	초등학교 → 중학교[1]		중학교 → 고등학교[1]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0	99.9	99.9	99.7	99.7
2012	99.9	99.9	99.7	99.7
2013	99.9	99.9	99.7	99.7
2014	**99.9**	**99.9**	**99.7**	**99.7**
연도	고등학교 → 대학(교)[2]		대학 → 대학원 등[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0	77.6	80.5	7.1	5.5
2012	68.7	74.3	7.1	5.8
2013	67.4	74.5	7.6	6.0
2014	**67.6**	**74.6**	**7.6**	**6.1**

주 : 1) 기타학교 진학 포함 2) 대학, 4년제 일반대학교, 교육대학, 산업대학 등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내부자료

| 표 29 | 외교부 여성 직원 비율 추이

구분	성 별			
	남성인원 및 비율		여성인원 및 비율	
2010년	1,488명	71.13%	604명	28.87%
2011년	1,460명	69.52%	640명	30.48%
2012년	1,469명	67.85%	696명	32.15%
2013년	1,448명	67.32%	703명	32.68%
2014년(전체)	1,439명	67.27%	700명	32.73%
2014년(본부)	566명	52.07%	521명	47.93%

자료 : 외교부

| 표 30 | 전공분야별 대학교 학생 분포

(단위 : %)

연도	성별	계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2005	전체	100.0 (1,859,639)	13.5	13.5	28.1	4.3	27.9	12.6	3.4
	남성	100.0 (1,175,401)	9.2	9.2	28.1	2.7	38.5	11.3	2.7
	여성	100.0 (684,238)	21.0	21.0	28.1	7.0	9.7	14.9	4.8
	여성비율	36.8	57.1	57.1	36.8	60.6	12.8	43.4	51.2
2010	전체	100.0 (2,028,841)	13.2	30.3	4.2	25.9	12.0	3.9	10.5
	남성	100.0 (1,250,655)	9.4	29.9	2.9	36.2	10.9	2.6	8.1
	여성	100.0 (778,186)	19.2	30.9	6.3	9.5	13.8	5.8	14.5
	여성비율	38.4	56.0	39.1	57.4	14.0	44.1	57.9	52.8
2013	전체	100.0 (2,120,296)	12.9	29.4	4.1	26.0	12.2	4.9	10.6
	남성	100.0 (1,284,593)	9.5	28.9	2.9	36.3	11.2	3.1	8.1
	여성	100.0 (835,703)	18.0	30.1	5.9	10.2	13.7	7.6	14.5
	여성비율	39.4	55.2	40.4	57.3	15.4	44.3	61.6	53.8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표 31 | K-Girls' Day 여학생 기술체험 프로그램 실적

(단위 : 명, %)

연도	구분	신청인원	참석인원	참석률(%)
2014	중학생	326	326	100
	고등학생	1,142	1140	99.8
	대학생	566	410	72.4
	합계	2,034	1,876	92
2015	중학생	381	378	99.2
	고등학생	1,225	1,198	97.8
	대학생	341	276	80.9
	합계	1,947	1,852	95.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32 | K-Girls' Day 여학생 기술체험 프로그램 참여 학생 인식 조사결과

(단위 : 명, %)

구분	프로그램 참여 전			프로그램 참여 후		
	조사내역	응답수	비율	조사내역	응답수	비율
이공계 직업에 대한 인식 설문	매우 긍정적	94	6.2	매우 긍정적	254	16.2
	긍정적	429	28.3	긍정적	714	45.6
	보통	691	45.6	보통	478	30.5
	부정적	255	16.8	부정적	109	7
	매우 부정적	13	0.9	매우 부정적	10	0.6
	무응답	34	2.2	무응답	1	0.1
	계	1,516	100	계	1,516	1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33 | 여성과 경제활동

(단위 : 천명,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구분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15세이상 인구	40,590	19,849	20,741	41,052	20,076	20,976	41,582	20,328	21,254	42,096	20,583	21,513	42,513	20,795	21,718
경제활동 인구	24,748	14,492	10,256	25,099	14,683	10,416	25,501	14,891	10,609	25,873	15,071	10,802	26,536	15,387	11,149
경제활동 참가율	61.0	73.0	49.4	61.1	73.1	49.7	61.3	73.3	49.9	61.5	73.2	50.2	62.4	74.0	51.3
취업자	23,829	13,915	9,914	24,244	14,153	10,091	24,681	14,387	10,294	25,066	14,573	10,494	25,599	14,839	10,761
실업자	920	577	342	855	530	325	820	504	316	807	498	309	937	548	389
실업률	3.7	4.0	3.3	3.4	3.6	3.1	3.2	3.4	3.0	3.1	3.3	2.9	3.5	3.6	3.5
고용률	58.7	70.1	47.8	59.1	70.5	48.1	59.4	70.8	48.4	59.5	70.8	48.8	60.2	71.4	49.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 34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비정규직	33.4	15.5	17.8	34.2	16	18.2	33.3	15.5	17.8	32.5	15.1	17.4	32.3	15.0	17.3
기간제	14.6	7.1	7.5	15.2	7.2	8.0	15.3	7.4	7.9	15.1	7.3	7.8	14.6	7.1	7.5
시간제	9.5	2.5	7	9.7	2.7	7	10.3	2.9	7.4	10.3	2.9	7.4	10.8	3.1	7.7
비전형	13.4	7.1	6.3	13.9	7.2	6.7	12.8	6.8	6.1	12.2	6.5	5.7	11.2	5.9	5.3

자료 : 고용노동부

| 표 35 |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임금 지원 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건수	751	1738	2,653	3,131	3,745
연인원	6,984	16,980	26,753	35,144	43,022
금액	14,968	17,957	21,680	27,926	34,592

자료 : 고용노동부, 2014 고용보험백서

| 표 36 | 경력단절여성고용촉진지원 운영실적

(단위 : 명, %)

지원	연도	참여자수	수료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직업교육 훈련	2010	9,256	8,508	4,640	54.5
	2011	7,084	6,567	3,899	59.4
	2012	9,140	8,412	5,143	61.1
	2013	15,145	14,041	8,089	57.6
	2014	15,094	14,124	2,393 ('14.상반기 기준)	61.0 ('14년 상반기 기준)
새일인턴제	2010	4,948	4,308	3,952	91.7
	2011	4,262	3,518	3,390	96.4
	2012	5,363	4,637	4,414	95.2
	2013	6,146	5,363	5,189	96.8
	2014	6,083	5,030 (연계중 인원 포함)	3,556	93.0

자료 : 여성가족부, 「2014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통계」; 고용노동부, 2014 고용보험백서

| 표 37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인원	2,088	2,575	3,257	3,722	5,039
연인원	2,089	2,592	3,300	3,798	5,209
지원액	4,805	6,221	7,968	9,225	13,627

자료 : 고용노동부, 2014 고용보험백서

| 표 38 | 연도별 육아휴직 급여지원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인원			지급액
	전체	남성	여성	
2010	41,732	819	40,913	178,121
2011	58,134	1,402	56,732	276,261
2012	64,069	1,790	62,279	357,798
2013	69,616	2,293	67,323	420,248
2014	76,833	3,421	73,412	500,663

자료 : 고용노동부, 2014 고용보험백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 표 39 | 가족친화인증기업 · 기관 신규등록현황

(단위 : 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3	86	101	279	444
대기업	7	22	23	84	77
중소기업	6	24	29	111	257
공공기관	10	40	49	84	100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 기관현황(http ://ffm.mogef.go.kr)

| 표 40 | 차별적 고용관행 및 지도 · 점검 실적

(단위 : 개소, 건수)

연도	점검사업장수	위반사업장수	위반건수
2010	1,096	1,067	6486
2011	985	853	4,418
2012	1,132	1,107	6,521
2013	920	898	4,729
2014	652	596	2,053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차보고서 」 각년도

| 표 41 | 임신 주수별 유산·사산 보호휴가 일수

구 분		유·사산 보호휴가 일수
추가 (2012.8부터)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임신 12~15주 이내	유·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기존	임신 16~21주 이내	유·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임신 22~27주 이내	유·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임신 28주 이상	유·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자료 : 보건복지부(2013). 「결혼,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가이드 : 마음더하기」

| 표 42 | 신규 HIV/ AIDS 신고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797	768	773	888	868	1,013
남성	743	710	723	827	808	946
여성	54	58	50	61	60	67

자료 : 질병관리본부(2014). 「2013 HIV/AIDS 신고 현황」

| 표 43 | HIV/AIDS 검진 및 상담 실적

(단위 : 건)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동성애자	상담	3,022	2,991	4,248	3,980	3,989
	검진	730	1,056	1,361	1,684	1,716
외국인	상담	627	702	758	1,067	1,115
	검진	204	337	401	447	710

자료 : 보건복지부(2013). 「2013 보건복지백서」

| 표 44 | 성별 우울증 환자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495,619	517,142	534,854	591,276	591,148
남성	150,488	157,012	164,292	183,082	184,183
	30.4	30.4	30.7	31.0	31.2
여성	345,131	360,130	370,562	408,194	406,965
	69.6	69.6	69.3	69.0	68.8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 관심통계 – 우울증」

| 표 45 | 성별 장기요양 실인원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10	2011	2012	2013
전 체	348,561	360,073	369,587	399,591
남 성	104,199	106,004	107,387	114,510
여 성	244,362	254,069	262,200	285,081
여성 %	70.1	70.6	70.9	71.3

자료 : 통계청(2010~2012). 「성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국민건강보험공단(2010~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표 46 | 연도별 아동양육비 등 지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117,000	129,471	174,140	182,134	179,481
아동양육비	66,122	71,493	72,536	73,020	70,916
교 육 비	50,878	57,978	–	–	-
추가아동양육비	–	–	1,848	2,323	2,484
학용품비	–	–	99,486	106,511	105,752
생 계 비	–	–	270	280	329

출처 : 여성정책연차보고서(각년도)

| 표 47 | 연도별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실적

(단위 : 건)

연도	처리대상	법률구조건수				기타	처리중
		소계	자녀양육비 청구	자녀인지 청구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2010	1,634	801	372	10	419	827	6
2011	2,653	942	405	25	512	1,701	10
2012	3,457	1,167	454	43	670	2,280	10
2013	4,034	1,403	456	39	908	2,609	22
2014	4,245	1,476	431	42	1,003	2,750	19

출처 : 여성정책연차보고서(각년도)

| 표 48 | 국민연금 가입자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11	2012	2013	2014
전체	19,885,911	20,329,060	20,744,780	21,125,135
남성	11,769,499(59.2)	11,824,156(58.2)	11,947,691(57.6)	12,046,242(57.0)
여성	8,116,412(40.8)	8,504,904(41.8)	8,797,089(42.4)	9,078,893(43.0)

자료 : 보건복지부

| 표 49 |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연령별/성별 수급 현황

(단위 : 명, %)

연령	전체	남성	여성
19세 이하	251,834	128,346(51.0)	123,488(49.0)
20 ~ 29세	82,126	37,468(45.6)	44,658(54.4)
30 ~ 39세	57,065	23,379(41.0)	33,686(59.0)
40 ~ 49세	176,704	78,427(44.4)	98,277(55.6)
50 ~ 59세	216,495	123,100(56.9)	93,395(43.1)
60 ~ 69세	158,078	72,280(45.7)	85,798(54.3)
70 ~ 79세	192,221	61,278(31.9)	130,943(68.1)
80세 이상	102,863	19,112(18.6)	83,751(81.4)
전 체	1,237,386	543,390(43.9)	693,996(56.1)

자료 : 보건복지부,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Eighth Periodic Report

Republic of Korea

July 2015

CONTENTS

Ⅰ. Introduction 99

Ⅱ.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during the Reporting Period 103

Part Ⅰ

Article 1 ····· 105

Article 2 ····· 106

A. New legislation ····· 106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ct ····· 106

Child Support Enforcement Act ····· 107

Childcare Support Act ····· 107

B. Revised laws ····· 107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 107

Criminal Code ····· 108

Act on the Preven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 109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Assault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 110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 111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112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 113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king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 113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 ····· 114

Labor Standards Act ····· 115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 115

Act on Livelihood Stability and Memorial Services, etc. for Sexual Slavery Victim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 116

C. Policies ····· 116

Symposiums and education for legal professionals ····· 116

Article 3 ····· 117
Expansion of the Gender Impact Analysis program ····· 117
Expansion of gender budgeting and introduction in local governments ···· 118
Development of the Korean Gender Equality Index and enhancing balance across sectors ··· 119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gender-sensitive development aid projects ····· 119

Article 4 ····· 120
Legal measures to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committees ····· 120
Nomination quota for female politicians ····· 121
Capacity-building support for female human resources in the public sector ··· 122
Affirmative action measures ····· 123

Article 5 ····· 123
Abolition of sex-crime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by the victim ····· 123
Promoting effective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 124
Enhancing efforts to prevent recidivism in sexual offenses ····· 125
Outcomes regarding support for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 126
Prevention and protection efforts for migrant women afflicted by domestic violence ··· 126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measures in regard to sexual assault against the disabled ··· 127
Strengthening victim support by improving the investigation system for child sexual abuse ···· 127
Efforts to rais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incentives, and promotion ··· 128
Enhancing anti-sexual harassment measures at public organizations and workplaces ···· 129

Article 6 ····· 131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prostituted victims ····· 131
Protection of non-Korean prostituted victims ····· 133

Part Ⅱ

Article 7 ····· 134
Proportion of female public officials ····· 134
Proportion of female judges and prosecutors ····· 134
Proportion of female public officials at Level 4 or higher ····· 134
Proportion of female employees at public organizations ····· 135
Proportion of female principals and vice-principals ····· 136
Proportion of female professors at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 136

Article 8 ····· 136
Female human resources in the diplomacy field ····· 136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137

Article 9 ····· 137

Part Ⅲ

Article 10 ····· 138
Proportion of female students in tertiary education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ir majors ··· 138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of female students ····· 138
Enhancing gender equality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 139
Cultivation of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 140

Article 11 ····· 141
Establishment of policies to promote women's economic activities ····· 141
Lifecycle-based support policies for working women ····· 142
Enhanced support for the employment of women with interrupted careers ····· 145
Promoting childcare leave and male participation in childcare ····· 146

Strengthened support for the employment of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and disabled women ····· 147
Efforts to expand work-family balance ····· 149
Increasing the number of businesses certified as family-friendly ····· 150
Expansion of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improved choices of work hours and places ··· 151
Strengthened monitoring of discriminatory employment practices and corrective measures ··· 152

Article 12 ····· 153
Expanded health care for women in early pregnancy ····· 153
Subsidy for medical costs related to pregnancy and childbirth ····· 153
Home-visit helpers for mothers and newborns ····· 153
Expansion of public OB/GYN clinics in areas that lack supporting resources ····· 154
Surveying the status of women's health ····· 154
Promotion of women's reproductive health ····· 155
Prevention of the spread of HIV/AIDS ····· 155
Efforts to promote women's mental health and prevent depression and suicide ··· 156
Expansion of the beneficiaries of long-term care service for aged women ···· 156

Article 13 ····· 157
Expansion of welfare for single-parent households ····· 157
Legal aid service to guarantee the collection of child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 158
Support for the independence of adolescent single parents ····· 158
Relaxing the requirements for full-time housewives on voluntary entry int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 159
Provision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for low-income elderly women ····· 159
Status of female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upport ····· 160

Article 14 ····· 160
Changes in policies for women in agricultural and fishery industries ····· 160
Supporting the national pension payment for women in agricultural and fishery industries ···· 160
Operation of *Saeil* Centers for rural women ····· 161
Building the capacities of women in agricultural and fishery industries ····· 161

Part Ⅳ

Article 15 ····· 163

Article 16 ····· 163
Abolition of the crime of adultery bas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f its unconstitutionality ····· 163

Annexes 165

Annex Ⅰ. Status of Implementation of CEDAW Recommendations ····· 167

Annex Ⅱ. Table 1 ~ Table 49
| Table 1 | Number of organizations and projects subject to Gender Impact Analysis · 180
| Table 2 | Implementation of gender budgeting by local governments ····· 180
| Table 3 | Korean Gender Equality Index ····· 180
| Table 4 | South Korea's contribution to UN Women ····· 181
| Table 5 | Women'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committees ····· 181
| Table 6 | Women's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heads of government bodies, council members) ··· 181
| Table 7 | Proportion of fema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 182
| Table 8 | Proportion of female employees and managers in public organizations ···· 183
| Table 9 | Number of sexual abuse cases by type of report ····· 183
| Table 10 | Services provided by integrated support centers for sexual abuse victims (total victims) ··· 184
| Table 11 | Counseling provided by Women's Hotline 1366 ····· 184
| Table 12 | Counseling services provided by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 184
| Table 13 | Number of counseling cases provided by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s ··· 185
| Table 14 | Number of counseling centers and shelters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 185
| Table 15 | Number of counseling cases serviced by the Emergency Support Center for Migrant Women and the *Danuri* Call Center ····· 185
| Table 16 | Number of residents at shelters for migrant women ····· 186

| Table 17 | Number of support organizations for prostituted victims by year ····· 186
| Table 18 | Education for adolescent victims of prostitution ····· 186
| Table 19 | Counseling provided by counseling centers for prostituted victims ····· 187
| Table 20 | Rescue and support services ····· 187
| Table 21 | Proportion of female state-level public officials ····· 187
| Table 22 | Proportion of female local-level public officials ····· 187
| Table 23 | Proportion of female judges and prosecutors ····· 188
| Table 24 | Proportion of female administrators at Level 4 or higher ····· 188
| Table 25 | Proportion of female professionals and female workers in managerial positions ····· 188
| Table 26 | Female principals and vice-principals in public schools ····· 188
| Table 27 | Proportion of female professors at universities ····· 189
| Table 28 | Rate of advancement to the next school level ····· 189
| Table 29 |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190
| Table 30 | Distribution of male/female students by major ····· 190
| Table 31 | Participation in the K-Girls' Day experience programs ····· 191
| Table 32 | Perception of careers in science/engineering among participants in the K-Girls' Day experience programs ····· 191
| Table 33 |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 192
| Table 34 | Proportion of irregular workers among salaried workers ····· 192
| Table 35 | Wage subsidy for teachers at workplace daycare centers ····· 193
| Table 36 | Outcomes of support for the employment of women with interrupted careers ····· 193
| Table 37 | Financial support for substitute workers for maternity/parental leave ····· 194
| Table 38 | Parental care benefits provided by year ····· 194
| Table 39 | No. of companies/organizations granted Best Family-Friendly Management Certification ····· 194
| Table 40 | Results of monitoring and inspection of discriminatory employment practice ····· 195
| Table 41 | Length of post-miscarriage/stillbirth maternity leave by stage of pregnancy ····· 195
| Table 42 | Status of new HIV/AIDS report ····· 195
| Table 43 | Medical examination and counseling provided for HIV/AIDS ····· 196
| Table 44 | Number of patients with depression by gender ····· 196
| Table 45 | Number of long-term care beneficiaries by gender ····· 196
| Table 46 | Number of beneficiaries of subsidies for childcare and child education ····· 197
| Table 47 | Number of cases supported for the enforcement of child support ····· 197
| Table 48 | Number of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 197
| Table 49 | Beneficiarie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upport by age and gender ····· 198

Ⅰ. Introduction

I Introduction

1. This 8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encompasses the government's key policies for improving women's status, rights, and welfare,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ll its forms, and realizing gender equality, in particular those efforts designed to boost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their results, for the period from 2011 to July 2015.

2. Responding to social changes such as a low birthrate, aging population, and diversifying family structures, the government introduced policies including life-cycle career management support for working women, programs to prevent or mitigate women's career disruption, employment policy for women with disabilities and migrant women, and promotion of flexible work optio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trived to encourage a less burdensome environment for career women in terms of family and social life by reinforcing policies such as paternity leave and family-friendly management certification in order for work-life balance policy to be applied to the entire society, including men, instead of limiting it simply to women.

3. The 2014 restructuring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1995) into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shifted the focus of the law from women's development to the actualization of gender equality and equal participation/treatment of both genders, clearly defining the obligation of all citizens to strive to fully actualize everyone's right to live free from gender-based discrimination.

4. Also, in order to create a safe social environment for women, the protection of women's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was emphasized. In partic-

ular, the clause on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was abolished as a means to toughen the punishments for sex offenders, and victim protection policy was made more concrete by implementing regulations on preventing recidivism by sexual offenders, preventing the secondary victimization of childre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establishing comprehensive support centers for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5. This report is authored by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under the guid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comprehensive summary of women's policies implemented at both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local autonomous bodie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ort also reflects comments and feedback from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civil organizations such as women's and human rights groups.

Ⅱ.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during the Reporting Period

Ⅱ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during the Reporting Period

Part I

➲ Article 1

6. In regard to discriminati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in Section 1 of Article 11 that "All are equal before the law. No one should suffer discrimination based on their gender, religion, or social status in any part of their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ves," and defines further details through Section 1 of Article 31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Section 4 of Article 32 (Protection of female workers and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m), and Section 1 of Article 36 (Gender equality in marriage and family life). With a goal of securing equal rights for al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n place approximately 90 pieces of legislation prohibiting discrimination. In particular, the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remedial measures are prescribed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nd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7. Viewing 'discriminatory acts' as violating individuals' right to equalit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defines discrimination as "conduct favoring, excluding, segregating, or discriminating against particular individuals in regard to employment (recruitment, hiring, training, deployment, promotion, wage and other benefits, financial loans, retirement, layoff, etc.), provision and utilization of products, services, transportation, commercial facilities, land, and housing facilities, and education and training in educational facilities and vocational training organizations, based on gender,

religion, disability, age, social status, region of origin, country of origin, ethnicity, physical appearance, marital status, pregnancy or childbirth, familial situation, race, skin color, ideology or political orientation, expired criminal record, sexual orientation, or history of illness, but with no legitimate grounding, as well as sexual harassment" (revised on May 19, 2011).

8.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which prescribes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ncludes both direct discrimination in which "the employer applies separate conditions for employment or work or other discriminatory measures to employees based on gender, marital status, family status, or pregnancy or childbirth, with no legitimate grounding" and indirect discrimination in which "although the employer applies equal conditions for employment or work to employees, the imbalance in the ratio of male and female employees who meet such conditions is severe, resulting in disadvantages to one gender and therefore making it impossible to justify the conditions" (revised December 2007).

➲ Article 2

A. New legislation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ct

9. According to the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ct (enacted on September 15, 2011),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mid- to long-term government plans that have their basis in law, and policies that are anticipated to create a significant impact on gender equality are subject to gender impact assessment. The criteria for assessment include gender statistics, gender analysis, and post-assessment improvement measures. The law stipulates a list of organizations subject to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mandates the reflection of the results of assessment in policies, training of public officials, and support for gender impact assessment.

Child Support Enforcement Act

10.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Act (enacted on March 24, 2014) envisions the creation of the Child Support Agency, the role of which is to provide consultation and mediation for disadvantaged single-parent families in regards to ensuring that the responsible parent pay required child support, and a support system to offer legal assistance related to the enforcement and collection of child support. This law also introduced a temporary emergency child support system to allow minimum livelihood security for underage children.

Childcare Support Act

11. The Childcare Support Act (enacted on February 1, 2012) is designed to promote customized childcare services to meet the various needs of individual households, reduce the childcare burden of working parents, and respond flexibly to the needs of parents who prefer home-based childcare. The law is also intended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mid- to older-aged women with interrupted careers and to help bolster the childcare capacity of the underprivileged.

B. Revised laws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12. The 1995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was completely revised into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in May 2014. The purpose of this revision was to transfer the focus of the law from women's development to the practical actualization of gender equality in an effort to respond to the evolving policy environment,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women's issues and to mark a watershed point for the creation of a more gender-sensitive society. The law delineat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tate and its citizens in the actualization of gender equality and promotes gender equality in practical terms by shifting from the concept of

maternity protection to that of rights, encompassing both maternity and paternity rights. It also require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adopt gender mainstreaming measures within their administrative processes and newly establishes regulations on gender impact analysis, gender budgeting, gender sensitivity training, and the publication of the Korean Gender Equality Index.

13. It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women-friendly cities in order to allow the systematic and official implementation of women-friendly city projects and to encourage local policies more considerate of women. In terms of efforts to enhance policy implementation, the Gender Equality Committee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has been incepted to deliberate and coordinate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law. The number of committee members from the private sector has been expanded in order to reflect more diverse opinions in government policy. To implement women's policies in a more efficient manner, Women's Policy Officers, which had been placed solely within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ere renamed Gender Equality Policy Officers and installed in 17 other municipal and provincial government bodies as well.

Criminal Code

14.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Code on December 18, 2012, the definition of the victim of sexual offenses has been changed from 'girls and women' to 'individuals'; provisions defining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by the victim of sexual offenses, which included crimes of abduction, receipt, and concealment for the purpose of sexual harassment or sexual assault, have been eliminated, and the crime of adultery has been abolished on the grounds that it is ineffectual and compromises women's autonomy.

15. Through a revision on April 5, 2013, the Criminal Code has introduced the crime of human trafficking as part of its effort to implement the 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in-

cluded as an offense is trafficking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as well as for organ harvesting; and included a rule on globalism allowing non-Koreans with a history of committing similar crimes in other countries who are arrested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be subject to Korean laws.

Act on the Preven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16. The revision of this law on September 15, 2011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punishments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who fail to take necessary technological measures to immediately delete, prevent, or block the transmission of indecent materials involving minors on the Internet, with a goal of halting the online circulation of illegal materials. The law has also strengthened the punishment of sexual offenses against disabled minors and of those who sexually abuse minors who are under their protection and supervision or medical treatment. Another measure introduced in this law is a financial incentive for those who report prostitution involving minors.

17 The revision on February 1, 2012 expanded the range of sex crimes against minors to include indecent contact in public places, indecent conduct through ICT devices, and taking indecent photographs using cameras, etc. Furthermore, the period of prescription is exempted for sexual assaults committed against disabled girls under the age of 13 years old, and the provision of no prosecution without consent from the victim was abolished for the crime of indecent contact using power in the workplace.

18. The revision on December 18, 2012 deleted the provisions that stipulated no prosecu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victim in the case of crimes of indecent contact in public places and indecent conduct through online media, expanded the range of cases subject to exemption from the provision of the period of prescription, expanded the range of cases subject to exemption from the provision of reduced punishment for crimes committed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or drugs, and expanded

the sex offender community notification system for sex offenders against minors.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Assault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19.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Assault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was enacted on April 15, 2010 based on the now-abolished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with an aim to address protection and victim support separately from the previous legislation. This law prescribes the obligation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victims and related others, including education support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grated support centers for victims of sexual assault.

20. According to the revision made on March 30, 2011, the law now allows a legal basis for the provision of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at daycares; enables the family members of victims to receive counseling and treatment support at counseling centers and shelters for sexual assault victims, and allows victim support organizations to request police cooperation in order to assist the family members of victims in need of emergency rescue.

21. The revision on December 18, 2012 has expanded the range of organizations obliged to provide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to include daycares, schools of all levels, government organizations, local autonomous bodies, and public organizations. In addition, it has initiated a shelter system able to cater to diverse needs according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victims.

22. The revision on January 21, 2014 lays out a legal basis for the provision of integrated education on sexuality, sexual violence, prostitution, sexual harassment, and domestic violence based on a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The law has also strengthened the effectiveness of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by granting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authority to conduct an annual inspection of the results of education, take necessary measures (e.g. special education for administrators) directed at thos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failing to meet standards, publicize the results of inspection through the media, and request that the results of inspection be included in organizations' performance evaluation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23. This legislation, which was enacted on April 15, 2010, has been separated from the now-defunct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in order to address independently issues related to the punishment of sex offenders.

24. The law was revised on November 17, 2011 to separately categorize and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sexual assault agains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crease the penalty for those who rape girls under the age of 13 or women with disabilities to up to life in prison, increase the penalty if heads or employees of facilitie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and/or education of the disabled sexually abus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under their protection and exclude the period of prescription in cases of sexual assault against girls under the age of 13 and disabled women.

25. The revision on January 17, 2012 reinforced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exual assault by adding heads of daycare facilities and schools to the list of recipients of sex offender information.

26. The revision on December 18, 2012 deleted provisions on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by the victim, expanded the list of crimes exempted from the period of prescription, introduced the crime of infiltrating into public places for sexual purposes, allowed adult victims to hire a lawyer for legal assistance as an enhanced vic-

tim-protection measure, dictated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witness support facilities and witness assistants to protect and assist victims and witnesses who come to the court for testimony, introduced a statement-assistance system designed to help victims with communicative difficultie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ltered the definition of rape victims from ‘women’ to ‘individuals’, and extended the range of relatives subject to the law to include all ‘cohabiting relatives’.

27. With the revision on April 5, 2013, it was made explicit in the law that the procedures for the special cases prescribed in this law, including special cases regarding the period of prescription, are also applied to the Military Court Act and to service personnel.

28. The revision on December 30, 2014 mandated that offenders subject to community notification include their phone numbers as par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that they are required to submit so that they may be properly monitored if they change their place of residence and/or workplac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29. The revision on February 1, 2012 granted police officers the authority to enter and investigate the site of violence in order to enable more active police intervention in domestic violence cases.

30. The revision on July 30, 2013 mandated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mplement safet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workers at victim support organizations, facilitated the request by victim support organizations for police cooperation, and introduced a provision enabling the separation of the places of investigation for the victim/reporter and the offender.

31. The revision on January 21, 2014 allowed the provision of combined education on

domestic violence, sexual violence, prostitution, and sexual harassment based on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In compliance with the amended law,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an conduct an annual inspection of the outcomes of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mandate necessary measures (e.g. special education for administrators) for thos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failing to meet standards, and publicize the results of inspection through the media. As to the violation of the confidentiality provision, the ratio for fines as an alternative to imprisonment has been adjusted to a more appropriate ten million won per one year of imprisonmen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32. The revision on July 25, 2011 granted police officers the authority to impose a temporary separation of victims and offenders or a restraining order. It also introduced a system allowing victims or their legal agents to file for a victim protection order.

33. The revision on December 30, 2014 has added quasi-rape to the crime of domestic violence, included employees and heads of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mong those obliged to report domestic violence, and introduced measures to ensure the physical safety of victims who need to appear in court proceedings or who are exercising their child visitation rights.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king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34. The revision on February 1, 2012 stipulated that the owners of entertainment businesses must display in clearly obvious locations both a notice that prostitution-related debts are legally invalid and one featuring the telephone number for hotlines for prostituted victims. Any proprietors who fail to meet this requirement are subject to fines.

35. The revision on March 27, 2014 was mad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nti-prostitution policies through expanded follow-up monitoring of anti-prostitution education, designation of an official anti-prostitution week, and the strengthening of public awareness through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broadcast of anti-prostitution promotional videos. It also expanded support for prostituted victims and provided practical tools for independence and rehabilitation for prostituted victims by extending the maximum period of stay at shelters and enhancing support for schooling.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

36. The revision on February 1, 2012 was intended to complement the existing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ose who pursue international marriages and ensure the validity of marriage through the following measures: banning the illegal recruitment and brokerage of international marriages, especially involving those under the age of 18 years old, as well as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arrangement of group blind dates and overnight shared accommodation; requiring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brokerage service users and their partners be notarized in their home countries, including information on any history of mental illness, criminal records related to brokering and/or forcing prostitution, and any history of conviction of crimes carrying sentences equal to or more severe than imprisonment with no labor within the past ten years; prohibiting the display and/or advertisement by marriage brokers of content that may violate human rights; and strengthening th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law. With the 2013 revision, those who have violated criminal and/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the related foreign countries are banned from operating a marriage brokerage business. The 2014 revision includes the conduction of a survey of international marriages every three years and provides a legal basis for awareness-raising activities designed to prevent victimization in international marriages. The 2015 revision recommends the use of standard contracts for marriage

brokerage services and stipulates the inspec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gencies at least once per year.

Labor Standards Act

37. The revision on February 1, 2012 allowed female workers who face health risks such as miscarriage or stillbirth to divide their legal maternity leave between pre- and post-natal periods.

38. The revision on January 21, 2014 extended maternity leave from 90 days to 120 days for female workers who are pregnant with two or more fetuses. Paid maternity leave for such cases is extended from 60 to 75 days as well.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39. The revision on February 4, 2014 raised the age limit for childcare leave from a child under the age of three years old to under the age of nine. It is applied to adopted children as well.

40. The revision on February 1, 2012 was intended to encourage parents to take childcare leave : male workers with a new-born baby are allowed three to five days of paternity leave, with three of these days being paid. In the case of fixed-term and dispatched workers, the number of days of paternity leave they tak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eriod of their contract. According to this law, employers should allow reduced working hours and family care leave for workers during an infant care period unless it results in a serious interruption or harm to the operations of the business.

41. The revision on January 14, 2014 dictates that employers receive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along with their employees and enables the publication of a list of employers whose ratio of female to male employees has not met legal standards

three consecutive times and are thereby identified as having failed to implement affirmative action. As a measure to promote work-family balance and establish a favorable childcare environment for female workers, the age limit for qualification for childcare leave has been adjusted from six to eight years old, or through second grade in elementary school.

Act on Livelihood Stability and Memorial Services, etc. for Sexual Slavery Victim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42. The Act on Livelihood Stability and Memorial Services, etc. for Sexual Slavery Victim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revised on December 18, 2012)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state to provide victims of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with legal consultations and representation. Through a revision on May 28, 2013, central/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foundations are allowed to operate shelters for sexual slavery victims of the Japanese Imperial Army.

C. Policies

Symposiums and education for legal professionals

43.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tudy Group, a voluntary study group among Supreme Court Justices, holds a monthly meeting to examin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s. In 2013, the group, jointly with the Ministry of Justic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study group, held a symposium o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in South Korea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December 2014, the Supreme Cour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Study Group translated into Korean and published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 A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which was issued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Since 2011, the Korean Bar Association has conducted a symposium every December on how to implem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commendations in South Korea. The theme for the 2011 and 2012 symposiums wa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September 19, 2012,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vited legal professionals and officials from the Justice Ministry to a conference entitled *CEDAW Recommendations in the Areas of Legislation and Justice and How to Implement Them* as a means to review how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49th CEDAW session were being implemented in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sectors and to discuss the remaining agenda and avenues for implementation. Targeting female and trainee lawyers, the Korean Bar Association Female Lawyers Special Committee held a lecture entitled *Understanding the UN CEDAW and Prospects for Female Lawyers Aspiring to Work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December 10, 2012. This lecture was included within the mandatory training hours for lawyers assigned by the Attorney-At-Law Act.

➲ Article 3

Expansion of the Gender Impact Analysis program

44. Since its implementation in 2005, the number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areas for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have been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the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ct in 2011 expanded the coverage of policies subject to the law from existing programs to laws and plans, enabling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gender impact of government policies. Furthermore, the government has operated gender impact analysis centers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in order to help guide programs, laws, and plans. With active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average number of projects subject to gender impact analysis per organization grew from 1.6 in 2005 to 6.4 in 2009 and to 8.2 in 2010. When the law took effect in 2012, the number surged to 49 in 2012 and to 67 in 2013 (See Table 1).

Expansion of gender budgeting and introduction in local governments

45.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ncorporates a predictive analysis of the impacts of government budgets on women and men to ensure that both benefit equally from budgets. The National Finance Act of 2006 provided legal grounds for employing gender-sensitive budgeting, and the revision of this act in 2010 expanded the range of projects subject to gender budgeting to include projects operated with government funds and stipulated a statement be prepared regarding the expected effects of gender equality and performance objectives. The number of projects subject to gender budgeting has increased from 195 in 2010 to 343 in 2015, and the relevant budget has expanded by 18.748 trillion won (based on government estimates) from 7.314 trillion won to 26.626 billion won (6.9%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s for 2015) during the same period. In addition to this quantitative growth, the system has matured qualitatively as well. For exampl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now set gender equality goals and target outcomes, the link between gender budgeting and gender impact analysis has been strengthened by coordinating the criteria for selection of target projects, and systematic gender sensitivity education and a gender budgeting manual continue to be provided to those responsible for gender budgeting within each organization. To address the lack of an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gender budgeting, a permanent cooperative body was established in 2014 among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related ministries.

46. Based on the 2011 revision of the Local Finance Act which introduced gender-sensitive budgeting in local governments,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nducted pilot projects for gender budgeting among local autonomous bodies in 2012. In the same year, *The 2013 Gender Budget Statements*, the first of its kind for local governments, were submitted to local councils (11,803 projects with 12.599 trillion won total budget). The number of projects increased by 12.67% (1,496) and the amount of pertinent

budget by 16.95% (2.135 trillion won) in *The 2014 Gender Budget Statements* (Table 2).

Development of the Korean Gender Equality Index and enhancing balance across sectors

47. In 2009,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developed the Korean Gender Equality Index (KGEI) with an aim to assist the government's gender equality efforts by identifying the ongoing status of gender equality in the country and monitoring its progress. In 2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urther introduced the Regional Gender Equality Index to measure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by city and province and support the closure of gender gaps in vulnerable areas within a given region.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measurement and publication of the Korean Gender Equality Index. Based on this law, the index has been restructured into eight categories–economic activities, decision-making, education/vocational training, welfare, health, safety, family, and culture/information–and 23 indices. According to the 2014 Gender Equality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Gender Equality Index has continued to rise from 64.8 in 2009 to 66.5 in 2011, and 68.5 in 2013 (Table 3).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gender-sensitive development aid projects

48. In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upholds the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and the actualization of gender equality as a basic tenet of its overseas development aid and pursues gender sensitivity in such efforts through the pursuit of cross-sectional values, including gender equality, as a strategic goal.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directed 112 million US dollars to development aid programs related to gender equality, the scale of which is increasing along with the expansion of government ODA. The government has also contributed 4.7 million US dollars per year since 2011 to UN Women for the establishment of gender-responsive peace, leadership programs for

women in Africa, and gender-sensitive statistics. It also provides human resource support to the agency based o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igned in December 2011 (Table 4).

49. At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eld in November 2011 in Busan, the Korean government held a special meeting on gender equality jointly with the United States and UN Women to adopt the Busan Joint Action Plan for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 This action plan includes the Evidence and Data for Gender Equality (EDGE) initiative aimed at supporting the compilation and utilization of the gender-segregated data needed to create effective policies for economic empowerment and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women in developing countries.

50.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n May 2014. This plan includes support for expanded social participation by women in conflict and conflict-prone situations, as well as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support through development aid for female victims in conflict situations. Biannual monitoring is in place to oversee its implementation and progress.

➲ Article 4

Legal measures to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committees

51. The rate of women's participation in governmental committees under the ministr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refers to the level of participation by women in committees established by law or Presidential decree among all government committees. Women'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committees is important for the planning of gender-sensitive policies as part of the process of determining national polici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in August

2013 (enforced from February 2014),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recommended that the proportion of any particular gender among appointed members of government committees be limited to 60% and mandated that women's participation reach 40% by 2017. The women's participation rate in all 457 government committees of 44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s of 2014 was 31.7%, up by 4 percentage points compared to the prior year and up by 2.1 percentage points compared to the first half of 2014, surpassing 30% for the first time (Table 5).

52. In the case of a particular field with a significantly small pool of available female human resources, an exception to the previous rule can be allowed by a decision of the Women's Policy Coordination Meeting's working-level session, chaired by the Vic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ich is required to set a goal concerning the expansion of the female rate of participation on central government committees to be met by 2017 and to review the reasons underlying cases of not meeting the 40% target rate and make a determination. Meanwhil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operates with relevant ministries to develop female resources across all areas of society in order to recommend and support capable women for government committees.

Nomination quota for female politicians

53. The nomination quota for female politicians aims to exp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by setting a minimum proportion of female candidates for nomination by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Sections 3 and 4 of Article 47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August 2005, parties should nominate 50% or more female candidates in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proportional representative members and proportional local council members. They should recommend female candidates for 30% or more of all local constituencies in elections for local constituency-based National Assembly seats and local constituency-based council member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olitical Funds Act, including the pertinent Article 26, a subsidy system linked with the nomination of female candidates has

been introduced as an incentive to encourage parties to meet the female candidate quota.

54. In March 2010, Section 5 of Article 47 and Section 2 of Article 52 were introduced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order to mandate that parties nominate at least one female candidate for the *Gwangyeok* (major urban governments) or *Gicho* (small cities and provincial governments) councils in every local constituency (excluding *gun* districts). If they fail to do so, the party's entire candidate slate is nullified. As a result, a total of 854 of 1,825 female candidates (21.6%) were elected in the nationwide local elections in June 2014. This is an increase of 107 women (1.6 percentage points) from the 747 women (20.0%) in the fifth local elections in 2010 (Table 6). The proportion of female member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in 2012 marked 15.7%, up by 2 percentage points from the 13.7%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Table 7).

Capacity-building support for female human resources in the public sector

55.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established the Academy for Promising Women in 2013 with an aim to raise female leaders and high-level public officials. The initial target number for trainees at the Academy was 30,000 by 2017. For the 2013 pilot program, 2,127 women participated and reported a high satisfaction rate of 4.5 points out of 5.0. After the pilot period, the Academy boosted participation by women managers through collaboration with corporations,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and women's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through diversified programs including online content, on-site training, and weekend courses. As a result, 7,014 women managers (5,601 at on-site sessions and 1,413 through online courses) were trained in 2014. In 2015, 7,000 women are expected to receive training through the Academy.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local women, training center bases were established in six regions in 2014 and two additional centers are planned to open in 2015.

Affirmative action measures

56. In accordance with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ffirmative action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2006 with an aim of stimulating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To comply with this law, both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enterprises surpassing a defined number of employees should annually submit to the Minister of Labor and Employment statistics on male and female employees by work type and position and their implementation plan for affirmative action. Incentives are provided to companies that show positive results from their affirmative action measures. With the 2013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act, the proportion of female employees, which is the baselin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companies required to submit an implementation plan for affirmative action, has been raised from less than 60% of the industry average to less than 70%. The law has also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the publication of the list of companies failing to implement affirmative action measures. Since the introduction of affirmative action measures in 2006, the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in relevant public organizations has been on a consistent rise, from 30.1% in 2010 to 33.6% in 2013 and 35.7% in 2014, while the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in managerial positions has increased from 9.9% in 2010 to 11.6% in 2013 and 13.9% in 2014 (Table 8).

➲ Article 5

Abolition of sex-crime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by the victim

57. The Criminal Code,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 Crimes,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were all revised to abolish completely offenses being subject to complaint by the victim (amended on December 18, 2012 and taking effect on June 19, 2013). With the elimination of all provisions that stipulated prosecution only upon a direct complaint from the victim in sexual assault cases, law enforcement authorities no

longer require a complaint from a victim in order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sex criminals. This has addressed the issue of offenders pressuring victims to settle cases prior to prosecution, with the resulting distress to victims, as well as the issue of the discontinuation of investigations due to the victim dropping the case. When the abolition took effect in the second half of 2013, the number of complaints made by victims fell by about 300 cases compared to the first half, but the number of reports by victims rose by about 1,900 cases (Table 9).

58. According to crime statistics from the Prosecution Service, the number of reported sexual assault cases increased from 19,939 in 2010 to 22,034 in 2011 and 26,919 in 2013. One of major reasons behind this growth appears to b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hose reporting a crime thanks to expanded victim support services. The prosecution rate for sexual assault crimes rose from 42.9% in 2010 to 52% in 2013. As part of efforts to reduce secondary victimization in sexual violence cases, in 2014 media reporting guidelines for sexual violence cases were created and distributed to news agencies along with related education.

Promoting effective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59. The crime statistics provided by the Prosecution Service show that the number of domestic violence offenders subject to legal proceedings grew from 6,939 in 2010 to 19,561 in 2013.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those prosecuted for domestic violence increased from 1,038 to 2,959 and the number of cases referred to the family court rose from 1,095 to 4,706. All in all, the combined proportion of prosecuted cases and referrals to the family court grew from 30.7% in 2010 to 39.2% in 2012. The number of temporary emergency measures impos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surged from 14 cases in 2011 to 1,002 cases in 2013, which can be partly attributed to successful training and shifting perceptions of domestic violence among police officers.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implement practical and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victims from abusers by both revising and

newly enacting laws (See paragraphs 32 and 33 in Article 2).

60. A 2013 national survey on domestic violence identified a need for more active promotion of victim support services and related systems designed to raise public awareness. In response, in August 2014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designated the eighth day of every month as the *Bora* Day—"*bora*" means "look"—for carrying out anti-domestic violence campaigns.

Enhancing efforts to prevent recidivism in sexual offenses

61. The Act on Pharmacologic Treatment of Sex Offenders Sexual Impulses (enacted on July 23, 2010) was incepted to provide a legal foundation for pharmacological intervention among sex offenders who have assaulted a victim under the age of 16 years old and are believed to show a potential for recidivism. 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can be accompanied by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measures for up to 15 years. In 2008, a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center was established to manage approximately 100 sex offenders and was expanded in 2011 to accommodate 200 offenders. Intensive treatment centers have been installed in four prisons distributed across the country in order to provide intensive reform programs, including gender sensitivity educ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which could formerly only be obtained at a police station, can now be viewed on the Internet, and since January 2011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has been mailed out to residents in the community where an offender lives. Another measure introduced in July 2014 to prevent the repetition of crimes by sex offenders is an e-notification smartphone application service that provide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subject to electronic monitoring. Over the six months from July to December 2014,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application was downloaded over 458,000 times and accessed 2.658 million times.

Outcomes regarding support for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62. As to support for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operating integrated support centers for sexual assault victims and providing subsidies to private sexual/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In 2014, a total of 28,487 women received support services through integrated support centers for sexual assault victims, up by 3.8% from the year before. The number of occasions of service provision rose by 28.5% to 260,005 in 2013 (Table 10). Between 2010 and 2014, the number of integrated support centers for sexual assault victims increased from 27 to 34. The total number of counseling cases provided by the 18 Women's Hotline 1366 Centers across the nation went up by 45.1% from 183,240 in 2010 to 265,792 in 2014 (Table 11). The number of cases supported by private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services was 291,244 in 2014 (Table 12), along with 146,750 by sexual violence counseling services in the same year (Table 13). A total of 189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s and 93 shelters are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as of 2014. Compared to 2010, nine shelters for sexual violence victims and one shelter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have been added (Table 14). The number of cases supported by the free legal aid program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that began in 2003 rose from 4,303 in 2010 to 6,687 in 2014.

Prevention and protection efforts for migrant women afflicted by domestic violence

63. Since the 2006 establishment of Emergency Support Center for Migrant Women targeting migrant women victimized by domestic violence, the center has continued to expand its services. As of 2014, it offers services in 13 languages. Local centers have been established to improve on-site and family counseling. In April 2014, the *Danuri* Call Center (1577-1366) began operating as a one-stop support center that offers emergency counseling as well as information on living in Korea (Table 15). With the introduction of a housing support program in 2008, a total of 203 houses

are providing accommodation to 239 households and 565 victims and their families as of 2014. In shelters for 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afflicted by domestic violence, which provide safe housing, counseling, medical and legal services, and support for returning to home countries, the average number of residents nationwide rose from 17 in 2008 to 291 in 2014 (Table 16).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measures in regard to sexual assault against the disabled

64. In 2010, provisions on the period of prescription and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by the victim were abolished in regard to sexual assault against the disabled. Professional statement-validity analysts were introduced at integrated support centers for sexual abuse victims in 2011, but they were shortly replaced by statement assistants in 2014 in an effort to mediate for and assist disabled victims with communication difficulties in making statements about an assault. In 2011, six government ministries partnered to devise *Measures to Prevent Sexual Assault against the Disabled and Protect Victims* to strengthen the prohibitions on offenders entering the teaching profession, expand the definition of sexual assault, introduce a legal assistant system for disabled victims, implement measures to promote transparency in social welfare entities and facilities for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disabled individuals, and improve the monitoring of sexual assault.

Strengthening victim support by improving the investigation system for child sexual abuse

65. In 2011, a system was incepted to allow child/adolescent victims of sexual abuse to be accompanied by lawyers or public defenders if they are required to testify in court. Videotaping was mandated when interviewing a victim in order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stemming from repeated testimony in court proceedings. In 2014, a pilot cooperation program using video conferencing technology was installed between *Boramae* One-stop Support Center and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s part of an effort to minimize the secondary victimization of

victims due to superfluous repetition of statements provid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2011, the government attempted to prevent sex crimes and recidivism by reinforcing regulations on indecent materials involving children and adolescents, strengthening online service providers' obligation to detect and delete child pornographic materials circulating on their networks, and expanding the range of violations subject to sex offender registration, notification methods, and access to sex offender inform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statement assistance system on December 19, 2013, which allowed the participation of a professional assistant in investigative and court procedures to help victimized children with their statements, was a step toward the mitigation of secondary victimization while providing an opportunity to increase clarity and better pursue the truth.

Efforts to rais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 education, incentives, and promotion

66. While gender equality education is required for all, priority has been given to its provision to those in public positions, such as civil servants, teachers, and employees of public organizations. The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KIGEPE), which was launched in 2003 with a goal of providing systematic gender equality education to public officials, has continued to expand the original public servant focus of its programs to include more diverse audiences and develop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customized to the needs of varied groups. In 2010, the KIGEPE was approv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s a Distance Teacher Training Center to provide gender equality education to teachers. In 2014, the KIGEPE offered eight courses on gender equality and gender violence to a total of 2,203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To complement its offline education, the institute launched online courses in 2011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The number of those completing online courses has continued to rise, especially among members of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local autonomous bodies, public organizations, and teaching in-

stitutions, increasing from 44,725 in 2011 to 46,736 in 2012, 48,267 in 2013, and 52,285 in 2014.

67. In order to expand the educational platform for raising gender equality awareness among the entire population, the KIGEPE launched a website known as Gender Equality Media in March 2015 to provide mobile educational content through social networking services. This mobile content includes basic concepts and everyday examples of gender equality for a general population generally less exposed to gender equality education.

68.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rovides awards to gender-sensitive programs in the mass media in an effort to promote the values and best practices of gender equality among the general public. The award introduced a news reports category in 2013 in order to recognize gender-sensitive news reports and current affairs programs. Meanwhile, the 2008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defin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the elimination of gender-based discriminatory content in the media. Applying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guidelines on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mass media developed in 2001, the contents of television serials, news, current affairs shows, entertainment shows, and TV commercials on both terrestrial and cable television channels are continuously monitored.

Enhancing anti-sexual harassment measures at public organizations and workplaces

69. After Article 17-2 was introduced to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in 2006 prescribing the obligations of the heads of public organizations to implement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sexual harassment, the laws were revised in 2013 to mandate the announcement of the results of the related assessment and to enable requests for the punishment of violators and reflect this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organization if it is confirmed that there have been repeated offenses or attempts

to cover up sexual harassment cases within the organization. According to an analysis of anti-sexual harassment measures among public organizations between 2010 and 2013, 98.5% of 15,818 organizations in 2010, 98.9% of 15,650 in 2011, 99.6% of 15,932 in 2012, and 99.7% of 16,600 in 2013 conducted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for their employees. Along with this continued expansion of anti-sexual harassment education, the proportion of those maintaining a complaint deliberation committee (90.7% in 2013, up 0.7 percentage points from 2012) and that of those supporting designated sexual harassment counselors (94.7% in 2013, up 0.5 percentage points from 2012) have continued to rise, indicating the improved effectiveness of anti-sexual harassment measures.

70. Training has been delivered to sexual harassment counselors at public organizations, local autonomous bodies, Offices of Education, and schools (852 persons in total in 2013) with a goal to promote their expertise and practices in counseling, case investigation, and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prevent future harassmen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also been developing and distributing a diverse range of educational materials on an annual basis in order to assist public organizations to conduct more effective anti-sexual harassment education. One example is the production of a video in 2013 that shows potential situation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how to support victims and explain the appropriate roles of counselors.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made on June 17, 2014 dictates the provision of annual anti-sexual harassment education and hour-long minimum training sessions for workers at state-run organizations, with the first education session provided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y of appointment of new employees. It also mandates that organizations with reported cases of sexual harassment must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repeated occurrences.

7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has enhanced its efforts

to monitor areas prone to sexual harassment by conducting a survey on sexual harassment/assault at universities (2012), a survey of the human rights status of servicewomen (2012), and a survey of sexual harassment during medical examinations (2013). Based on the results, in 2013 the NHRCK recommended polices for preventing sexual harassment/assault and to enhance victim support in tertiary institutions to bo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lso in this same year, the NHRCK recommended comprehensive policy measure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servicewomen, including measure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In 2014, the human rights commission released a preventive video addressing sexual harassment in the military. Also in 2014, the NHRCK published and disseminated to medical institutions it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during the process of medical examinations.

72.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rovides free lecturers to small businesses, which may face a greater risk of sexual harassment but lack the resources to provide preventive education. In 2013, the ministry provided anti-sexual harassment education to 11,164 workers at 336 companies. In 2012, a smartphone application was developed as a hotline service through which users can make reports and receive counseling on sexual harassment. Anti-sexual harassment leaflets and videos were produced and disseminated as well. In 2013, the leaflet was translated into five languages and 200,000 copies were distributed to businesses with non-Korean female workers.

➲ Article 6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prostituted victims

73.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king decriminalizes prostituted victims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addition, if there is substantial cause to believe that a suspect or witness is a victim of prostitution, this fact should be immediately notified to her legal representative,

family, or lawyer so that necessary protective measures can be applied, including physical protection, confidential investigation, referral to family members, shelters or prostitution victim counseling centers. Both the court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can allow designated reporters and witnesses to be accompanied by trusted individuals upon their own request, that of their legal representatives, or of prosecutors.

74.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nti-prostitution act, victim support organizations have been launched in an effort to provide on-site counseling, emergency rescue, legal and medical support, and vocational training to help victims escape from prostitution and prevent their re-entry into the sex industry (Table 17). In order to combat adolescent prostitution in particular, one main center and ten regional centers were designated in 2011 for the provision of customized education on medical, legal, and rehabilitation support, as well as case management of prostituted adolescent victims. In 2012, a total of 355 adolescents received such education (Table 18). This education is offered in differentiated focused streams, such as medical/legal information, schooling, and independence, based on the needs of participants and facilitates case management as well. In 2011, an online peer counseling program was launched to approach youths who open chat rooms on what are known as “conditional dating” sites for attracting sex buyers and attempt to talk them out of prostitution. Counseling, medical and legal support services have continued to promote escape from prostitution and prevention of re-entry.

75. While the number of counseling cases contacted by counseling centers for prostituted victims increased from 46,748 in 2009 and 45,817 in 2010 to 57,261 in 2013, the total number of women who received further support decreased from 9,892 in 2009 to 7,360 in 2010 and 6,557 in 2013 (Table 19). The number of rescue support cases rose from 30,545 in 2009 to 38,976 in 2013 (Table 20). The budget assigned to the support of prostituted victims rose from 11.1 billion won in 2010 to 11.5 billion won in 2013, and the number of victim support organizations increased from 87

in 2010 to 91 in 2014.

Protection of non-Korean prostituted victims

76. Regarding non-Korean prostituted victims who came to Korea with an E-6 Visa to work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a system in 2013 to provide G-1 visas to victims for whom the Minister of Justice recognizes the need for humanitarian consideration. A G-1 visa can be granted to non-Koreans who are engaging in a remedial process for a human rights violation, such as forced prostitution, and approved as subjects for deliverance by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In such a case, a work permit is also granted. As of 2014, 1,658 (32.1%) of 5,162 E-6 visa holders stayed in the country illegally. On May 29 in 2015, the Korean government verified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which supplements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is is expected to extend the ability of the government to protect non-Korean prostituted women from falling victim to human trafficking.

Part II

➲ Article 7

Proportion of female public officials

77. The proportion of female public officials in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state/national public officials pertaining to the executive branch) has been on a constant rise. The figure grew by 2 percentage points from 46.1% in 2009 to 48.1% in 2013 (Table 21). The proportion of female public officials within local autonomous bodies has also continued to grow, from 32.0% in 2009 to 34.1% in 2013. The proportion of female administrators at Level 5 or higher among local public officials rose from 7.4% to 10.3% (Table 22).

Proportion of female judges and prosecutors

78. The proportion of female judges and prosecutors has continued to increase, rising from 20.9% in 2009 to 26.5% in 2013. While the figure is lower than that of female public servants in the executive branch, it is growing at a faster rate and is expected to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as well (Table 23).

Proportion of female public officials at Level 4 or higher

79. The proportion of female public officials in influential positions is significant i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gender-sensitive state policies. For this reason, the *First Plan to Expand the Proportion of Female Administrators* (2002-2006) aimed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female public officials at Level 5 or higher to 10%. The second plan (2007-2011) raised the target rank from Level 5 to Level 4 and aimed at 10% of female public officials at Level 4 or higher. While the original plan wa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female public officials at Level 4 or higher to 13% by 2016, related ministries established the *Plan to Improve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Public Sector in December 2013 as a means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o improve women's representation. Accordingly, the goal was adjusted to 15% by 2017, and its progress is being monitored biannually.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supports the initiative by including the status of women's representation in its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Thanks to such efforts, the proportion of female administrators in late 2013 had reached 9.9%, up by 1.5 percentage points from 2011 (Table 24).

Proportion of female employees at public organizations

80. Public organizations refer to companies and organizations establish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carry out governmental projects. Affirmative action measures have been continuously implemented in order to raise the proportion of female employees and administrators in public organizations.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finalized in May 2013 expanded the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subject to such measures from those with 50 or more employees to the full range public organizations. As a consequence, the proportion of female employees at public organizations rose from 32.3% in 2012 to 35.6% in 2014, while that of female administrators increased from 11.9% to 13.9% over the same period (Table 25). In 2014,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troduced its *Quota System for Female Managers at Public Organizations* and encouraged all public organizations to implement their own annual expansion plan to increase the ratio of director-level women managers and reflect the results in their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According to this quota plan, the proportion of female managers at public organizations will swell from 12.7% in 2013 to 18.6% by 2017. Also, the Strategy and Finance Ministry required public organizations to state the number of women employees by position level as part of their company information listed on ALIO, a public information site operated by the Ministry.

Proportion of female principals and vice-principals

81. City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have independently determined and implemented a target proportion of female principals and vice-principals for their schools since 2013. As a result of such measures, the proportion of female principals and vice-principals reached 29.4% as of April 2014, already surpassing that year's nationwide goal of 28.4%.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raised its initial target of 33.5% for 2017 to 36.0% in April 2015 and is encouraging city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 readjust their targets accordingly (Table 26).

Proportion of female professors at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82.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lan was first drafted in 2001 and included among its four main strategies the "maximized utilization of female resources." In particular, it was argued that the proportion of female professors at national/public universities should be elevated in order to create a more gender-sensitive culture in universities, address the serious gender imbalance among professors and promote the utilization of female human resources in tertiary education. A target quota for female professors at national/public universities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3;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female professors at national/public universities has gradually increased from 12.8% in 2009 to 13.7% in 2012, 14.1% in 2013, and 14.5% in 2014 (Table 27).

➲ Article 8

Female human resources in the diplomacy field

83. The proportion of women who pass the state exam for the selection of candidates for diplomatic positions, which is a major entry point for becoming public officials in the diplomacy field, has mounted rapidly: the figure increased from 55.2% in 2011 to 53.1% in 2012 and 59.5% in 2013. In 2014, 56.4% of successful exam

takers were women. Since 2010, the proportion of women who pass the diplomat selection exam has been hovering over 50%, which exceeds the rate observed for other state public official selection exams (legislative, judicial, and executive branches). The proportion of women among public officials in the diplomacy field increased from 28.9% in 2010 to 32.7% in 2014, and the figure has reached 47.9% for the headquarter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able 28). The proportion of women on government committees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continued to rise from 16% in 2011, reaching 29% as of April 2015.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84. Currently, 197 of 530 Koreans working 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 Secretariat, are women. In particular, positions including the deputy head of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and representative for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e currently being held by Korean women. Also, an international internship program for women professionals wa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Article 27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with four participants in 2002. By 2013, it had supported a total of 195 women, including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al conferences and internships. As to the Junior Professional Officer program designed to encourage the entrance of Koreans in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men have accounted for 75% of participants since its inception in 2010.

➲ Article 9

Not applicable.

Part III

➲ Article 10

Proportion of female students in tertiary education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ir majors

85. Thanks to policy efforts designed to elevate women's education rate and encourage their selection of majors outside those once considered traditional for women, women's participation in education is now similar to that of men. Since 2009, the college entrance rate among women has actually surpassed that of their male counterparts (Table 29). In addition, in order to promote the rate and quality of women's employment, efforts have continued to be extended to encourage female students to select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s, which are characterized by greater demand in the labor market. At medical and pharmaceutical schools, the proportion of female students went up from 5.8% in 2010 to 7.6% in 2013, and from 9.5% to 10.2% among engineering majors during the same period. Humanities majors, which traditionally showed a large proportion of female students, have seen fewer female students over time (Table 30).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of female students

86.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stalled in 2003 a program to support the career development of female students, with a goal of effectively addressing structural challenges faced by women in the labor market, such as gender discrimination and career disruption. This was designed to empower young women throughout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and support their mid- to long-term economic participation by enhancing gender awareness and through career coaching. In 2014, 40 universities were selected for the program and provided with support. As of 2014, a total of 60,780 female students had taken advantage of the program and the reported level of satisfaction among users had proven very high with 84.7 out of 100 points.

This program also offers, to the degree possible, career education and mentoring for female high school students.

87. Since 2002,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operated an online mentoring program in which female mentors share their knowledge and professionalism and provide support to young women developing careers in their areas of interest. This program, which is facilitated through online and offline meetings between mentors and mentees, offers a chance for women to expand their networks. In the period between 2002 and 2014, a total of 8,933 mentors and mentees were matched.

Enhancing gender equality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88. A range of efforts have continued to hone the effectivenes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Examples of such include strengthen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the curriculum, promoting expertise in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evaluating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terms of curriculum, programs on human rights sensitivity, leading a gender-sensitive life, gender equality in the family, and stories of gender equality in history have been conducted. As to the promotion of expertise in gender equality education, training has been offered to those in charge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related personnel. Gender equality education has been conducted on an annual basis by schools, based on the manual offered for education. Since 201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created gender equality learning materials for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by elementary school children (for lower-grade students, middle-grade students, higher-grade students, and teachers) and distributed them to gender equality pilot and leading schools.

Cultivation of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89.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Women Scientists and Technicians was established in 2002 with an aim to cultivate and promote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In particular, the *Second Basic Plan to Cultivate and Support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2009-2013) was implemented with a target of producing 1,000 female doctors of science and engineering every year (705 persons in 2007 to 1,155 persons in 2013); securing a minimum of 10% of the jobs in the science and engineering sector for women (9.8% in 2007 to 13% in 2012); and raising the proportion of female researcher-in-charge R&D projects to 10% (8.9% in 2007 to 11.6% in 2012).

90. As part of efforts to prevent the career disruption of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to expand female R&D human resources, related ministries—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devised measures to expand female R&D human resources in industry in November 2013. Based on these measures, they created a public-private cooperation body in March 2014 and took steps to promote an environment that encourages the employment of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by operating an employment forum. Thanks to these efforts, the overall proportion of female researchers expanded from 11.4% (26,955 persons) of total researchers (235,596 persons) in 2010 to 14.3% (43,300 persons) of the total (302,486 persons) in 2014. The number of research projects designed to support the return of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to the R&D sector increased from 39 in 2012 to 100 in 2014.

91. In 2014, the K-Girls' Day program was launched as part of efforts to address gender imbalances in the science and engineering sector. New female students in engineering-related disciplines in 2013 amounted to only 21.16%. The goal of this initiative is to stimulate a positive interest in engineering among female students and encourage

them to pursue careers in the field by providing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work taking place in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or universities one day per year. A total of 1,876 female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95 programs in 2014, and 1,852 in 109 programs in 2015 (Table 31). According to a 2015 participant satisfaction survey, the rate of positive perceptions of a science and engineering career rose by 27.3% compared to their perceptions prior to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able 32).

➲ Article 11

Establishment of policies to promote women's economic activities

92. Over the reporting period,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has gradually increased (Table 33). In 2013, the invigoration of women's employment was a key assignment for national affairs and in the *Three 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In 2014, further efforts were made to stimulate the employment of women,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Lifecycle Career Management Support Plan for Female Workers* and the *Follow-Up Plan for Women's Employment*. Consequently,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women aged 15 or older expanded from 10.3 million (49.4%) in 2010 to 11.2 million (51.3%) in 2014. During the same period, the employment rate for women increased from 47.8% to 49.5%, with an even greater expansion among women in their 30s from 53.7% to 56.3%. This result shows that more women are actively pursuing economic activities, propelled by the government's vigorous efforts to expand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Meanwhile, the proportion of female non-permanent workers decreased marginally from 27.1% in 2010 to 27% in 2014 (Table 34), while the gender wage gap slightly narrowed from 39.6 in 2010 to 36.6 in 2013.

93. The promotion of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was given greater emphasis within women's policies by the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reporting period.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basic plan to promote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the achievement of work-family balance. The *Fourth Basic Plan for Women's Policy* (2013-2017) includes detailed sub-plans in the following areas: expansion of support for young women's employment; enhancing the capacities of working women and expansion of support for women with interrupted careers; expansion and support for the economic participation of older women; establishment of an infrastructure to support women's employment; strengthening job security and employment welfare among irregular female workers; expanding affirmative action and monitoring to eradicate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promoting the entrepreneurial capacities of women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industries and support for the independence of underprivileged women; and expansion of support for women's business startups and female entrepreneurs. The *Second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with Interrupted Careers* (2015-2019) is focused on the robust implementation of support policies tailored to the different stages of women's lives and the substantiation of services. The *Fourth Basic Plan for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2008-2012) laid out five core strategies for expanding women's employment under the vision of the actualization of equal employment and work-family balance. Aiming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support for women's economic activities, these five strategies include: enhancing women's capacities and expanding jobs for women; establishing a childcare support system focused on working women; striking a work-home balance; preventing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and expanding the infrastructure for women's employment based on a social consensus.

Lifecycle-based support policies for working women

94. Under the goal of "A happy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the government provides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among working women based on the course

of their life. Available offerings include: 90 days of maternity leave which can be used both before and after birth; miscarriage or stillbirth leave; 3-5 days of paternity leave for men with a newborn baby (paid for the first three days); *Goun Mom* pregnancy/childbirth subsidy card to promote women's right to choose medical services; medical subsidy for couples with fertility difficulties; home-visit helpers for mothers and newborn babies; childcare leave for work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free medical checkups for all children under the age of six; flexible working hours during the period of infant care; medical subsidies for premature babies and babies with birth defects; subsidies for educational and daycare costs for all children 3-5 years old, regardless of household income; childcare subsidies for the at-home-care of children, regardless of household income; and childcare support for the children of working parents under the age of 13.

95. Cooperation from employers is essential if women are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work and childcare. The subsidy for substitute workers in conjunction with childcare support is based o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is intended to support employers who require the use of substitutes for employees taking childcare leave. The subsidy, whose goal is to encourage childcare leave by easing the consequent burden on employers, is provided to employers who hire a substitute worker from up to 30 days before the start of pre-natal or post-natal leave, including miscarriage/stillbirth leave and childcare leave, for 30 consecutive days or longer and continue to employ the original employee for 30 consecutive days or longer after she returns to work from the leave.

96. In an effort to minimize the job insecurity faced by irregular female workers in the cas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government has expanded its coverage. Employers who contract female employees for a set term of over one year receive 400,000 won per month per female employee for up to six months up to 2.4 million won. Employers who sign an employment contract with no set term are supported

for up to one year. The conditions have been further relaxed to extend the eligible period for rehiring to within 15 months after childbirth since January 2013 and to include employees on childcare leave—for those with children aged 15 months old or younger—since 2014. In 2013, a total of 885 million won was provided to 167 companies, and in 2014 1.25 billion won went out to 315 persons at 164 companies.

97. One of the most urgent needs that have emerged in efforts to prevent career disruption among women is increasing the number of workplace daycare facilities. In response, the government devised its *Measures to Promote Workplace Daycare Facilities* in 2013 through inter-ministerial collaboration. These measures include easing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workplace daycare facilities, subsidizing wages for daycare teachers, offering loans and subsidies for the construction of workplace daycare facilities, and expanding the subsidy for the operation of workplace daycare facilities at small to mid-sized companies. In 2012, the government began subsidizing up to 90% (1.5 billion won) of the establishment costs for communal workplace daycare facilities in industrial complexes. The number of daycares that benefited from this subsidy has expanded continually, from two in 2012 to ten in 2013 and 20 in 2014. The subsidy for the establishment of workplace daycare facilities increased from the provision of 6.634 billion won for 61 facilities in 2010 to 23.776 billion won for 93 facilities in 2014 (Table 35).

98. The government provides childcare professionals to assist working couples with children aged between 3 months and 12 years. The program consists of hourly service for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two and 13 and full-day service for babies aged 24 months old or younger. An institutional support service and a special support service for children with infectious diseases are also available. This latter program, in which caregivers are sent to homes, maximizes the sense of security and convenience for both working parents and their children and can be highly customized to the unique needs of service users. The number of users of this program has in-

creased constantly, from 44,000 in 2012 to 51,000 in 2013, and to 54,000 in 2014, a trend which is expected to continue.

Enhanced support for the employment of women with interrupted careers

99. Women's career interruption is one of the major causes for the gender wage gap.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in 2008 as a means to assist the employment of women who discontinued their careers due to childbirth and/or childcare, the government launched support centers for women with interrupted careers, Women's Reemployment Centers (*Saeil* Centers), to provide comprehensive employment support services including employment counseling, vocational training, information on job openings, and follow-up management after employment. Seventy-seven *Saeil* Centers were designated in 2009, and the total had risen to 140 by 2014. The government also initiated regional *Saeil* Support Headquarters in 2010 in an effort to provide employment services to women in areas lacking a local *Saeil* Center. There are nine such headquarters across the nation as of 2014. Furthermore, in areas with no *Saeil* Center, employment consultants are dispatched to organizations providing women's employment support services at Women's Centers. Online employment consultation service is also available at www.dream.go.kr.

100. In 2014, the types of *saeil* centers were divided into career development for well-educated jobseekers with a specialized education, independence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and rural services, and ten centers were accordingly operated on a pilot basis in order to improve the customization of services to the specialties and careers of women who had experienced career interruptions. Meanwhile, a total of 636 training courses have been offered tailored to the specific fields and abilities of jobseekers and in consideration of the demand for vocational training, the particular needs of companies, and job prospects among women. The employment rate of the participants in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t *Saeil* Centers increased from

54% in 2009 to 61% in the first half of 2014. Internship opportunities are available to job seekers so that they can better adapt to the workplace environment following employment. Companies are provided with subsidies as an incentive to offering internships. This internship support appears to have been effective, as indicated by the employment rate of *Saeil* interns in 2014 reaching 93% (Table 36).

Promoting childcare leave and male participation in childcare

101.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has been greatly expanded during the 8th reporting period, with one of the most prominent areas being childcare leave. First, the age of children eligible for parental childcare leave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from under three years old in 2006 to under seven years old in 2010, and then to under nine years old or below third grade in 2014. The maximum allowed length of leave is one year. The childcare leave benefit was shifted from a flat 500,000 won per month in 2007 to 40% of the regular pre-leave wage in 2011, with an upper limit of one million won and lower limit of 500,000 won. The number of those using the childcare leave has experienced constant growth from 21,185 in 2007 to 58,134 in 2011, 69,616 in 2013, and 76,833 in 2014 (Table 37). The total amount of childcare leave benefit paid out was 61 billion won in 2007, 276.2 billion won in 2011, 420.3 billion won in 2013, and 500.7 billion won in 2014.

102. Thanks to the expanded childcare leave scheme, the number of male workers taking childcare leave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from 310 in 2007 to 502 in 2009, 1,402 in 2011, 2,293 in 2013, and 3,421 in 2014 (Table 38). Accordingly, the total amount of childcare leave benefits provided rose from 740 million won in 2007 to 5.8 billion won in 2011, 11.7 billion won in 2013, and 17.9 billion won in 2014.

103. In October 2014, the Father's Month was introduced as part of efforts to encourage the use of childcare leave among men. If two parents use childcare leave con-

sequently one after another, the benefit for the first month of the leave of the parent who is using the latter leave is raised to 100% of the ordinary wage, up to 1.5 million won. Since this benefit is only offered when both parents take childcare leave, it serves as a strong incentive to men. In compliance with the revised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Local Public Officials Act, from 2015 male public officials can take childcare leave for up to three years as can their female counterparts.

104. Since 2011,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conducting a campaign to encourage male participation in childcare and reduce the burden on women. Along with TV ads, various programs have been launched in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to foster commitment and support among the fathers themselves, the colleagues of working fathers, their employers, and society as a whole.

Strengthened support for the employment of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and disabled women

105. In order to assist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s they settle in their communitie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diverse range of programs through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designed to aid them in creating social support networks. Services to promote their economic activities include education on Korean workplace culture, information on vocational training, job referrals, and job creation. In 2014, a total of 1,460 training and referral programs were offered to encourage the employ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such programs was 13,858. Through the *Saeil* Centers, 47 vocational training courses—as of 2015, courses include medical tourism coordinator and training programs for tour guides—customized to the qualifications of migrants and the needs of business are being offered. Internship programs for marriage migrants are also in place to assist with employment and adjustment to their new work; the number of women who participated in internships was 644 in 2014. Additionally,

women marriage migrants are given priority during the selection process for vocational training and reemployment applicants at the *Saeil* Centers and, in partnership with related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mployment support officers for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have been installed at employment support centers in communities with concentrations of such women in order to better respond to their employment needs; 31 centers are being operated as of 2015.

106. As of 2011, the rate of economic participation among disabled women is 23.9%, about half that of their male counterparts (49.19%). The proportion of employed disabled women relative to the total population of disabled women is 22.72%, again about half that of disabled men. Programs for disabled women are based on Article 22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Article 6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rticle 9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focus of programs in 2007 was on enhancing the capacities of disabled women through the promotion of emotional stability, social skills, and maternity protection.

107. Along with these capacity-building efforts, additional programs were implemented in 2009, including counseling support, specialized training for the educational, social, and economic empowerment of disabled women, and a pilot counseling program for the social engagement of disabled women. Vocational training, job referral, and follow-up management are also offered in partnership with community organizations. The numbers of disabled women who took advantage of counseling and capacity-building training through the *Eoulim* Centers for Disabled Women were 42,535 in 2010, 52,169 in 2011, 62,235 in 2012, 65,767 in 2013, and 72,036 in 2014. Demand-based training programs and support servic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will continue to be expanded as a means to increase opportunities for social engagement.

Efforts to expand work-family balance

108. The government has engaged in multi-faceted efforts to create a social environment conducive to work-life balance. It has been undertaking a re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order to address the current norm of extended working hours. The government also encourages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by providing incentives to family-friendly companies. Flexible work arrangements and part-time work are being expanded as alternatives to the labor market practice of long working hours and the orientation toward full-time workers. Policies to promote work-family balance are also being constantly expanded with a focus on the prevention of career disruption among working mothers.

109.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launched the Work-Life Balance Support Bureau in March 2015 to provide assertive support to the government's 24 major innovation projects. With the participation of relevant divisions in charge of policy for women, families, and work-life balance, the bureau is extending multidimensional efforts intended to develop a cooperative system for the effective allocation of roles between divisions and to allow a more family-friendly culture to take root among both employers and families. By holding regular meetings, relevant ministries—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are preparing joint action plans and promotional strategies, implementing joint promotional activities, and collaborating with the private sector for offering Family Day discounts and participating in awareness campaigns.

110. In cooperation with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demonstrated its commitment to work-family balance and the expansion of women's employment by launching the *Taskforce on Gender Parity and Empowerment of Women* in June 2014, spanning approximately 120 organizations from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creasing the number of businesses certified as family-friendly

111. The Best Family-Friendly Management Certification Program, initiated in 2008, is designed to grant certification to companies establishing best practices for a more family-friendly working environment: flextime, support for childcare and child education, support for workers, etc. The certification i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ased on its appraisal of companies and public organizations that apply for such certification. The number of certified companies has increased constantly from nine in 2008 to 14 in 2009 to 444 in 2014 (Table 39). As of December 2014, the total number of certified organizations/companies totals 956, with 223 big companies, 428 small to mid-sized companies, and 305 public organizations. The ministry also began offering consultation services in 2013 for companies intending to introduce such a scheme and also maintains a loan program for companies that seek to create a more women-friendly work environment.

112. The government is continuing its efforts to improve its life course based work-family balance support services through field monitoring designed to ensure proper implementation. In 2014, four major policy areas were identified: maternity protection, work-family balance, childcare support, and women's return to the labor market/work environment. Sixteen local autonomous bodies across the country conducted monitoring of these areas and improved their services by reflecting suggestions from the field, which included an expansion of the automatic transition from maternity leave to childcare leave without additional prior applications, earlier deployment of substitute workers and inclusion of information on maternity protection and work-family balance in the school curricula. In 2014, mobile applications were developed to exp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on government policies on work-family balance by life stage and by beneficiary.

Expansion of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 improved choices of work hours and places

113. The scheme for reduced working hours scheme during the intensive childcare period, introduced in 2008 based o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expanded the options available for workers with infants/toddlers. Through this system, workers are able to choose a reduction of their weekly working hours to 15-30 in place of taking childcare leav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file for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care period in 2012, if a worker applies for reduced working hours instead of childcare leave it must be granted unless a compelling reason can be demonstrated.

114. The Korean government is implementing polices to promote jobs that allow the selection of suitable working hours as a new employment paradigm. Characterized by shorter working hours, secure basic working conditions that meet the needs of workers, and a lack of discrimination, these jobs are expected to be beneficial both to job seekers and workers who are unavailable to work full-time due to diverse reasons such as childcare, preparation for retirement, and education, and to employers seeking to establish an effici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that responds to peak periods of demand. The government is providing labor cost subsidies and consultation services to companies allowing the selection of working hours together with awareness campaigns to thwart negative perceptions toward the system.

115.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Smartwork Centers and is working towar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promote their use. Smartwork Centers are remote working offices that enable employees to work in a location closer to their homes rather than commuting to their primary workplace. Two Smartwork Centers for the public sector opened in 2010 and the number increased to 16 in 2014.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ransforming the practice of long working hours and help prevent career disruption among working women with childcare duties.

Strengthened monitoring of discriminatory employment practices and corrective measures

116. As part of the policies to promote one of the government's core strategies of ensuring gender-discrimination free workplaces, gender-based discrimination has been banned and regular monitoring, corrective measures, and supervision have all been strengthened. Organizations and companies that violate this ban are now subject to a fine of 5 to 30 million won or criminal punishment. Labor inspectors at regional Offices of Employment and Labor conduct prevention and inspection activities to ensure compliance with regulations on gender discrimination. The main focus of inspection has been on retail businesses, hospitals, and manufacturing companies, all of which traditionally hire a large numbers of female workers. Inspection and supervision has been heightened for companies demonstrating poor working conditions, high turnover rates among female workers, and/or low usage of maternity protection systems. The number of identified violations to which corrective measures were applied was 6,486 in 2010, 4,418 in 2011, 6,521 in 2012, 4,729 in 2013, and 2,053 in 2014 (Table 40).

117.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prescribes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Through inspection and deliberation, the government can impose up to ten million won in fines on companies practicing wage discrimination, and up to five million won on those discriminating in terms of fringe benefits. Furthermore, constant monitoring is in place for discriminatory recruitment and hiring practices, such as applying a different wage system by gender.

➲ Article 12

Expanded health care for women in early pregnancy

118. Previously, the law failed to provide sufficient maternity protection to women in the early stages of pregnancy, allowing maternity leave only in the case of miscarriage or stillbirth after 16 weeks. However, 70-80% of natural miscarriages are known to occur within the first 16 weeks of pregnancy, underlining the importance of emotional and physical protection for women who experience miscarriage/stillbirth in these early stages of pregnancy.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February in 2012, maternity leave is now being offered to women experiencing a miscarriage or stillbirth prior to the 16th week of pregnancy as well (Clause 3 of Article 4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Subsidy for medical costs related to pregnancy and childbirth

119. An electronic voucher program for pregnancy was introduced on December 15, 2008 with an aim to reduce the burden of pregnancy/birth-related medical costs and to protect the health of mothers and fetuses. In January 2012, a new voucher program was introduced providing up to 1.2 million won in pregnancy and birth support to pregnant teenagers under the age of 19, many of whom may be likely to experience insufficient pregnancy care. In May 2015, the *Goun Mom* Card and *Mam-pyeon-han* Card were combined into a single card (*Gukmin-hangbok* Card) to improve user convenience. Since March 2013, the cards can be used in oriental medicinal clinics as well.

Home-visit helpers for mothers and newborns

120.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home-visit helper service was introduced in 2006 to improve the care available to mothers and newborns. Since July 2008, it has benefited those with household income of

50% or less of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moreover, medical checkups for infectious diseases among helpers were mandated in 2012 and the required items for inclusion in the checkups were stipulated.

Expansion of public OB/GYN clinics in areas that lack supporting resources

121. The reduction in the supportive infrastructure for birthing in the wake of the country's falling birth rate has been resulting in significant losses of time and money, not to mention increased health risks, among pregnant women in areas lacking OB/GYN clinics with birthing stations, since they are required to travel to larger cities to give birth. As a response, in 2011 the government began installing and providing facilities, equipment, and operational subsidies to OB/GYN clinics in 52 vulnerable areas. The number of such clinics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from three in 2011 to seven in 2012, eleven in 2013, and 25 in 2014.

Surveying the status of women's health

122.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s a statutory survey conducted in compliance with Article 16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Its primary goal is to produce the statistical data required for determining and evaluating the country's health policies, including the national Health Plans. The fifth survey (2010-2012) evolved noticeably in terms of the women's health section. First, questions related to women's health were transferred from the interview-based nutrition survey to the self-administered health survey due to the private nature of such information: menstruation, contraception, hormone treatments, birthing experience, etc. Second, questions about the causes of amenorrhea, regularity of menstruation, experience and number of abortions, methods and number of birthings, history of surgeries for women's diseases, and experience and period of breastfeeding were further included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women's health and diseases and to produce indices for the maternal health field.

Promotion of women's reproductive health

123. Since a medical subsidy for couples with fertility difficulties was introduced in 2006 to help address the country's low birth rate, multiple pregnancies have emerged as one of the major complications of *in vitro* fertilization. Guidelines for reducing the number of transferred embryos have been actively implemented since mid-2008, and as a result the rate of multiple implantations, especially the rate of the implantation of triplets or mor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complications, has declined. *The 2010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Results of National Support Program for Infertile Coupl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 suggested that such improvements can be partly attributed to the implementation of proper guidelines for refining the quality of surgical procedures. In June 2013,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ducted research designed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support program for infertile couples, including an ethical review of the number of transferred embryos in *in vitro* fertilization and the clarification of diagnosis standards.

Prevention of the spread of HIV/AIDS

124. The number of individuals reporting HIV/AIDS has increased annually. As of 2013, the number of HIV/AIDS patients stands at 8,662, comprising 7,978 men (92.1%) and 684 women (7.9%) (Table 42). The Prevention of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ct introduced an anonymous examination program in March 2008 in order to minimize the chance of infected individuals spreading the disease while unaware that they are infected and to address the avoidance of examination out of the fear of the exposure of personal identity. In addition, two examination and counseling centers have been established targeting homosexuals and non-Koreans with an aim to increase access to examinations. The number of cases of examinations and counseling has experienced constant growth (Table 43).

Efforts to promote women's mental health and prevent depression and suicide

125. According to the *2011 Epidemiological Survey of Mental Disorder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ly 15.3% of those with a history of mental illness have discussed the problem with psychiatrist, doctor other than a psychiatrist, and/or other mental health professional or received related treatment. Based on this finding, the ministry has reworked the relevant systems to allow any history of treatment for a mental illness to go unrecorded in medical insurance claim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to mental health clinics that do not involve the prescription of medicine. This change, which took effect in April 2013, is intended to promote early detection and effective treatment of mental illness. As to outpatient consultations that do not involve the prescription of medicine, psychiatrists are allowed make insurance claims under the general health consultation section instead of the mental illness section. According to the 2013 statistics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68.8% of those suffering depression are women (406,965 of 591,148 persons) and the gap between men and women has remained constant since 2009 (Table 44). In this regard, such measur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women's mental health by increasing access to medical services before problems exacerbate. Furthermore, the Act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and the Creation of a Culture of Respect for Life was established on March 31, 2012 in order to reinforce the infrastructure for suicide prevention, such as by establishing the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and expanding Mental Health Centers.

Expansion of the beneficiaries of long-term care service for aged women

126. As it can be assumed that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services for seniors who are unable to independently carry out activities of daily living due to old age, dementia, stroke, and other causes will continue to swell with the rapidly aging populati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revis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in July 2012. With this change, an additional 39,000 seniors became eligible for long-term care service and 16,000 more seniors in July 2013. Given that 70% of the beneficiaries are women, this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expect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health and wellbeing of elderly women (Table 45). Senior care and emergency safety helper service are also available for seniors living alone who are in great need of protection due to a lack of supportive social networks.

➲ Article 13

Expansion of welfare for single-parent households

127. The revision of the Single-parent Support Act converted the provision on welfare benefits for single-parent families from an optional regulation to an enforced one. Accordingly, welfare benefits for single-parent families became mandatory from 2012. While families with a child older than the age limit—18 years old or 22 years in the case of a student—for benefits were excluded from support in the past, other members of the family now can be subject to protection. If the son of a single-parent family returns to school after his mandatory military service, the age limit for protection, 18 years old or 23 years in the case of a student, is extended to include the duration of military service. Furthermore, a legal basis has been established for a welfare benefit account shielded from sequestration and for a matching account for adolescent single parents to support their independence. The student children of single parents covered by the Single-parent Support Act are entitled to high school tuition, school lunch program fees, free after-school program vouchers, and other educational costs. Childcare subsidies have also been provided to single parents with children younger than 13 years of age, and were raised from 50,000 won monthly in 2012 to 70,000 in 2013 and again to 100,000 in 2015 (Table 46).

Legal aid service to guarantee the collection of child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128.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provided legal aid service for the delivery of child support since 2007 with an aim to protect the rights to care of the children of single parents, reduce the childcare burden of single-parent households, and support their livelihoods. The service, which was commissioned to legal aid agencies from 2007 through March 2015, was provided to families of divorced or separated parents, unmarried single mothers or fathers, and grandparents, regardless of their level of income or assets. However, a survey of single-parent families in 2012 revealed that 83% of single parents did not receive any form of child support from their separated/divorced partners and 77.4% were not in actuality paid even after winning a lawsuit for entitlement to child support (Table 47).

129.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Act was established on March 24, 2014.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Child Support Agency was founded on March 25, 2015 to enforce the delivery of child support. Following a single application, the agency provides comprehensive services ranging from consultation on child support, mediation in child support negotiations, and collection of child support until the pertinent child reaches adulthood. The agency has been provided with administrative and punitive measures to enforce the delivery of child support, such as discovery of addresses of place of residence and workplace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credit-rating agencies.

Support for the independence of adolescent single parents

130. Since 2010, the government has provided 150,000 won monthly to households in which either the mother or father is 24 years of age or younger and in which the reported income is under 150%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To improve the childcare environments for adolescent single parents and assist with their continued education, an academic subsidy for the national qualification exam for high

school education is provided within the limit of 1.54 million won and a 100,000 won monthly independence support benefit is provided when a young parent is engaged in schooling, vocational training, or employment. There are 58 shelters for unmarried single mothers and children to provide housing support, birthing support, medical support, and childcare support for a limited period. As for those living in their own homes, there are 17 designated support centers across the nation. The number of households that made use of these services was 9,423 in 2012, 10,280 in 2013, and 10,721 in 2014.

Relaxing the requirements for full-time housewives on voluntary entry int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131. The income threshold for those eligible for voluntary entry int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uch as full-time housewives and students, was lowered in 2010 from 1.4 million won, which is the median income of the total subscriber population, to 0.99 million won, the median income of the self-employed and other subscriber groups. Accordingly, the lowest payment for voluntary subscribers was reduced from a monthly 126,000 won to 89,000 won, increasing its accessibility among full-time housewives and students (Table 48).

Provision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for low-income elderly women

132. Comprehensive senior care service including housekeeping, physical mobility support, and day-time care has been provided to seniors ineligible for long-term care service with an aim to ensure the provision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to low-income female seniors: 3.6 million beneficiaries in 2014. Short-term housekeeping service was added to basic senior care services in 2014 in order to make short-term housekeeping and activity support available for seniors living alone who experience temporary difficulties with physical mobility due to reasons such as fractures or surgeries and who do not have any familial care resources. Meanwhile, to enhance the retirement planning capacity of elderly women, a retirement plan program specifi-

cally for elderly women was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raise awareness regarding the need for appropriate planning and training for retirement.

Status of female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upport

133. The proportion of female general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upport stands at 56.5% (711,258 persons) of the total beneficiary population as of 2013 : 135,688 under the age of 20; 43,587 in their 20s; 36,521 in their 30s; 103,607 in their 40s; 90,864 in their 50s; 85,163 in their 60s; 133,932 in their 70s; and 81,896 in their 80s or older (Table 49).

➲ Article 14

Changes in policies for women in agricultural and fishery industries

134. With a vision of fostering female farmers imbued with creativity, expertise, and leadership, the third five-year plan to cultivate female farmers and fishers (2011-2015) placed its focus on providing customized support according to stage of life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for women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industries. Basic strategies include promoting the occupational status and rights of female farmers/fishers, building their capacity for professional agricultural management, cultivating leader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merging generation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emale farmers/fishers, and strengthening the related policy infrastructure.

Supporting the national pension payment for women in agricultural and fishery industries

135. The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the pension payment support program for farmers and fishers were revised in 2012 to expand its coverage to household members of the owners of agricultural/fishery business (female farmers and fishers). This change, which took effect in 2013, has in effect elevated the occupational status

of female farmers/fishers as co-owners of agricultural/fishery business and enabled both husbands and wives who jointly operate farms or fisheries to be the beneficiaries of pension payment support. In 2014, a total of 146,279 persons received support, up by 15% from 2013 (126,862 persons).

Operation of S*aeil* Centers for rural women

136. *Saeil* centers for rural women began to be designated in 2014 and were further expanded in 2015 with an aim to support female job seekers in rural areas through customized services for employment and business initiation. Two pilot centers opened in 2014, and in 2015 a total of five *saeil* centers for rural women will be in operation with two new centers opened and the existing *saeil* center in Chungcheong area converted into a center for rural women.

Building the capacities of women in agricultural and fishery industries

137. As a measure to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and fishery management, a 20% female quota is being applied when selecting beneficiaries for the agricultural/fishery emerging generation cultivation project. As a result, women accounted for 326 of 1,849 future farmers (17.6%) and 169 of 1,000 future fishers (16.9%) in 2014. There is continued support for pension payments for female farmers who are not the owners of agricultural business and more women are participating in producers' cooperatives. The proportions of women holding rank-and-file and executive positions in agricultural cooperatives grew to 29.7% and 3.6%, respectively, in 2014. The figures are 31.0% and 2.2% in the case of women in fishery cooperatives. In order to expand this further, the Fisheries Cooperatives Act has been revised to mandate that regional cooperatives designate at least one female director if the proportion of female members reaches 30% or more of total members.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is in the process of a revision to follow suit.

138. Efforts have also been made to raise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management training for farmers and fishers to 40%. Women's participation in public decision-making positions such as on committees related to agricultural policies has continued to rise, reaching 33.7% for the central government and 32.1% for local governments as of 2013. Under the goal of achieving 40%, committees with less than 20% female members are subject to intensive supervision.

Part IV

➲ Article 15

Not applicable.

➲ Article 16

Abolition of the crime of adultery bas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f its unconstitutionality

139. On February 26, 2015,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241 of the Criminal Code, which stipulates imprisonment for up to two years for those who commit adultery, i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that it restricts the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privac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y intervening in individuals' rights to sexual autonomy and the private realms of an individual's sex life.

Annexes

Annex Ⅰ Status of Implementation of CEDAW Recommendations

Article		Recommendations as to the 7th Report (2011)	Implementations
Part Ⅰ	Article 2 Policy Measures	Adequately disseminate the Convention's Optional Protocol, and views under the Protocol and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s among all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 ministries, parliamentarians, the judiciary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 Presented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October 2011) - Held an explanatory seminar on how to implement the observations (December 2011) - Created a report o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nd disseminated it to related organizations and public libraries (December 2012) - Created and disseminated a compendium of treaties on women, children, adolescents, and families (February 2013) - Awareness raised through a meeting of related ministrie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the Convention and women's human rights (December 2012); and - Held an annual joint meeting of related ministries to follow up on and accelerate the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 Created and disseminated a promotional leaflet on the major contents of the Convention and its Protocol
		Take urgent steps towards the adoption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 Ongoing research and review o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legislation on human rights is being conducted; devising ways to establish an Anti-Discrimination Act included in the *2nd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March 2012)

Article		Recommendations as to the 7th Report (2011)	Implementations
Part Ⅰ	Article 2 Policy Measures	- Clearly define the mandate, responsibilities, and allocation of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of the three portfolios (gender, youth and family)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well as institute a clear coordination mechanism for ensuring horizontal and vertical coherence in the work of the Ministry	- In accordance with the 2014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which will take effect in July 2015, a Gender Equality Committee Women's Policy Coordination Meeting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and vice-chaired by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ill be held on a regular basis. Gender equality officials or women's policy Units will be installed within each ministry to enhance the coordination of women's policies.
		-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o use gender-impact assessments, and provide advice on, coordinate and monitor gender-responsive budgeting	- Based on the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ct established in 2011, target policies have been expanded from programs to laws and plans beginning from 2012. - Systematic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a manual on gender-responsive budgeting are being provided to officials in charge of gender-responsive budgeting.
		- Reinstate the women's Units and gender equality officers	- Women's policy officers have been installed in core ministri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women's policies, including the ministries of Education, Strategy and Finance,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Health and Welfare
		- Ratify the treaties to whi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not yet a party, that i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 A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areful consideration is required since conditions in South Korea such as the social safety net and welfare systems have yet to mature to the point of readiness to embrace large-scale inflows of inexperienced workers and it is also currently incompatible with the country's work permit system for migrant workers. - International treaties are intricately linked to a country's social security, legal systems, employment systems, taxation,

Article		Recommendations as to the 7th Report (2011)	Implementations
	Article 2 Policy Measures		elections, education, and other areas. Ratification of such treaties needs to be thoroughly reviewed by the government and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Part Ⅰ	Article 3 Guarantee of Basic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Fully utilize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te Party'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and include information thereon in the next periodic report	-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was used as a major reference when establishing the *Fourth Basic Plan for Women's Policy* (2013-2017) and the *First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2015-2017).
		- Integrate a gender perspective and explicitly reflec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all efforts aimed at the achiev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include information thereon in the next periodic report	- Great efforts have been extended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 establishing Post-MDG development goals (a government taskforce chaired by the vice-minister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Post-2015 Korea forum were launched to collect opinions from the C.S.O., academics, and other diverse groups and to strengthen related partnerships) - Substantial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women's issues has been expanded
		- The Committee shares concern regarding the pressur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 facing to maintain its independence. It also reminds the State Party of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Commission's independence and urges strengthening the Commission's monitoring functions with a view to regaining credibility, public confidence, and legitimacy	- The positional level for eleven members has been raised; one new Unit has been installed; staffing has been increased by 21 persons (2010-2011)
	Article 4 Special Measures	- Strengthen efforts to increas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public lif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pecial measures with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No. 25 (2004) - General recommendation No. 25	- The 2nd *Plan (2007-2011) to Expand the Proportion of Female Administrators* aimed at 15 % of female public officials at Level 4 or higher by 2017 (ref. 79) - The level of efforts to designate women for positions of responsibility is currently

Article		Recommendations as to the 7th Report (2011)	Implementations
Part Ⅰ	Article 4 Special Measures	(2004)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strengthen efforts to implement policies and special measures to increas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public life - Consider using a range of possible measures (quotas, benchmarks, targets and incentives)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s 7, 8, 10, 11, 12 and14 of the Convention	being reflected in performance evalu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s (human resources management section) (March 2013) - Recommended designation of at least one female official for managerial and high-level positions in each ministry (March 2013) - Implemented a gender equality target in the public hiring of Level 5 and 7 officials for the diplomacy field - Implemented a gender equality target in the state exam for the selection of diplomat candidates (area of general diplomacy) that began in 2013 - Implemented the prior recommendation system for female manager candidates (2011-present) - Reflected the agenda of raisi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the *4th Basic Plan for Women's Policy* (2012)
	Article 5 Sex Role Stereotyping and Prejudice	- Encourage the reporting of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cases by ensuring that education professionals, healthcare providers and social workers are fully aware with relevant legal provisions, sensitized to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capable of complying with their obligation to report cases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provides legal basis for educating those persons with a reporting obligation,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has executed training for them on a regular basis.
		- Review and amend the Criminal Code and other relevant legislation to remove provisions which require adult victims of sexual violence to file a complaint in order to have their cases prosecuted	- Abolished provisions requiring adult victims to file a complaint to have their cases prosecuted; accordingly revised relevant laws including the Criminal Code, Special Cases Acts,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revised in December 2012 and taking effect in June 2013)
		- Take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women police officers	- Increased the proportion of female police officers from 5.8% in 2008 to 14 % in 2014 and currently adopting a hiring quota of 10 % by 2017

Article		Recommendations as to the 7th Report (2011)	Implementations
Part Ⅰ	Article 5 Sex Role Stereotyping and Prejudice	- Conduct awareness raising campaigns for protection and preven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 Incorporated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into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awareness education - Implemented mandatory education on sexual abuse and domestic violence (June 2013-present); installed support organizations for anti-sexual violence education (April 2013-present) - Expanded integrated support centers to protect victims of sexual abuse and domestic violence - Conducted a nationwide campaign to promote awareness of sexual abuse and domestic violence (November 2013)
		Adopt legal provisions explicitly criminalizing marital rape	- Existing laws punish rape against all human beings and, therefore, no plan to establish separate legislation is needed - A Constitutional Court case has established an explicit precedent for the criminality of marital rape, supplementing existing legislation (a decision released en banc in 2013)
		- Improve the method of the survey on violence against women 1) Ensure the survey to include indicators such as the prevalenc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2) Collect comprehensive data on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3) use such data as the basis for further comprehensive measures and targeted intervention in the next periodic report	- Based on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Assault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king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and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nducts surveys on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sexual trafficking / prostitution, and sexual assault every three year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ll forms violence against women - Conducted a survey on the status of violence against women (domestic and sexual abuse) in 2013 and based on the survey findings that there was insufficient awareness of victim support services,

Article		Recommendations as to the 7th Report (2011)	Implementations
Part Ⅰ	Article 5 Sex Role Stereotyping and Prejudice		campaigns to promote government services for victims were reinforced and the 8th day of each month has been designated as *Bora* Day since 2014 to promot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campaigns
		- Ensure that education professionals, health-care providers and social workers are fully familiar with relevant legal provisions, are sensitized to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are capable of complying with their obligation to report cases	- Article 35 (Education of Persons Liable to Repor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provides legal basis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s currently providing education to persons liable to report
	Article 6 Prostitution	- Amend relevant legislation to include trafficking as an offence, and ratify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proposal to ratify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May 29, 2015).
		- Take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Marriage Brokerage Control Act, in order to protect foreign women from exploitation and abuse	- Meetings were held to address problems related to the issuance of E-6 visas and to discuss measures to prosecute criminals and protect victims in relation to prostitution and human trafficking - Initiated a joint crackdown by related organizations against illicit activities by unlicensed marriage brokers (June 2013) - Revised and implemented laws to prevent victimization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marriage (September 2013)
		- Take further measures to protect and support women and girls who are victims of trafficking	- Counseling centers, shelters, and rehabilitation support centers (91 facilities as of 2015) are currently providing prostituted victims with counseling, legal/medical support, schooling, vocational training, and more

Article		Recommendations as to the 7th Report (2011)	Implementations
Part Ⅰ	Article 6 Prostitution	- Review its prostitution policy and relevant legislation with a view to decriminalizing women's involvement in prostitution and ensuring that women involved in the sex trade are not punished	- A review of whether or not to expand the range of prostituted victims in regard to the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is currently pending
		- Provide rehabilitation and economic empowerment programs for women and girls exploited in prostitution	- Provided consultations for independence and rehabilitation tailored to the nature of each victim support facility (2013 and 2014)
		- Take measures to establish an effective in situ monitoring mechanism of the establishments where foreign women work	- Continued monitoring and inspections of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employing foreign women - Established a standard for the restriction of the capacity to invite foreigners by entertainment agencies with a history of forced prostitution (August 2011)
Part Ⅱ	Article 7 Political and Public Life	- The Committee expresses its concern at the slow pace of progress in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despite measures in place to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ositions	- Continued to expand exclusive Units for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committees and working-level meetings have been held twice per year in regard to expanding women'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committees (ref. 51, 52) - The establishment of a yearly target for women's participation and appointment of female officials has been recommended - Established a cooperation system with relevant ministries to share information on the female human resources pool by sector - Evaluated and monitored the targets for expansion of female administrators in the public sector (2014-present) - The proportion of female faculty increased from 9.6% in 2003 to 13.7% in 2012 at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nd 16.8% in 2003 to 22.6% in 2012 at private universities (ref. 82)

Article		Recommendations as to the 7th Report (2011)	Implementations
Part Ⅱ	Article 9 Nationality	- Revise its legislation governing nationality with a view to remove all discriminatory provisions relating to the requirements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 There are no discriminatory provisions against women in the current legislation
Part Ⅲ	Article 10 Education	- Institute measures to revise textbooks used at all levels to introduce mandatory gender training for teachers	- Reviewed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ex education as well as curricula at elementary and secondary levels (March- July 2013) - Expanded the dissemination of 2009 revised textbooks with improved education on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 Recommended incorporat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into teacher qualification training and in-service training provided by local Offices of Education (2014-present) - Designated the Korean Institute of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KIGEPE) as a Long Distance Teacher Training Center (July 2010) - Developed and disseminated textbooks with an increased emphasis on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for 1st and 2nd grades in elementary school and 1st year of middle school (2013) - Continued monitoring to ensure gender equality incorporated across curricula
		- Actively encourage women and girls to choose non-traditional fields of study and professions	- Conducted a policy study on measures for careers and capacity development for the cultivation of female human resources in science (December 2012) - Developed an e-book guideline for assisting teachers to incorporate gender equality into structuring class content and curricula on careers and professions (2012)
		- Establish an effective monitoring mechanism to ensure that students are	- Developed and disseminated *Measures to Substantiate Sex Education at the*

Article		Recommendations as to the 7th Report (2011)	Implementations
Part Ⅲ	Article 10 Education	provided with the 10 hours compulsory course on sexual education and introduce a more comprehensive, age-appropriate program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for both girls and boys as a regular part of the curriculum at the basic and secondary levels of the education system	*Elementary and Secondary Levels* (September 2011) - 15 hours per year (extended from the previous 10 hours, September 2011) - Distributed *Guidelines on Sex Education at Schools*, with an aim to promote systematic sex education aligned with appropriate developmental stages (October 2011)
	Article 11 Employment	- Present disaggregated data on labor market indicators in the next periodic report	- See Article 11 (ref. 92) in the report for data such as the male and female populations over 15, male and female economic participation rate, male and female employment rate, male and female unemployment rate, number of male and female irregular workers, number of male and female fixed-term workers, number of male and female part-time workers, and number of male and female atypical workers
		- Diligently monitor the situation of women in the labor market and ensure enterprises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women to gain access to full-time and regular employment	- Monitoring and supervision of organizations and companies hiring a large number of female workers has continued in regard to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recruitment
		- Protect those in non-regular work by extending benefits, including paid maternity leave, to part-time and short-time workers	- Provided a job security subsidy during the infant-care period for irregular female workers - Established legal measures to protect maternity among irregular female workers
		- Enforce the provisions of the Equal Employment Act in regard to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 Conducted an annual inspection of companies hiring a large number of female workers for compliance with the Equal Employment Act - Defined by law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within the same sector - Imposed fines of up to ten million won for wage discrimination and up to five million won for discrimination in fringe benefits - Gender discrimination in recruitment and

Article		Recommendations as to the 7th Report (2011)	Implementations
Part Ⅲ	Article 11 Employment		employment including recruitment on different wage schemes for men and women has been monitored - Provided customized services at *Saeil* Centers to support the re-entry into the labor market of women with career interruption in order to address the career disruption of female workers, one of the major causes of the gender wage gap
		- Ensure that effective monitoring mechanisms are in place to achieve compliance with existing legislation, and that there are procedures in place for women to file complaints of violations of their labor rights, particularly in cases of sexual harassment	- Supervised and monitored organizations and companies, especially those hiring a significant number of female workers, in order to prevent violations of labor rights and sexual harassment - Installed a report system and equal employment counseling centers (15 nationwide) to enhance access to procedures for filing complaints about sexual harassment - Continued monitoring of gender discrimination with an aim to increase the employment of female workers
		- Domestic responsibilities are still primarily borne by women and the number of men taking parental leave is limited	- Introduced a special parental leave scheme (Father's Month) and increased the benefit for the first month of the leave to 100% of the ordinary wage for a parent who takes a parental leave immediately after their spouse took one for the same child - Revised both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Local Public Officials Act to enable male public officials to take parental leave at any point for up to three years, the same as can their female counterparts - Introduced the Father's Month and encouraged men to take parental leave
		- Promote co-responsibility in the domestic sphere and step up efforts to assist women and men to strike a bal	- Introduced the Best Family-Friendly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to recognize companies/organizations establish-

Article		Recommendations as to the 7th Report (2011)	Implementations
	Article 11 Employment	ance between family and employment responsibilities	ing best practices for work-family balance. The number of certified companies increased from 9 in 2008 to 444 in 2014 and laid out the certification criteria for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in order to promote family-friendly labor practices (2014) - Provided customized consultation on family-friendly programs for companies - Established the *Basic Plan for Work-Family Balance* (2013-2017) - Strengthened *Saeil* Centers to provide customized employment support for women with interrupted careers - Developed women-friendly vocational training to enable women to simultaneously carry out work, childcare, and training
Part Ⅲ	Article 12 Health	- Take necessary measures to address the deteriorating mental health situation, in particular depression; implement suicide prevention plans and provide information in the next periodic report on the policies and results achieved	- Changed the insurance claims system for psychiatrists (April 1, 2013) - Plans initiated to launch self-assessment of mental health by the course of life in order to improve detection of major mental health issues (2nd half of 2013) - Established a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suicide prevention; expanded the suicide prevention infrastructur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and expansion of Mental Health Centers - Built a foundation for management and suicide prevention among high-risk groups
		- Ensure that older women with low income levels have full access to health and social services	- Provided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 Provided comprehensiv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 Provided short-term housekeeping and activity support services (since March 2013) - Provided senior care and emergency care for seniors living alone - Continued to expand health and social services for low-income elderly women

Article		Recommendations as to the 7th Report (2011)	Implementations
Part Ⅲ	Article 12 Health	- Review the law relating to abortion with a view to removing the punitive provisions imposed on women who undergo an abortion - Provide quality services for the management of complications arising from unsafe abortion	- Provided abortion prevention education and campaigns; provides information on drug use during pregnancy - Identified policy needs through a national survey of public perceptions on abortion (2012)
	Article 13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 The limited number of state-run child care centers, the trend to privatize such facilities and the high fees charged by private child care centers, which make them inaccessible particularly to those in low income, female-headed households	- Continued to expand high-quality daycare services by increasing the number of state/public daycares and publishing a list of companies/organizations failing to fulfil the requirement for the installation of workplace daycare facilities (January 2013-present) - Supported working mothers by mandating private daycares give priority to the children of working couples (July 2012-present) - Helped reduce the childcare burden through daycare and childcare benefits - Daycare facilities for female-headed households have continued to be expanded
	Article 14 Rural Women	- Continue efforts to facilitate rural women's access to own land and property, as well a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and assistance - Implement gender-sensitive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programs, accelerate measures to promote farming among young women	- Established a basic plan to cultivate female farmers and fishers (2011-2015) along with yearly action plans - Provided support to promote the occupational status and rights of women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sectors - Expanded training for women to build leadership capacities and expertise for business management and support for business start-ups - Cultivated female community leaders and their future successors among women moving from cities to rural communities - Supported health management services and communal kitchens to reduce the childcare burden on female farmers and fishers - Enhanced the infrastructure for policy implementation

Article		Recommendations as to the 7th Report (2011)	Implementations
Part Ⅳ	Article 16 Marriage and Family Life	- Expedite efforts towards the withdrawal, within a concrete time frame, of the State party's reservation to article 16, paragraph 1 (g) of the Convention	- Under a positive review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EDAW committee,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and general principle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on treaties
		- Take necessary legislative measures to incorporate a rule of equal distribution of marital property upon divorce in the legislation, in line with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and with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No. 21 (1994); and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eliminate consideration of 'fault' in the determination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 While careful deliberation is required when instituting a rule of equal distribution of marital property upon divorce in the form of legislation, the courts currently include intangible assets such as pension and severance payments among the property subject to distribution - 'Fault' is not considered in current laws in the determination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Annex Ⅱ

| Table 1 | Number of organizations and projects subject to Gender Impact Analysis

(Unit : number)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No. of organizations	292	293	302	304	304
No. of projects	2,401	2,954	14,792	20,372	26,438
Avg. no. of projects per organization	8.2	10.1	49.0	67.0	87.0

Source : *The 2014 Report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Gender Impact Assessmen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 Table 2 | Implementation of gender budgeting by local governments

(Unit : number, 100 million won)

Year	2013		2014	
	No. of projects	Budget	No. of projects	Budget
Total	11,803	125,990	13,299	147,342
Programs for implementation of women's policies	3,244	49,948	8,108	69,701
Gender impact analysis projects	7,058	69,000	3,512	69,495
Special projects by local autonomous bodies	1,501	7,042	1,679	8,146

Source : *A Comprehensive Analysis of Gender Budget Statements of Local Government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 Table 3 | Korean Gender Equality Index

(Unit : complete gender equality = 100.0)

Year		2009	2010	2011	2012	2013
Total		64.8	66.0	66.5	67.3	68.5
Area	Family	55.7	58.1	59.7	60.9	62.7
	Welfare	65.6	67.1	67.6	69.3	69.0
	Health	95.5	96.0	96.5	96.5	96.4
	Safety	67.0	64.1	61.5	63.6	58.3
	Economic activity	66.5	67.9	69.4	70.1	70.7
	Decision-making	14.0	15.0	16.2	17.3	17.8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81.6	85.4	86.8	85.9	96.2
	Culture/information	83.3	84.2	84.0	84.4	85.1

Source : *The 2014 Gender Equality Report in South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 Table 4 | South Korea's contribution to UN Women

(Unit : Thousand US dollars)

Year	2011	2012	2013	2014
Contribution	4,887	4,756	7,939	5,088

Source : http ://www.unwomen.org

| Table 5 | Women'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committees

(Unit : %)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Proportion of designation of female members	22.3	24.8	25.7	27.7	31.7

Source : *The Survey of Women'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Committees in the Second Half of 201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 Table 6 | Women's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heads of government bodies, council members)

(Unit : persons, %)

Local Election	Election type		Total	Gender	
				Men	Women (%)
4th Local Elections (2006)	Total (percentage)		3,867	3,338	529(13.0)
	Major urban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hip		16	16	-
	Heads of local autonomous bodies (*gu, si, gun*)		230	227	3(1.0)
	Major urban city and provincial council members	Constituency-based	655	623	32(4.0)
		Proportional representation	78	21	57(73.0)
	Si, gun, gu council members	Constituency-based	2,513	2,403	110(4.0)
		Proportional representation	375	48	327(87.0)
5th Local Elections (2010)	Total (percentage)		3,893	3,148(80.0)	745(20.0)
	Major urban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hip		16	16	-
	Heads of local autonomous bodies (*gu, si, gun*)		228	222	6(2.6)
	Major urban city and provincial council members	Constituency-based	680	625	55(8.0)
		Proportional representation	81	23	58(71.0)

Local Election	Election type		Total	Gender	
				Men	Women (%)
	Si, gun, gu council members	Constituency-based	2,512	2,238	274(9.2)
		Proportional representation	376	24	352(93.0)
6th Local Elections (2014)	Total (percentage)		3,930	3,076	854(21.7)
	Major urban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hip		17	17	-
	Heads of local autonomous bodies (*gu, si, gun*)		226	217	9(4.0)
	Major urban city and provincial council members	Constituency-based	705	647	58(8.2)
		Proportional representation	84	29	55(65.5)
	Si, gun, gu council members	Constituency-based	2,519	2,150	369(14.6)
		Proportional representation	379	16	363(95.8)

Source : *A Conspectus of Nationwide Local Election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14)

| Table 7 | Proportion of fema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Unit : persons, %)

Election	Election title	Total	Gender	
			Men	Women (%)
18th Election (2008)	Total	299	258	41(13.0)
	Proportional representation	54	27	27(50.0)
	Local constituency-based	245	231	14(5.0)
19th Election (2012)	Total	300	253	47(15.7)
	Proportional representation	54	26	28(51.9)
	Local constituency-based	246	227	19(7.7)

Source : *A Conspectus of the Member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12)

| Table 8 | Proportion of female employees and managers in public organizations

(Unit : %)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Proportion of female employees	30.1	31.2	32.4	33.6	35.6
Proportion of female managers	9.9	10.5	11.0	11.6	13.9

Source : *Affirmative Action Measure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3). Data was compiled at the end of each year.

| Table 9 | Number of sexual abuse cases by type of report

(Unit : cases, %)

Year	Total	No. of offenders caught during commission	No. of reported cases			No. of unreported cases
			Total	Reported by the victim	No. of cases for which a complaint was filed	
1st half, 2011	10,194	1,288	6,861	4,185	1,760	2,045
2nd half, 2011	11,765	2,062	7,817	4,946	2,191	1,886
Rate of increase/ decrease	15.4	60.1	13.9	18.2	24.5	-7.8
1st half, 2012	9,514	1,728	6,410	4,105	1,820	1,376
Rate of increase/ decrease	-19.1	-16.2	-18.0	-17.0	-16.9	-27.0
2nd half, 2012	13,419	2,196	8,884	5,979	2,261	2,339
Rate of increase/ decrease	41.0	27.1	36.6	45.7	24.2	70.0
1sthalf, 2013	12,235	2,074	6,875	4,515	1,915	3,287
Rate of increase/ decrease rate	-8.8	-5.6	-22.6	-24.5	-15.3	40.5
2nd half, 2013	16,549	2,986	8,731	6,404	1,601	4,831
Rate of increase/ decrease rate	35.3	44.0	27.0	41.8	-16.4	47.0

Source : KIC News, No. 129, Spring, p. 19,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4)

| Table 10 | Services provided by integrated support centers for sexual abuse victims (total victims)

(Unit : persons, cases)

Year	Victimization type					Support type					
	Total	Sexual abuse	Domestic violence	Prostitution	Other	Total	Counseling	Medical	Investigation/legal support	Therapy	Social support, etc.
2012	22,333	16,735	3,023	219	2,356	153,425	69,723	31,706	25,454	17,047	9,495
2013	27,450	20,597	4,503	227	2,123	202,322	87,244	43,043	34,799	18,914	18,322
2014	28,487	20,693	5,517	239	2,038	260,005	92,610	62,584	47,488	31,577	22,253

Source : *The Annual Report on Women's Policie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Table 11 | Counseling provided by Women's Hotline 1366

(Unit : cases, %)

Year	Total	Domestic violence	Family issues	Spousal conflict	Divorce	Addiction	Sexual violence	Sexuality	Prostitution	Legal issues	Other
2010	183,240	60,489	9,743	9,411	5,688	3,228	8,688	5,695	1,497	4,561	74,240
	100(%)	33.0	5.3	5.1	3.1	1.8	4.7	3.1	0.8	2.5	40.5
2011	191,050	71,070	9,639	8,453	4,249	3,206	9,700	5,382	2,027	3,783	73,541
	100(%)	37.2	5.0	4.4	2.2	1.7	5.1	2.8	1.1	2.0	38.5
2012	223,109	94,985	10,181	8,780	4,453	2,741	12,155	3,883	2,324	4,488	79,118
	100(%)	43	5	4	2	1	5	2	1	2	36
2013	253,616	122,229	10,215	8,604	4,382	2,288	15,636	3,724	2,981	4,642	78,915
	100(%)	48.2	4.0	3.4	1.7	0.9	6.2	1.5	1.2	1.8	31.1
2014	265,792	137,560	8,498	6,773	4,125	2,324	17,007	1,789	3,070	4,470	80,176
	100(%)	51.8	3.2	2.5	1.6	0.9	6.4	0.7	1.2	1.7	30.2

Source : *For 2010-2013, The 2013 Annual Report on Women's Policies, p. 14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For 2014, *The 2014 Statistics of Services Provided by Support Organization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p. 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 Table 12 | Counseling services provided by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Unit : cases)

Year	No. of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No. of counseling cases		
		Total	Domestic violence	Other
2010	251	296,686	135,069	161,617
2011	244	288,751	126,240	162,511
2012	228	272,580	118,178	154,402
2013	196	260,452	125,694	134,758
2014	201	291,244	143,190	148,054

Source : *For 2010-2013, The 2013 Annual Report on Women's Policies, p. 14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for 2014, *The 2014 Statistics of Services Provided by Support Organization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p. 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 Table 13 | Number of counseling cases provided by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s

(Unit : cases)

Year	No. of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s	No. of counseling cases		
		Total	Sexual violence	Other
2010	160	138,900	68,530	70,370
2011	165	129,983	65,922	64,061
2012	172	144,692	77,099	67,593
2013	169	145,446	83,981	61,465
2014	154	146,750	89,975	56,775

Source : *The 2014 Annual Report on Women's Policies, p. 15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 Table 14 | Number of counseling centers and shelters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Counseling centers	Total	180	180	180	185	189
	Domestic violence	83	83	83	83	83
	Sexual violence	87	87	87	92	96
	Integrated support centers	10	10	10	10	10
Shelters	Total	83	84	86	89	97
	Domestic violence	64	65	66	65	69
	Sexual violence	19	19	20	24	28

Source : For 2006-2012, *The 2013 Annual Report on Women's Policies, p. 15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for 2013-201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Table 15 | Number of counseling cases serviced by the Emergency Support Center for Migrant Women and the *Danuri* Call Center

(Unit : cases)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Jan-Mar	Apr-Dec
Total	54,194	69,743	87,215	89,887	110,516	
Emergency Support Center for Migrant Women	54,194	58,044	66,890	68,524	18,010	86,358
Danuri Call Center	-	11,699	20,325	21,363	6,148	

Sourc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Table 16 | Number of residents at shelters for migrant women

(Unit : persons)

Year	Avg. number of residents	Yearly no. of those arriving at shelters			Yearly no. of those leaving			No. of residents at year-end		
		Total	Victims	Accom-panied children	Total	Victims	Accom-panied children	Total	Victims	Accom-panied children
2010	229	1,336	935	401	1,336	932	404	216	153	63
2011	232	1,142	761	381	1,146	773	373	212	141	71
2012	247	1,114	751	363	1,088	733	355	238	159	79
2013	277	1,254	819	435	1,278	844	434	265	169	96
2014	291	1,281	823	458	1,233	800	433	311	189	122

Sourc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Table 17 | Number of support organizations for prostituted victims by year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Total	87	90	88	88	91
Counseling centers	27	26	26	26	27
Support facilities for adolescents and adult Koreans	40	41	39	39	40
Support facilities for non-Koreans	1	1	1	1	1
Group homes	10	11	11	11	12
Rehabilitation support centers	8	9	9	9	9
Commissioned organizations for alternative education	1	2	2	2	2

Sourc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Note : Three existing support facilities for non-Korean women were integrated into Shelters for Migrant Women (2009). One facility was newly established in 2010.

| Table 18 | Education for adolescent victims of prostitution

(Unit : persons)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No. of participants	372	333	355	278	355

Source : *The Annual Report on Women's Policie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Table 19 | Counseling provided by counseling centers for prostituted victims

(Unit : cases, persons)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Counseling	No. of cases	45,817	49,366	57,172	57,261	61,896
	No. of persons	7,360	6,846	6,809	6,557	6,031

Sourc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ote : Contents of counseling included exit from prostitution, debt, violence and confinement, threat of sexual abuse, illness, trafficking, career, legal matters, and housing, among others.

| Table 20 | Rescue and support services

(Unit : cases)

Year	Total	Medical service	Legal service	Vocational training / schooling
2010	32,131	14,246	14,228	3,657
2011	36,755	17,491	15,048	4,216
2012	39,766	20,007	17,889	1,870
2013	38,976	18,833	17,087	3,056
2014	38,849	19,908	15,739	3,202

Source : *The White Book on Wome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5-2014)

| Table 21 | Proportion of female state-level public officials

(Unit : %)

Year	2009	2010	2011	2012	2013
Proportion of female state-level public officials	46.1	47.2	47.0	48.1	48.1

Source : Recreated based on the *Statistical Yearbook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09-2014)

| Table 22 | Proportion of female local-level public officials

(Unit : %)

Year	2009	2010	2011	2012	2013
Proportion of female local-level public officials	32.0	32.4	32.8	33.5	34.1
Proportion of female administrators at Level 5 or higher	7.4	8.0	8.6	9.3	10.3

Source : Recreated based on the *Statistical Yearbook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09-2014)

| Table 23 | Proportion of female judges and prosecutors

(Unit : %)

Year	2009	2010	2011	2012	2013
Proportion of female judges and prosecutors	20.9	22.6	24.3	25.7	26.5

Source : Recreated based on the *Statistical Yearbook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09-2014)

| Table 24 | Proportion of female administrators at Level 4 or higher

(Unit : %)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Target	7.9	10.0	9.1	9.9	10.9
Achieved	7.4	8.4	9.3	9.9	11.0

Source : *The Plan to Expand the Designation of Female Administrators in Level 4 or Higher in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This document is created in June of the year following the corresponding year.

| Table 25 | Proportion of female professionals and female workers in managerial positions

(Unit : persons, %)

Year	2009	2010	2011	2012	2013
Female workers	9,772	9,914	10,091	10,294	10,494
Female professionals and female workers in managerial positions[1)]	2,016	2,083	2,157	2,223	2,348
Proportion[2)]	20.6	21	21.4	21.6	22.4

Source :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Statistics Korea

Note : 1) Female workers classified as administrators or professionals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profession based on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2) Proportion of female professionals and female workers in managerial positions (%) = (No. of female professionals and female workers in managerial positions / No. of female workers) × 100%

| Table 26 | Female principals and vice-principals in public schools

(Unit : persons, %)

Year	Principals			Vice-principals			Total			
	Total	Women	Proportion (%)	Total	Women	Proportion (%)	Total	Women	Proportion (%)	Rate of increase/ decrease (% point)
2012	9,475	1,534	16.2	9,575	3,142	32.8	19,050	4,676	24.5	-
2013	9,494	1,671	17.6	9,583	3,517	36.7	19,066	5,188	27.2	2.7 ↑
2014	10,116	2,020	20.0	10,162	3,940	38.8	20,278	5,960	29.4	2.2 ↑

Source : Compiled from data from Offices of Education. Each data set is created in April of the year following the corresponding year.

| Table 27 | Proportion of female professors at universities

(Unit : %)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Total	19.0	19.5	20.2	20.8	21.5
National/public	13.2	13.4	13.7	14.1	14.5
Private	21.1	21.8	22.6	23.2	24.0

Source : 2014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Equality Measures and Their Progress in State Universities,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Data is created in April of the year following the corresponding year.

| Table 28 | Rate of advancement to the next school level

(Unit : %)

Year	Elementary school to middle school[1]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Men	Women	Men	Women
2010	99.9	99.9	99.7	99.7
2012	99.9	99.9	99.7	99.7
2013	99.9	99.9	99.7	99.7
2014	99.9	99.9	99.7	99.7
Year	High school to college/university[2]		University to higher institution	
	Men	Women	Men	Women
2010	77.6	80.5	7.1	5.5
2012	68.7	74.3	7.1	5.8
2013	67.4	74.5	7.6	6.0
2014	67.6	74.6	7.6	6.1

Source : An internal docum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Note : 1) Includes advancement to other schools

2) Colleges, universities, universities of education, polytechnic universities, etc.

| Table 29 |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Unit : persons)

Year	gender			
	No. and proportion of male workers		No. and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2010	1,488persons	71.13%	604persons	28.87%
2011	1,460persons	69.52%	640persons	30.48%
2012	1,469persons	67.85%	696persons	32.15%
2013	1,448persons	67.32%	703persons	32.68%
2014(Total)	1,439persons	67.27%	700persons	32.73%
2014(Headquarters)	566persons	52.07%	521persons	47.93%

Source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able 30 | Distribution of male/female students by major

(Unit : %)

Year	gender	Total	Humanities	Social sciences	Education	Engineering	Natural science	Medicine	Arts/sports
2005	Total	100.0 (1,859,639)	13.5	13.5	28.1	4.3	27.9	12.6	3.4
	Men	100.0 (1,175,401)	9.2	9.2	28.1	2.7	38.5	11.3	2.7
	Women	100.0 (684,238)	21.0	21.0	28.1	7.0	9.7	14.9	4.8
	Proportion of women	36.8	57.1	57.1	36.8	60.6	12.8	43.4	51.2
2010	Total	100.0 (2,028,841)	13.2	30.3	4.2	25.9	12.0	3.9	10.5
	Men	100.0 (1,250,655)	9.4	29.9	2.9	36.2	10.9	2.6	8.1
	Women	100.0 (778,186)	19.2	30.9	6.3	9.5	13.8	5.8	14.5
	Proportion of women	38.4	56.0	39.1	57.4	14.0	44.1	57.9	52.8
2013	Total	100.0 (2,120,296)	12.9	29.4	4.1	26.0	12.2	4.9	10.6
	Men	100.0 (1,284,593)	9.5	28.9	2.9	36.3	11.2	3.1	8.1
	Women	100.0 (835,703)	18.0	30.1	5.9	10.2	13.7	7.6	14.5
	Proportion of women	39.4	55.2	40.4	57.3	15.4	44.3	61.6	53.8

Source : The Statistical Yearbook on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Table 31 | Participation in the K-Girls' Day experience programs

(Unit : persons, %)

Year	School level	No. of applicants	No. of participants	Participation rate (%)
2014	Middle school students	326	326	100
	High school students	1,142	1,140	99.8
	University students	566	410	72.4
	Total	2,034	1,876	92
2015	Middle school students	381	378	99.2
	High school students	1,225	1,198	97.8
	University students	341	276	80.9
	Total	1,947	1,852	95.1

Source :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Table 32 | Perception of careers in science/engineering among participants in the K-Girls' Day experience programs

(Unit : persons, %)

Type	Before the program			After the program		
	Perception	No. of respondents	Proportion	Perception	No. of respondents	Proportion
How do you feel about having a job in the science/ engineering sector	Very positive	94	6.2	Very positive	254	16.2
	Positive	429	28.3	Positive	714	45.6
	Neutral	691	45.6	Neutral	478	30.5
	Negative	255	16.8	Negative	109	7
	Very negative	13	0.9	Very negative	10	0.6
	No response	34	2.2	No response	1	0.1
	Total	1,516	100	Total	1,516	100

Source :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Table 33 |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Unit : Thousand persons, KRW, %)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Type	Total	Men	Women	Total	Men	Women	Total	Men	Women	Total	Men	Women	Total	Men	Women
Population aged 15 or older	40,590	19,849	20,741	41,052	20,076	20,976	41,582	20,328	21,254	42,096	20,583	21,513	42,513	20,795	21,718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24,748	14,492	10,256	25,099	14,683	10,416	25,501	14,891	10,609	25,873	15,071	10,802	26,536	15,387	11,149
Economic participation rate	61.0	73.0	49.4	61.1	73.1	49.7	61.3	73.3	49.9	61.5	73.2	50.2	62.4	74.0	51.3
Employed	23,829	13,915	9,914	24,244	14,153	10,091	24,681	14,387	10,294	25,066	14,573	10,494	25,599	14,839	10,761
Unemployed	920	577	342	855	530	325	820	504	316	807	498	309	937	548	389
Unemployment rate	3.7	4.0	3.3	3.4	3.6	3.1	3.2	3.4	3.0	3.1	3.3	2.9	3.5	3.6	3.5
Employment rate	58.7	70.1	47.8	59.1	70.5	48.1	59.4	70.8	48.4	59.5	70.8	48.8	60.2	71.4	49.5

Source : 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Survey 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Table 34 | Proportion of irregular workers among salaried workers

(Unit : %)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Type	Total	Men	Women	Total	Men	Women	Total	Men	Women	Total	Men	Women	Total	Men	Women
Irregular workers	33.4	15.5	17.8	34.2	16	18.2	33.3	15.5	17.8	32.5	15.1	17.4	32.3	15.0	17.3
Fixed-term workers	14.6	7.1	7.5	15.2	7.2	8.0	15.3	7.4	7.9	15.1	7.3	7.8	14.6	7.1	7.5
Part-time workers	9.5	2.5	7	9.7	2.7	7	10.3	2.9	7.4	10.3	2.9	7.4	10.8	3.1	7.7
Atypical	13.4	7.1	6.3	13.9	7.2	6.7	12.8	6.8	6.1	12.2	6.5	5.7	11.2	5.9	5.3

Source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Table 35 | Wage subsidy for teachers at workplace daycare centers

(Unit : persons, million won)

Year	2009	2010	2011	2012	2013
No. of cases supported	751	1738	2,653	3,131	3,745
No. of persons supported	6,984	16,980	26,753	35,144	43,022
Amount	14,968	17,957	21,680	27,926	34,592

Source : *The 2014 Employment Insurance White Pape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Table 36 | Outcomes of support for the employment of women with interrupted careers

(Unit : persons, %)

Program	Year	No. of participants	No. of those who completed the program	No. of those employed after the program	Employment rate
Vocational training	2010	9,256	8,508	4,640	54.5
	2011	7,084	6,567	3,899	59.4
	2012	9,140	8,412	5,143	61.1
	2013	15,145	14,041	8,089	57.6
	1st half of 2014	15,094	14,124	2,393	61.0
Saeil internship	2010	4,948	4,308	3,952	91.7
	2011	4,262	3,518	3,390	96.4
	2012	5,363	4,637	4,414	95.2
	2013	6,146	5,363	5,189	96.8
	2014	6,083	5,030 (3,821 persons completed ; 1,234 persons in the process of being connected to jobs)	3,556	93.0

Source : *The 2014 Statistics on the Results of Saeil Center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2014 Employment Insurance White Pape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Table 37 | Financial support for substitute workers for maternity/parental leave

(Unit : persons, million won)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No. of participants	2,088	2,575	3,257	3,722	5,039
No. of participants, including duplication	2,089	2,592	3,300	3,798	5,209
Amount	4,805	6,221	7,968	9,225	13,627

Source : *The 2014 Employment Insurance White Pape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Table 38 | Parental care benefits provided by year

(Unit : persons, million won)

Year	No. of beneficiaries			Total amount
	Total	Men	Women	
2010	41,732	819	40,913	178,121
2011	58,134	1,402	56,732	276,261
2012	64,069	1,790	62,279	357,798
2013	69,616	2,293	67,323	420,248
2014	76,833	3,421	73,412	500,663

Source : *The 2014 Employment Insurance White Pape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ttp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 Table 39 | No. of companies/organizations granted Best Family-Friendly Management Certification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Total	23	86	101	279	444
Large companies	7	22	23	84	77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6	24	29	111	257
Public organizations	10	40	49	84	100

Source : Status of companies/organizations with Family-friendly Business Certificat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ttp ://ffm.mogef.go.kr)

| Table 40 | Results of monitoring and inspection of discriminatory employment practice

(Unit : cases)

Year	No. of companies/ organizations inspected	No. of companies/ organizations with violations	No. of cases subject to violation
2010	1,096	1,067	6,486
2011	985	853	4,418
2012	1,132	1,107	6,521
2013	920	898	4,729
2014	652	596	2,053

Source : *The Annual Report on Women's Policie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Table 41 | Length of post-miscarriage/stillbirth maternity leave by stage of pregnancy

Pregnancy stage		Length of leave
Addition since August 2012	11 weeks of pregnancy or earlier	Up to 5 days from the date of miscarriage / stillbirth
	12-15 weeks	Up to 10 days
Existing provision	16-21 weeks	Up to 30 days
	22-27 weeks	Up to 60 days
	28 weeks or later	Up to 90 days

Source : *The Guidebook on Support Policies : from Marriage to Pregnancy and Childc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 Table 42 | Status of new HIV/AIDS report

(Unit : persons)

Year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Total	797	768	773	888	868	1,013
Men	743	710	723	827	808	946
Women	54	58	50	61	60	67

Source : *The 2013 HIV/AIDS Status*,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The 2013 Health and Welfare White Pape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 Table 43 | Medical examination and counseling provided for HIV/AIDS

(Unit : cases)

Year		2009	2010	2011	2012	2013
Homosexuals	Counseling	3,022	2,991	4,248	3,980	3,989
	Examination	730	1,056	1,361	1,684	1,716
Non-Koreans	Counseling	627	702	758	1,067	1,115
	Examination	204	337	401	447	710

Source : *The 2013 Health and Welfare White Pape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 Table 44 | Number of patients with depression by gender

(Unit : persons, %)

Year	2009	2010	2011	2012	2013
Total	495,619	517,142	534,854	591,276	591,148
Men	345,131	360,130	370,562	408,194	406,965
	69.6	69.6	69.3	69.0	68.8
Women	150,488	157,012	164,292	183,082	184,183
	30.4	30.4	30.7	31.0	31.2

Source : *Statistics : Depress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 Table 45 | Number of long-term care beneficiaries by gender

(Unit : persons, %)

Year	2010	2011	2012	2013
Total	348,561	360,073	369,587	399,591
Men	104,199	106,004	107,387	114,510
Women	244,362	254,069	262,200	285,081
Women (%)	70.1	70.6	70.9	71.3

Source : *Long-term Care Beneficiaries by Gender*, Statistics Korea (2010-2012)

| Table 46 | Number of beneficiaries of subsidies for childcare and child education

(Unit : persons)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Total	117,000	129,471	174,140	182,134	179,481
Childcare benefits	66,122	71,493	72,536	73,020	70,916
Education subsidy	50,878	57,978	–	–	-
Additional childcare benefits	–	–	1,848	2,323	2,484
Subsidies for stationary items	–	–	99,486	106,511	105,752
Livelihood benefits	–	–	270	280	329

Source : *The Annual Report on Women's Policie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Table 47 | Number of cases supported for the enforcement of child support

(Unit : cases)

Year	No. of cases received	Legal aid				Other	Under processing
		Total	Claims for child support	Claims for child affiliation	No. of child support cases enforced		
2010	1,634	801	372	10	419	827	6
2011	2,653	942	405	25	512	1,701	10
2012	3,457	1,167	454	43	670	2,280	10
2013	4,034	1,403	456	39	908	2,609	22
2014	4,245	1,476	431	42	1,003	2,750	19

Source : *The 2013 Report on Women's Policies*, p. 20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Table 48 | Number of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Unit : persons, %)

Year	2011	2012	2013	2014
Total	19,885,911	20,329,060	20,744,780	21,125,135
Men	11,769,499(59.2)	11,824,156(58.2)	11,947,691(57.6)	12,046,242(57.0)
Women	8,116,412(40.8)	8,504,904(41.8)	8,797,089(42.4)	9,078,893(43.0)

Source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Table 49 | Beneficiarie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upport by age and gender

(Unit : persons, %)

Age	Total	Men	Women
19 years old or younger	251,834	128,346(51.0)	123,488(49.0)
20 ~ 29 years old	82,126	37,468(45.6)	44,658(54.4)
30 ~ 39 years old	57,065	23,379(41.0)	33,686(59.0)
40 ~ 49 years old	176,704	78,427(44.4)	98,277(55.6)
50 ~ 59 years old	216,495	123,100(56.9)	93,395(43.1)
60 ~ 69 years old	158,078	72,280(45.7)	85,798(54.3)
70 ~ 79 years old	192,221	61,278(31.9)	130,943(68.1)
80 years old or older	102,863	19,112(18.6)	83,751(81.4)
Total	1,237,386	543,390(43.9)	693,996(56.1)

Source : *The 2013 Status of the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Livelihood Support*, pp.32-3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alth and Welfare Database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117_11714), accessed on April 14, 2015.

제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발 행 일 | 2015년 7월
발 행 처 |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 화 | (02) 2100-6102
팩 스 | (02) 2100-6483
홈 페 이 지 | www.mogef.go.kr
인 쇄 처 | 중앙기획 · 인쇄 (02) 736-2866~7